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2-01

정책보고서 2018-40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국제 비교 연구: 문화와 세계화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00-00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국제비교 연구: 가족태도 및 세계화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최인선 연구원 노현주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김석호 교수	주윤정 선임연구원 조원광 객원연구원 차은지 연구원 이상지 연구원 김지윤 연구원 조하영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임동균 교수 김지영 교수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 연구소		박효민 연구교수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국제비교연구: 문화와 세계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국문요약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의 네 나라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왔지만 유사성 못지않게 차이도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나라가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클러스터라는 동질성과 동시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환으로 네 나라에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사회조사는 문화와 세계화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가치관, 종교,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보편성으로는 유교질서인 개인 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 윤리적 서열화와 조직화, 개인의 내적 도덕성과 수양에 초점을 둔 심리적 통제 규범, 유교적 의례와 윤리 철학에서의 도교, 불교, 민속신앙의 영향 등이 있다. 반면 근대화, 경제 발전 정도, 정치체제 등의 영향에 따라 세 국가의 유교, 가치관, 민속신앙 양상이 각기 다르게 변화하는 점을 동아시아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유교 문화권으로써 동아시아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동아시아’라는 공통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로 형성하기 위해 미래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세계화와 이주로 야기되는 문화적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화, 이주, 문화와 관련된 현상과 이론,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유와 정책을 검토했다. 세계화 이후 문화는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인구 접촉의 증가로 갈등을 야기하고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보편성의 창출이 강조된다. 새로운 보편성은 인류의 공통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상호 연결성의 인식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다문화 주의의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다양성이 등장했으며, 이에 대해 국내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문화다양성이 활용되고 있다.

3장에서는 가족, 소속 집단, 전통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서는 남성 가장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고,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다. 반면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버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였다.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집단 순응성과 내집단 우선성, 그리고 위계에 대한 복종 경향 모두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내집단 우선성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뚜렷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억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긍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전통 신앙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유일하게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만이 여전히 넓은 범위에서 실천되는 의례이다.

4장 한국사회의 세계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미디어콘텐츠 이용에 있어서는 중국 영화에 대한 소비율은 감소하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애니메이션 소비가 증가하였다.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도 자체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국제문제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텔레비전 등의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중요도가 올라갔다. 전반적인 영어 활용능력은 2008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장 이주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태도를 여행경험, 외국인 지인의 유무, 외국인 수용 의향,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의견, 국수주의적 태도,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라는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외국 여행을 통해 외국문화에 노출되는 경험과 외국인과 알고 지내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응답자는 동네이웃으로 외국인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였다. 세계화가 한국 경제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With the recent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various values and attitudes towards globalization and immigration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society by analyzing data from EASS (East Asian Social Survey). This study particularly explores changes in attitudes and values due to globalization in the case of Korean nationals over the past decade. Accordingly, the data for the analysis is based on 2008, 2018 Globalization and Culture in East Asia Modules which include topics related to cultural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in East Asia, the perception of fortune, and attitudes toward Confucian virtues, exposure to foreign culture, social distance, foreign workers and interracial marriage, nationalism, and social networking.

Chapter 1 examine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values, religions, and folk beliefs of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culture. Through an analysis of researches that have sought to find clusters of world cultures, what elements are common to the three countries in terms of Confucianism will be explored. Furthermore, some limitations of perspective on Confucian cultural area and particularity of each country will be analyzed as well. Lastly, there will be a need for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potential conflicts and tensions that exist in the region because the common values, beliefs, or identities that are the foundation on which the three countries can cooperate and collaborate are poor.

Chapter 2 focuses on cultural changes that are caused by globalization and migration. In particular, the changes made by the physical contact of migration and the contact generated by the media will be examined separately. Physical migration and globalization that the world connects by the networks may seem like a same phenomenon, but research analysis needs to

be done separately. Human contact, which is a direct physical contact, is a kind of biological contact that creates mutual affect. On the other hand, conflicts are increasing as the interactions between humans grow. Besides, indirect contact such as capital and media is not necessarily unidirectional, and it causes cultural hybridity. Also, existing conflicts can be expressed more extensively through media.

Chapter 3 examines how Koreans' attitudes and values for family, affiliation, and traditional beliefs have changed over the past decade. This chapter employs a quantitative analysis of values and attitudes on group conformity, prioritizing in-group, and hierarchy and traditional belief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conducted in the 2008, 2016, and 2018.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analysis indicate weakening family cohesion and increasing conflicts within family, between group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generational conflicts and requir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In chapter 4,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Koreans regarding the globalization occurring in each field of society. It was in the 1990s that everyone experienced active globalization in everyday life. Globalization in the industrial aspect has been achieved and the movements of capital and labor power has been active around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broadcasting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together cultural globalization, in which various media could be consumed internationally at very low or almost zero cost. As a result, opportunities for contact with different cultures have increased. In the case of Korea, western cultures of the Americas and Europe have been introduced more easily. At the same time, cultural exchanges have started also with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been closed for political

reasons. On the other hand, as the Korean society underwent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the discourse on so - called "international standards" was strengthened in all sectors of society. This increased the social need dramatically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issues, the use of English as a common language, education and training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investment of social resourc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is chapter, we will examine how Korean society has changed over the last 10 years, focusing on the questions that enable us to compare the changes after the globalization.

Chapter 5 examines the attitudes of Korean towards increasing migration and cultural proliferation. As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s in Korea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is very diverse and the perception of foreigners' size, status, and their impact on Korean society is different. This chapter analyzed the attitudes of Korean on the appropriate foreigner scale,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based on data from KGSS conducted in the 2008 and 2018. Over the past decade, the direct contact with foreign culture and foreigners has increased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 globalization trend has also improv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ome Koreans have still negative attitude toward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and increasing marriage migra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oreign policy considering these perceptions and attitudes.

정책 제안

- 1)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국가 국제/시계열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의 안정적 축적 및 이를 활용한 국제 네트워크 심층연구 수행 지원
- 2) 다문화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의 포용사회적 정책 프레임 구성 및 세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3) 가족의 돌봄 및 노후보장 기능 약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가족 내 건강한 합의와 소통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
- 4) 집단 및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환경 조성 및 세대 간 이해 강화 교류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등을 포함한 사회갈등 조정 교육 지원
- 5)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직, 간접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층별 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
- 6) 세계화 적응성 불평등을 해소를 위한 공적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의 입시 교육을 넘어선 실질적인 영어 활용능력 증진 교육
- 7)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내국인 고용시장 영향 평가 및 외국인 노동력과의 경쟁 위치에 있는 내국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직 및 생활지원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조사의 설계 7

1. EASS의 조직 체계7

2. EASS 2008년과 2018년 조사내용7

II.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가치관과 종교를 중심으로 11

제1절 '동아시아의 문화'의 가능성 13

제2절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종교: 보편성 15

1. 세계 문화권 구분에 있어 동아시아의 위치15

2. 유교의 문제19

가. 유교적 문화권에서 유교의 기능: 서열화와 조직화19

나. 개인의 내적 욕구 통제 체계22

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설명이 가지는 문제들25

3. 기타 요소들26

가. 불교, 도교, 애니미즘 등의 영향26

나. 민족개념27

제3절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종교: 특수성과 차별성 28

1. 유교의 문제28

가. 유교의 영향력의 강도28

나. 가족주의와 가치관의 문제31

2. 기타 종교와 민속신앙33

제4절 소 결	36
---------------	----

III. 동아시아의 세계화, 이주 그리고 문화 39

제1절 서 론	41
---------------	----

제2절 세계화와 이주 : 인구이동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	43
--------------------------------------	----

1. 이주와 문화의 변화	43
---------------------	----

가. 다문화 사회의 도래	43
---------------------	----

나. 다문화주의의 등장	44
--------------------	----

2. 다문화주의의 비판과 혐오	47
------------------------	----

가. 다문화주의의 위기	47
--------------------	----

나. 혐오의 증가와 신인종주의	49
------------------------	----

제3절 세계화와 미디어: 자본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매체적 접촉	52
---	----

1. 문화제국주의와 문화혼종성	52
------------------------	----

2. 동아시아의 문화접촉과 인터넷 민족주의	55
-------------------------------	----

제4절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다양성	57
-------------------------	----

1. 세계시민주의	58
-----------------	----

2.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60
------------------------	----

제5절 소 결	62
---------------	----

IV. 가족과 소속 집단 그리고 전통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 65

제1절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	67
-----------------------	----

제2절 가치관 범주별 문항과 분석 방법	69
-----------------------------	----

1. 가족에 대한 가치관	69
---------------------	----

2. 소속집단에 대한 가치관	70
-----------------------	----

3. 전통신앙에 대한 가치관	71
-----------------------	----

제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	72
1.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72
2.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	77
제4절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	83
1. 집단에 대한 순응성	84
2. 내집단 우선성	86
3. 위계에 대한 태도	90
제5절 전통 신앙에 대한 가치관	95
제6절 가치관 특징과 변화의 정책적 함의	99

V. 문화교류와 세계화 10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5
제2절 자료 분석 결과	107
1. 미디어 콘텐츠 이용	107
가. 일본 애니메이션	108
나. 중국 영화	109
다. 한국 드라마	111
2. 국제문제	112
가. 국제문제관심도	112
나.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	114
3. 영어 활용능력	123
가. 전반적 영어 활용능력	123
나. 읽기	127
다. 말하기	128
라. 쓰기	129

4. 해외 교육 훈련 경험	130
----------------------	-----

제3절 소결 132

1. 한국사회 세계화의 모습	132
2. 정책적 제언	133

VI. 이주와 문화의 확산 135

제1절 서론 137

1. 문제제기	137
2.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응답 조정	139

제2절 주요 분석 결과 141

1. 문화 노출 경험과 문화적 접촉 현황	141
가. 여행 경험 여부로 살펴본 문화 노출 경험	141
나. 알고 지내는 외국인 유무로 살펴본 문화 접촉 현황	142
2. 외국인 지위별 수용 의향	144
3.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	149
4. 국수주의적 인식	153
5.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157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161

VII. 결론 165

■ 참고문헌	171
--------------	-----

Ⅰ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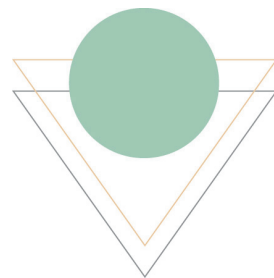
〈표 1-1〉 EASS 주제 모듈, 2006-2020	5
〈표 1-2〉 설문문항의 설계 및 주요내용	8
〈표 2-1〉 한국, 일본, 대만의 가족구조와 가산에 대한 개념: 장덕진(2001)의 표를 일부 발췌	33
〈표 2-2〉 한중일 무당 변화의 양상: 조정현 (2011)에서 인용	36
〈표 4-1〉 가족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69
〈표 4-2〉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70
〈표 4-3〉 전통 신앙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71
〈표 4-4〉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74
〈표 4-5〉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76
〈표 4-6〉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79
〈표 4-7〉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81
〈표 4-8〉 사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친척/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88
〈표 4-9〉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89
〈표 4-10〉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92
〈표 4-11〉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93
〈표 4-12〉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과 흉일 고려 여부	98
〈표 5-1〉 일본 애니메이션 관람 비율	108
〈표 5-2〉 중국 영화 관람 비율	110
〈표 5-3〉 한국 드라마 관람 비율	112
〈표 5-4〉 국제문제 논의 비율	114
〈표 5-5〉 국제뉴스를 신문으로 접하는 비율	116
〈표 5-6〉 국제뉴스를 라디오로 접하는 비율	117
〈표 5-7〉 국제뉴스를 텔레비전으로 접하는 비율	118
〈표 5-8〉 국제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하는 비율	120
〈표 5-9〉 국제뉴스를 다른사람으로부터 접하는 비율	122
〈표 5-10〉 국제뉴스를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접하는 비율	123
〈표 5-11〉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종합	126
〈표 5-12〉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자신문 읽기	128
〈표 5-13〉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권 사람과의 대화	129
〈표 5-14〉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로 편지 쓰기	130
〈표 5-15〉 해외에서 5일 이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	131
〈표 6-1〉 이주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측정 변수	139
〈표 6-2〉 응답 조정 비교표	140
〈표 6-3〉 연령별 여행 유경험자 비율 비교 2018년 조사 기준	142
〈표 6-4〉 국적별 알고 지내는 외국인 분포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144

〈표 6-5〉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147
〈표 6-6〉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150
〈표 6-7〉 국수주의적인 인식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156
〈표 6-8〉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160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2-1] 제 6차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2010-2014)에 기초한 문화지도	17
[그림 3-1] 2011-2015년도 단일민족 지향성의 긍정응답률 비교(일반국민)	51
[그림 3-2] 배제-격리-통합-포용의 시각화	62
[그림 4-1]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변화	72
[그림 4-2]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변화	72
[그림 4-3]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75
[그림 4-4]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77
[그림 4-5]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 변화	78
[그림 4-6]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 변화	78
[그림 4-7] 소득, 연령, 학력에 따른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80	
[그림 4-8]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82
[그림 4-9] 집단 순응성에 대한 인식 변화	84
[그림 4-10] 집단 순응성에 대한 인식 변화	84
[그림 4-1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86
[그림 4-1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86	
[그림 4-13] 내집단 우선성 인식에 대한 변화	87
[그림 4-14] 내집단 우선성 인식에 대한 변화	87
[그림 4-15]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89
[그림 4-16] 위계에 대한 인식 변화	91
[그림 4-17] 위계에 대한 인식 변화	91
[그림 4-18]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92
[그림 4-19]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94
[그림 4-20] 소원을 위한 장소 방문과 부적 소유 응답	95
[그림 4-21] 가족 구성원 묘지 방문 빈도 분포	96
[그림 4-22] 가족 구성원 묘지 방문 빈도 분포	97

[그림 4-23] 길일 훙일 고려 여부	98
[그림 5-1] 한, 중, 일 미디어 콘텐츠 이용률: 2008년과 2018년 비교	108
[그림 5-2] 일본 애니메이션과 중국 영화의 연령별 관람률	111
[그림 5-3] 국제뉴스를 논하는 빈도: 2008년과 2018년 비교	113
[그림 5-4] 국제뉴스를 접하는 수단별 분포: 2008년과 2018년 비교	115
[그림 5-5] 인터넷으로 국제뉴스를 접하는 비율 연령별 분포: 2008년과 2018년 비교	121
[그림 5-6] 영어 활용능력: 2008년과 2018년의 비교	124
[그림 5-7] 전반적인 영어 활용능력	125
[그림 5-8] 학력별 영어 활용능력	127
[그림 6-1] 각 나라별 여행 유경험자 비율: 2008년과 2018년 비교	141
[그림 6-2] 국적별 알고 지내는 외국인 비율: 2008년과 2018년 비교	143
[그림 6-3] 외국인 국적별 수용의향 (좌: 동네이웃, 가운데: 직장동료, 우: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	145
[그림 6-4] 외국인 국적별 지위별 수용의향 2018년 조사 기준	146
[그림 6-5]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의견 2008년과 2018년 결과 비교 (좌: 외국인 노동자, 우: 결혼이민자)	149
[그림 6-6] 국수주의적 인식 2008년과 2018년 결과 비교	154
[그림 6-7]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2008년과 2018년 조사결과 비교	157



I. 서론

김 석 호

I. 서론

김석호 서울대학교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동아시아의 네 나라,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왔지만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에 못지않게 차이도 상당히 존재한다. 사실 이 네 나라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클러스터로 묶어 동질적 단위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Kwon, Kim, and Oh, 2013).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네 나라 간 이질성에 더하여, 네 나라의 근대화 시기와 속도에 있어 차이가 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의 수준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의 틀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동아시아 네 나라를 한 번에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Ronen and Shenkar, 1986).

현대 사회과학 지식체계가 먼저 발달한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서구와 교류를 시작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나 넓은 영토에 걸쳐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말고는 연구 관심의 대상이 될만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일본 및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아시아 연구는 일본과 중국 중심의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유사성과 차이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임현진, 2011). 서구 경제학 이론의 예측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을 성취했으며 이제 이 국가들이 어떻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성공을 이루었는지가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이 맥락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하고 있는(또는 했을 수도 있는) 역사적, 철학적, 문화적 가치(values)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공동의 변형으로 이어졌는가를 탐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력한 설명으로 떠오르게 된 개념이 ‘아시아적 가치’ 또는 ‘유교 문화권’이다. 그리고 이 개념들과 관련된 논쟁은 무수한 변종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을 남기면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주로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나 틀에 귀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비판하는 좋은 예로 사용되기도 한다(Ronen and Kraut, 1997). 물론 어떤 연구도 이 지역의 문화적 보편성만을 주장하거나 한 국가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동아시아 연구가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문화권’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논쟁의 전통 안에 위치해 있다(임현진, 2011).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집된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경험자료의 수집도 그러한 전통 내에 위치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이 보고서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이하 EASS)이다. EASS는 2003년에 설립되어 동아시아 4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공동으로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동아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EASS는 1984년에 창설된 ISSP 및 2002년에 창설된 유럽 대륙의 ESS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창설된 사회조사 협력네트워크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의 학술 조사자료 작성 및 보급에 기여하여 동아시아 비교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존 동아시아 연구에서 결여하고 있던 근거중심적 연구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EASS처럼 동일한 참여기관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를 생산한 적은 없었다.

EASS는 동아시아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필요한 경험 자료의 지속적 축적 외에도 내용적 측면에서도 위에서 지적한 동아시아 내의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표 1-1>은 EASS가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수행된 조사들을 보여준다. EASS는 지금까지 7번의 조사(2006년, 2016년 「Family in East Asia」; 2008년, 2018년 「Globalization & Culture

in East Asia; 2010년 「Health in East Asia; 2012년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 2014년 「Work Life in East Asia」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5가지 모듈들을 각각 10년 주기로 반복된다. 2018년은 「Globalization & Culture in East Asia」를 조사하였고, 2020년은 「Health in East Asia」 조사가 반복될 예정이다.

〈표 1-1〉 EASS 주제 모듈, 2006-2020

EASS 주제모듈	EASS 주제모듈 연도
동아시아의 가족 (Family in East Asia)	2006, 2016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Globalization & Culture in East Asia)	2008, 2018
동아시아의 건강 (Health in East Asia)	2010, 2020 (예정)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	2012
동아시아의 일 (Work Life in East Asia)	2014

EASS가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의 맥락에서 수행된다는 근거는 주제의 선정에서도 드러난다. 가족, 문화(와 세계화), 건강, 사회자본, 일 등의 조사내용은 동아시아적 현상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이면서도 각 사회마다 특수한 발전경로와 사정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구사회와 비교해 아시아적 특수성이 잘 드러나는 사안이기도 하다. 가령 본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2018년과 2008년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모듈은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 소비, 길흥에 대한 인식, 유교적 덕목, 사고지향, 국외접촉, 사회적거리감,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문화적 국수주의, 사회적 연결망 등 9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EASS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모듈의 조사내용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즉 EASS에는 ISSP처럼 전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사업에서는 다룰 수 없는 동아시아의 고유성을 반영한 질문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기존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사업이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검증하거나 서구의 조사사업들을 반복 재생해왔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심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 세계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동아시아 내 나라도 더욱 가까워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일본, 한국, 대만에 이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네 나라 모두 경제규모의 확대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시차를 두고 시행하면서 상호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한 교육, 부동산, 청년, 노인, 문화, 복지 등의 정책은 해당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내 다른 국가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한국정부의 연예 산업 지원과 한류의 발전은 다른 국가들에서 사는 청년들의 여가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의 교류와 상호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한 국가 정부의 정책적 파급력이 해당 국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어떤 영역이든 한 국가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경제와 문화 교류가 활발한 인접 국가들의 상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적 근거가 중요하다.

동아시아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적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사업은 EASS가 유일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 및 이민현상 진전 등의 사회변화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가능 자료의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족관계의 변화 및 이주자 증가와 세계화 진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인구현상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와 세계화 진전으로 인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세계화 및 이민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사회의 맥락에 맞는 다양한 항목들을 조사한 EASS 자료를 분석하여, 세계화와 문화의 확산, 그리고 이주에 관한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위에서 지적인 동아시아 문화와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2장), 이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문화의 확산(3장)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런 후에 2008년과 2018년의 EASS 한국 사례를 분석하여 가족과 소속 집단 그리고 전통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3장), 문화교류와 세계화(4장), 이주와 문화의 확산(5장)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 절 조사의 설계

1. EASS의 조직 체계

이 연구는 EASS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문화와 세계화 관련 인식 및 가치관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한다. EASS는 미국의 GSS(General Social Survey) 형태의 사회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4개의 사회조사기관(중국의 인민대, 일본의 오사카상과대, 한국의 성균관대,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C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J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and Taiwanese Social Change Survey(TSCS)를 통해 국가 간 발생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원활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하여 4개국의 대표 연구자들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GM)와 설문개발위원회의(DM)에 참석하여 기존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제 모듈을 공동 개발 및 조사하고 있다. EASS 전체를 대표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는 EASS 원자료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이터아카이빙 주무기관(EASSDA)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ASS의 조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 포함되어 수행된다. 1972년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NORC에서 창안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국판’ 조사로써 미국 GSS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다.

2. EASS 2008년과 2018년 조사내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지난 2008년과 2018년 조사 모듈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8년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I 모듈

국가별 선호 문화, 미신·풍속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친구의 특성, 가치관, 지역정체성, 여가·문화 활동, 외래문화 접촉,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이주, 세계화/국수주의에 대한 태도, 사회적 연결망 등

② 2018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 II 모듈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 소비, 길흥에 대한 인식, 유교적 덕목, 사회적 정체성, 문화예술 기호, 사고지향, 국외 접촉,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문화적 국수주의, 사회적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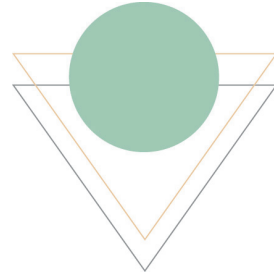
위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II”의 주요 설문문항은 크게 9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들은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 소비, 길흥에 대한 인식, 유교적 덕목, 사고지향, 국외접촉, 사회적거리감,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문화적 국수주의, 사회적 연결망 등에 대한 것이다. <표1-2>에 설문문항 내용 및 문항번호를 담고 있다.

〈표 1-2〉 설문문항의 설계 및 주요내용

측정영역	설문문항	문항번호 (2018)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 소비	일본애니메이션 관람 빈도	108_1
	중국영화 관람빈도	108_2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빈도	108_3
길흥에 대한 인식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흉일 고려여부	109
	지난 1년간 가족구성원의 묘지 방문 빈도	110
	지난 1년간 소원을 빌기 위해 특별한 곳 방문 빈도	111
	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불운을 막아주는 부적을 가까이에 지니고 있다	112
유교적 덕목	성역할 규범1 :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3_1
	가부장제 가치1 :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113_2
	가부장제 가치2 :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113_3
	가부장제 가치5 :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113_4
	가부장제 가치7 :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113_5
사고지향	다수예의 동조1 :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14_1
	다수예의 동조2 :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114_2
	내집단 편향1 : 사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친척/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	115_1
	내집단 편향2 : 나는 우리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낀다	115_2

측정영역	설문문항	문항번호 (2018)
	길 것이다	
	위계 관계1 :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	116_1
	위계 관계2 :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16_2
	모험지향1 : 모험과 기회가 많은 사람이 평범하고 안정된 삶보다 더 바람직하다	117_1
	모험지향2 : 여유 돈이 있다면 위험하더라도 나는 보상이 많은 곳에 투자하겠다	117_2
국외 접촉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신문	119_1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라디오	119_2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텔레비전	119_3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인터넷	119_4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사람	119_5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사회관계망	119_6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_기타	119_7
	영자신문 기사 읽기	126_1
	영어권 사람과 대화하기	126_2
	영어로 편지 쓰기	126_3
	해외에서 5일 이상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적 여부	127
	여행경험 유무_중국	120.1
	여행경험 유무_일본	
	여행경험 유무_대만	
	여행경험 유무_동남아시아	
	여행경험 유무_유럽	
	여행경험 유무_북아메리카	
	아는사람 유무_중국	120.2
	아는사람 유무_일본	
	아는사람 유무_대만	
	아는사람 유무_동남아시아	
	아는사람 유무_유럽	
	아는사람 유무_북아메리카	
사회적 거리감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일본인	121.1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대만인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중국인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동남아인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미국/캐나다인	
	직장동료로 수용의향_유럽인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일본인	121.2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대만인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중국인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동남아인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미국/캐나다인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_유럽인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일본인	121.3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대만인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중국인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동남아인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미국/캐나다인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_유럽인	
외국인 노동자 및 국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 혹은 감소	122_1

측정영역	설문문항	문항번호 (2018)
제결혼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 혹은 감소	122_2
문화적 국수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을 제한	123_1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	123_2
	외국 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	123_3
	[국가간 이동이 증가에 대한] 한국 경제에 부정 혹은 긍정	124_1
	[국가간 이동이 증가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부정 혹은 긍정	124_2
	[국가간 이동이 증가에 대한] 한국의 자연환경에 부정 혹은 긍정	124_3
사회적 연결망	하루 평균 연락 또는 만나는 사람수(가족, 친척 제외)	125



II.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 가치관과 종교를 중심으로

임 동 균

II.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 가치관과 종교를 중심으로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제 1 절 '동아시아의 문화'의 가능성

동아시아 문화와 가치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개념이 생겨난 지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몽고, 대만 정도의 영역권을 포함하는 이 개념은 과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연해주를 포함할 수 있는지,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 역시 동아시아로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는지와 같은 개념적 모호함과 긴장감을 낳는다.

여기에 누가 동아시아를 말하는가에 따라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인이 말하고 생각하는 동아시아, 중국인의 동아시아, 일본인의 동아시아는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동·서(東西)가 아니라 중·외(中外)였다. 근대 초기 있었던, 량치차오(梁啓超)나 량수밍(梁漱溟)과 같은 대표적인 당시 중국의 사상가들이 참여했던 '동서문화논쟁'에서도 '동양'이라 함은 곧 중국만을 의미할 뿐이었다. 자신을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매우 약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로 '탈아'를 꿈꿨던 일본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있어 일본 문명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해 '근대초국'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냈었고(백영서, 2000), 당시 일본의 유력한 사상가들이었던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郎)는 일본 문명이 유럽문명과 동등함을, 와츠지 테츠로(和辻 哲郎)는 왜 서구의 배타적인 일신론적 기독교 사상보다 일본의 (무사상적이어서 모든 사상을 품을 수 있는) 천황제가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Bellah, 2003).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적, 개념적

토대를 가지고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과 한자 사용권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인종적 유사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묶어서 상정한 어떤 동질적 집단을 머릿속에 그려 생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건하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 그 한계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국가를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에 일단 같이 묶어놓고 그것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실체보다 개념을 앞에 놓는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동아시아의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아직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현재진행형 역사서술임을 강조하는데(이정훈·박상수 외, 2010; 백영서, 2000; 윤여일, 2015), ‘동아시아’라는 것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논의하는 것에는 철학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다시 한 번 이 연구가 제기하는 물음은 유용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 세 국가가 과연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공통분모를 얼마나 공유하는지, 그 폭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론을 발전적으로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가치관과 종교, 그리고 민간 신앙 등을 중심으로 그 국가들의 공통분모를 그려보고, 서로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세계 문화의 클러스터들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던 연구들을 정리해 보고, 그러한 연구들이 ‘유교권 문화’라고 묶어보고자 했던 한국, 중국, 일본이 유교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교 문화권이라는 관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서 각 국가가 가지는 특수성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21세기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현재 시점에서 동아시아 3국이 가지고 있는 서로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공통된 가치관이나 믿음 또는 정체성이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충돌과 긴장을 언급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 2 절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종교: 보편성

1. 세계 문화권 구분에 있어 동아시아의 위치

어떠한 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파악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은 그 지역을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비교문화론적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

세계에 다양한 문명·문화권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다른 가치체계(value system)에 기반하며, 그것을 아시아에 적용한 대표적 초기 작업 중 하나는 잘 알려진 대로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구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청교도 윤리에 뿌리를 두었다는, 문화와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현상을 설명한 베버는, 그러한 도식을 아시아에도 적용하여 왜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적으로 서구만큼 발전하거나 근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체된 데에 대하여 베버는 그 근원에 유교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이후 다양한 역사적, 실증적 비판을 받았지만 아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서구적 시선에 암묵적으로 반영되었다.

그와 같은 베버적 관점은 때로는 정확하게 거꾸로 활용되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어떻게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논리로 쓰이기도 하였다. 유교로서 혹은 그와 관련된 아시아적 가치로서 동아시아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모델은 1990년대 말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불어 닥쳤을 때,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나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그 근원을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서 찾고자 했던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이후에 경제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을 때조차, 어떻게 아시아적 가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서구와 아시아라는 단순한 구분이 아닌, 보다 복잡한 범주로 나누고자 한 접근은 문화적 클러스터(cultural clusters)들을 찾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로 나타났다. 클러스터적 접근은 하나의 문화적 클러스터 안에 비슷한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묶는 작업을 의미한다(Ronen and Shenkar, 1985; Kwon, Kim, and Oh, 2013). 이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최대한 적은 숫자의 문화적 클러스터로 구분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Haire et al., 1966; Sirota and Greenwood, 1971; Ronen and Kraut, 1977; Hofstede, 1976; Furnham et al., 1994; Inglehart and Baker, 1994, 2000; Huntington, 1997; House et al., 2004). 그런데 이와 같이 문화적 클러스터를 구분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세계를 단순히 동-서로만 구분한 이분법적 모델부터(Furnham et al., 1994), 10개의 클러스터(i.e., 앵글로색슨, 라틴계 유럽, 노르딕, 게르만 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남사하라, 중동, 동남아시아, 유교권 아시아)로 구분하는 모델(House et al, 2004)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Kwon, Kim, and Oh,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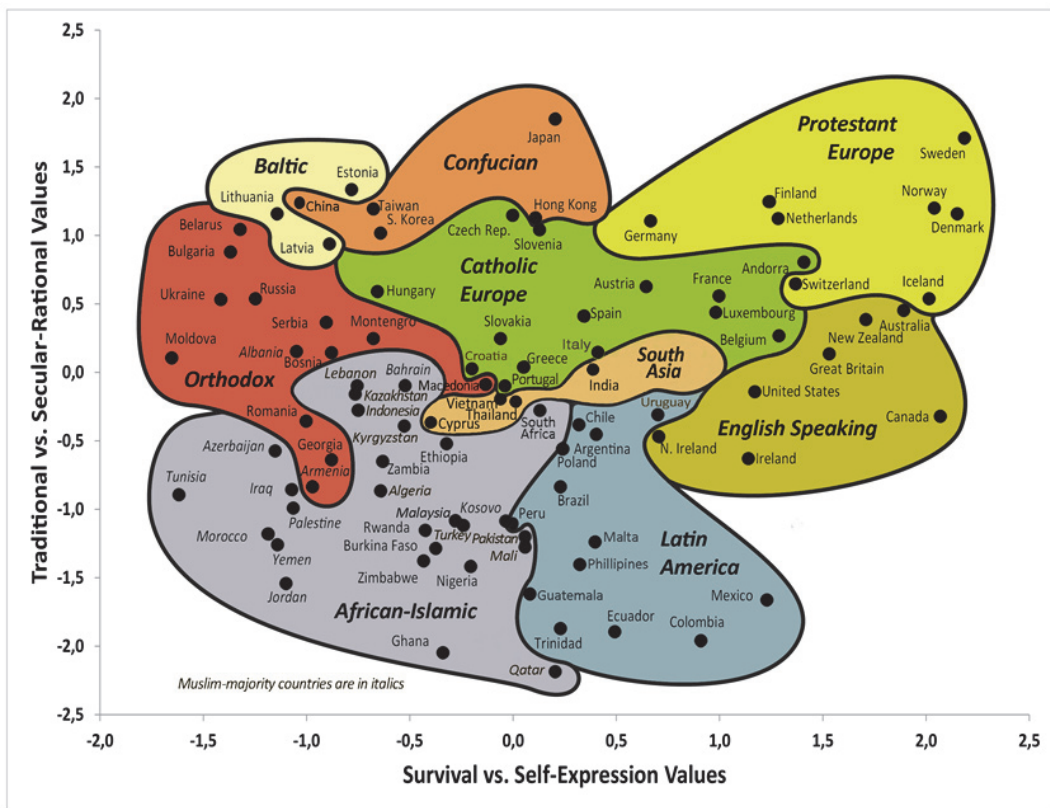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모델들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흔히 손쉽게 하나의 문화적 클러스터로 묶이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클러스터 모델들 간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약간의 차이(variation)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독립적 클러스터("independent")로 구분한 연구들(Haire et al., 1996; Ronen and Kraut, 1997; Hofstede, 1976, 1980)이 있고, 그런 경우 일본을 대만이나 홍콩("far east")과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한 연구들이 있다(Ronen and Shenkar, 1985).

일본을 별도의 카테고리 묶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연구로는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 있다(Huntington, 1997). 자신의 제자인 후쿠야마가 내놓았던 '역사의 종말'론을 비판하는 이 책에서 헌팅턴은 문화적 종교적 요인들이 향후 문화권간 갈등과 충돌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 하면서 세계 국가들을 9개의 클러스터로 묶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가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고 한 것인데, 중화권(Sinic) 문명권에는 중국, 한국, 베트남이 포함되고, 일본은 전 세계 9개 문명권의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별도의 문명권(Japonic)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화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명권(confucian)으로 보고 있으며, 불교는 별도의 그룹으로 묶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몽고, 스리랑카, 티베트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헌팅턴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경험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는 세계 문명권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습적 혹은 서구적 시각의 일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헌팅턴의 연구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권을 분류한 것의 대표적인 연구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를 바탕으로 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가 웰젤(Christian Welzel)과 함께 구축한 문화적 지도(cultural map)에 대한 작업들이 있다(예: <그림 2-1>). 이 작업에서 잉글하트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한 2차원 평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중 한 개의 축은 '생존'과 '자기표현'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에 기반을 둔 차원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전통적 가치관'과 '세속적-합리적 가치관'을 양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의 축이다. 저자들은 이 두 가지 가치관 축이 다양한 종류의 가치관들의 상당부분(약 70%)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타 가치관들과도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문화적 지도는 세계 여러 국가들을 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하나의 클러스터에 묶여있다.

[그림 2-1] 제 6차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2010-2014)에 기초한 문화지도



이 그림에서 한중일의 위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유교문화권으로 묶인 국가/지역의 경우, 내부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X축과 Y축 양자 모두와 관련해서 경제발전 정도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인당 GDP로 경제발전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였을 때, 일본과 홍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속-합리적

이고 탈물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도 전통주의(traditionalism)보다는 세속-합리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20세기 중반부터 약 30년간 이어졌던 강력한 사회주의적 맥락에서의 종교와 전통적 구습에 대한 의식적 거부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오히려 전통주의가 약간이나마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에서도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가치관에 있어 어느 정도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에서의 편차가 아닌, 그들 국가들이 다른 문화권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세속-합리적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Y축인 '전통주의 vs 세속-합리적 가치'에 주목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치관 축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세속-합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이나 중국 또한 일부 북유럽 국가 및 발틱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전통주의와 거리가 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패턴은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해석상에 있어서 곤혹스러운 몇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우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한국 사회의 습속이 전통주의로부터 그렇게 멀리 이탈한 사회인 것이 맞는가? 아직도 한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일상적, 관계적 문법에 전통의 영향이, 특히 유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측정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은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물음과 연결이 되는데, 어쩌면 유교적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 전통으로부터는 상당 부분 이탈한 형태로, 세속-합리적 형식으로 적응하여 살아남아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종교가 아니라 윤리체계에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적 행위의 양식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문화적 스크립트(cultural script)일 뿐이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체계화된 믿음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는 미국의 중국철학자 핑가레트(Fingarette, 1972)이 공자가 세속의 일들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가져왔다는('the secular as the sacred')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시아 문화권의 비교문화적 시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넓은 의미에서의 유교 문화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관통하는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2. 유교의 문제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하나의 문화로 묶어 설명하는데 있어 수천 년의 전통과 주자학,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등 여러 가지 사상적 갈래들을 가진 유교의 본질과 특수성을 여기서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요약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유교의 핵심 교리들을 단순화하여 묘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유교의 본질에 대해 왜곡을 하게 될 가능성 또한 있다.

이와 같은 일반화의 오류를 어느 정도 무릅쓰더라도 소위 말하는 ‘유교 문화권’의 문화적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유교는 1)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서열화 및 조직화 하였으며 2) 개인의 내적 욕구 체계를 도덕론과 수양론으로 통제한 것으로서, 개인들의 행동을 내적으로는 그 안의 욕구/동기를 규제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규제하는 믿음과 행동 양식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 유교적 문화권에서 유교의 기능: 서열화와 조직화

유교적 아이디어들이 인간 행위를 관계적으로 질서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서열화(ordinalization)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화(organization) 하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연령, 성별, 부모-자식 관계, 지식과 덕성의 차이에 따른 관계, 어떠한 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른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관계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어떠한 덕성(virtue)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데, 그와 같은 규정은 필연적으로 서열화의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충효(忠孝)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관계적 서열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와 같은 서열화는 방향적 동기(directional motivation)와 한 집단을 다른 집단 위에 두고자 하는 사회적 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그리고 모든 집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성향(authoritarianism)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방향적 동기는 개인이 주변의 사회적 환경이나 대상들을 평가할 때,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이해를 하고자 하고 그에 따라 우열이나 선후 등의 방향성이 있는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성향이나 욕구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관계를 기반으로 인간 삶의 전반적 사항들을 관장하는 체계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조직화로 이어진다. 즉, 유교라고 하는 관계적 규칙의 종교화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만들어낸다. 이는 특히 퍼트남(Putnam)의 사회적 자본 구분인 결속 자본(bonding capital)과 교량 자본(bridging capital) 중 결속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서, 혈연, 지연, 학연 등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호혜성과 협력, 신뢰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유교적 맥락에서의 조직화(organization)는, 유교리는 관계적 규범을 관장하는 관념적 매개체가 개인들이 맺는 가장 작은 규모의 집단부터 대규모 집단까지 개별 주체들을 연결시키는 조직화 과정의 문화적 자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유리하게 작동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서열화와 조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개별 주체들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그 주체들을 연결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개별 주체들은 그 독립적인 주체성에 의해 존재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에 의해 그 본질과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는 그 정체성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그에 기대되는 윤리적 덕성을 최대한 체현해낼 때 사회적 기대 체계(system of expectations) 안에서 타인은 물론 자신 스스로도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듬고, 깎아내고, 심지어는 지우고(self-effacement), 보다 더 큰 상위의 집단이나 대상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바쳐야 하는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관계의 우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해와 기대의 체계는, 동양은 보다 더 전체적이고(wholistic), 사려 깊으며, 따라서 알팍한 개인주의에 근거한 서양문명 보다 더 우월하다는 식의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문화나 가치관, 종교의 우월을 판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잣대가 있는 것 또한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주의적 문화 생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은 대상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낮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실(情實) 자본주의와 정경유착 등을 의미하는 'crony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그 원인을 묘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가 그와 같이 내집단(ingroup)에 대한 높은 신뢰와 외집단(outgroup)에 대한 낮은 신뢰와 연결된다는 추정은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Delhey, Newton, 그리고 Welzel의 연구(2011)는, 세계 51개국 대상의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내집단(i.e., 가족, 이웃, 지인)과 외집단(i.e., 초면에 만나는 사람, 타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각각 가지는 신뢰의 차이를 신뢰의 '반경'(the radius of trust)이라

고 일컫고,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문화적 유산(cultural legacies)’ 변수들 중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일수록 신뢰의 반경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51개국 중 중국은 4번째로, 한국은 6번째로 신뢰의 반경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자료에 없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신뢰의 수준 정도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에 신뢰의 반경이 얼마나 좁은지를 계산하여 감점으로 적용하면, 51개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크게 순위가 하락하고, 중국 또한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hey, Newton, and Welzel, 2011: p.797). 달리 말하면, 이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신뢰 정도에 비해 신뢰의 반경은 매우 좁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통제하면, 유교가 가지는 신뢰의 반경을 좁히는 효과는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¹⁾.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결속 자본으로서의 유교가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유교는 한중일 국가마다 동질적이지 않으며, 시대마다 유교의 의미는 민간에서, 그리고 유교 엘리트층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넓은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것은 유교의 핵심 아이디어는 관계의 조직화와 인격수양의 강조를 통한 주체성의 순치(馴致)인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유교의 핵심 경전에 담겨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에 그 경전이 공유되었다는 것이다(Zhang, 2012). 유교 문화가 아닌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물론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관장하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은 존재하였으나, 그것이 경전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체계화된 윤리적 공약(social axioms)들로 제공되지는 않았다. 이는 유교가 동아시아 세속의 윤리학을 관장하는 성스러움(sacred)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된 이유다.

유교의 세속의 영역을 성스러움의 대상으로 놓게 되는 것은 뒤르켐적 의미에서 어떻게 유교가 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종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종교의 본질을 성스러운 것(sacred things)과 관련된 믿음과 행위들의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성스럽다는 것은 신성(divine)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sacred)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나 공동체가 통합될 수 있을 때, 그 성스러운 대상은 그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도덕 공동체(moral community)로 묶어준다고 하였다.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의 도덕심리학적 이론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즉 개인 간

1)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유교권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경우, 신뢰의 반경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작용의 규칙과 규범을 관장하고 주체의 내적 동기들을 통제하는 유교라는 문화적 프로그램(cultural programming; Hofstede, 1991)이 조나단 하이트(Haidt, 2001; 2012)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이 주장하는 인간 심리의 여섯 가지 도덕적 토대(moral foundations) 중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스러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 세 가지를 강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개인의 내적 욕구 통제 체계

인간은 체계화된 동기 구조(motivation structure)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동기 체계에는 인간이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리학적 동기들, 즉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들도 있고, 그 상위에 놓이는 사회적 욕구들, 즉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self-enhancement, self-esteem motives) 등이 있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동기는 때로는 자신의 의사나 욕구, 정체성을 분출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해와 관심사 그리고 욕망들, 공격적 성향들과 성적 욕구들, 그리고 자신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등 다양한 내적 경향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내적 동기들과 욕구들이 모두 그대로 표현되면 안정적인 사회질서의 구축과 유지는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유도해서 집단 전체의 복지를 위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성공적인 집단들에서는 문화, 종교, 제도, 혹은 인센티브 구조들이 진화적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가다듬어지면서 인간의 복잡한 내적 동기들을 최대한 통제하여 집단의 성공을 유도하는데 좋은 적합도를 가지도록 만들어진다.

따라서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인간 행동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 인간 동기를 특정(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측면을 보인다. 다른 제도화된 종교들의 경우 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믿음과 실천의 체계가 사상의 중심에 놓여있다면, 종교의 역할을 하는 윤리적 체계로서의 유교는 그와 같은 인간 행위의 규율이 그 윤리 체계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서(四書) 그리고 주자의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저한 형이상학적 탐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데, 인간의 본래적 품성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수양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고 의지를 성실히 다지며, 인(仁)과 지혜를 키워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인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천착한 유교의 강조점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매우 오랫동안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학문적 엘리트들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론, 존재론, 선악론이 음양오행론, 태극론 등 동양의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이라 할 수 있는 사상들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윤리학이 단순히 인간사를 다루는 영역에 국한된 규제와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그것이 형이상학, 자연철학, 그리고 초자연(supernatural)의 영역의 연장선상에 떨어져 나오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따라서 유교의 윤리학은 단순히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는 지시와 금기의 체계가 아닌, 이 우주의 자연법칙이며, 무한히 긴 시간을 관통하는 역사의 법칙이며,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러한 천리(天理)를 어기게 되는 것이 된 것이다.

유교가 자연철학, 혹은 과거에 사람들이 우주와 자연을 이해한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은 율곡 이이가 23세(명종 13년)에 별시(別試)에서 장원급제를 할 때 쓴 ‘천도책(天道策)’이라는 답안에 잘 나타난다. 이 시험의 문제에는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서술되어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묻는 것이 문제의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레와 벼락은 왜 생기는지, 구름이 왜 생기고 바람은 어디서부터 왜 불어오는 것인지, 우박은 왜 생겨나 사람과 새와 짐승들을 죽인 것인지 등을 묻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어그러진 것인지 사람의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묻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라만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사와 별개로 떨어진 자연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과 ‘도(道)’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율곡 이이의 답은 어떠하였는가? 여기에서 천도책의 주요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답안을 작성한 이의 시각을 파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답안의 본격적인 시작은 “그옥이 이르건대, 만화(萬化)의 근본은 오직 음양 뿐”라는 주장과 함께 펼쳐진다. 즉, 문제에서 언급된 모든 자연현상의 원인은 음양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만물의 정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좋은 징조와 나쁜 징조로 연결되어 있고, 음양의 화합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국 “성왕(聖王)이 백성을 다스릴 때의... 덕”과 관련되어 있다. 우박과 같은 자연현상은 음기가 양기를 협박하여 나오는 것이고, 결국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는데”에는 임금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이이는 주장한다.

그리고 율곡은 이와 같은 답안을 작성하면서 시경(詩經)과 같은 유교의 경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무을과 이백과 관련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등, 유교의 주요 경전들과 중국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후 율곡이 쓴 이천도책에 대해 중국의 관리(황홍헌)가 그 제목과 지은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구체적 기록으로 나와 있어, 이 답안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추측하면,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동양적 자연철학과 유교적 사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철학자 두웨이밍(杜維明)이 신유학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것이 도덕철학이기도 하지만 형이상학이자 존재론적인 사유의 틀을 이어받았음을 서술한다.

다시 앞서의 논지를 지속하자면, 이와 같은 유교적 세계관과 질서에서는 천도(天道)와 인간의 도리(道理)는 다양한 측면에서 내적 범주체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그 내부적 요소들은 끊임 없이 조화와 다스림, 순치, 수양, 본성의 실현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수신, 부단한 학습이 강조가 되고, 거기서 공부,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적인 탐구와 과학적인 사고, 기존 지식이나 가설들을 경험적 지식을 통해 거부하고 지식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학습하고 그 안에서 덕성을 키우고 유교적 인륜에 따라 그 덕, 혹은 주자학적 의미에서의 성(性)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와 같이 덕과 가치 추구를 세속의 영역을 넘어 성스러운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 유교는 공자가 말했듯이 사후세계에 대해 별다른 체계적인 교리를 구축하거나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는 종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신이나 사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늘의 아들’ 격에 해당되는 천자(天子), 즉 황제나 왕이 일종의 신적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불교와 도교가 그 공백을 채워주기도 하였지만,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유교적 방식을 통한 삶과 사회의 구성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Huang and Chang, 2017).

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설명이 가지는 문제들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이 구성하고 있는 문화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들을 구분해내고 그것들의 상대적 특성을 포착함에 있어 기존의 (대부분 서구권) 연구들은 가끔 일본을 독자적 문화권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이 세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묶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한 것은 유교였다.

이와 같은 이해에 대하여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위에서 서술한 유교의 특성들에 대해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 속성들은 반드시 유교로부터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의(traditionalism)의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Hunag and Chang, 2017; Lerner, 1958). 즉, 전근대 시기, 과거 소농 경영 사회의 (혹은 일부의 표현에 따르면 봉건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생겨났던 전통주의적 윤리체계를 유교와 혼동하여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소농사회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사회구조 덕택에 유교, 특히 주자학적 통치질서가 성립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한다. 전통주의와 유교의 면밀한 구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그치도록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 설명한 유교적 문화와 관습들에 있어 역사적으로, 고고사적으로 따지면 비유교적인 신앙과 풍속들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섞여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은나라와 같은 고대 국가들에서 행해졌던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그리고 조상숭배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들은 공자가 유교의 기본 이데올로기를 정립시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했던 것들이고, 동남아시아와 같이 한중일 보다 더 넓은 지역에 지금도 광범위하게 민간 신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유교, 유학, 유학자를 의미하는 '유(儒)'라는 한자의 어원을 갑골문자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비(雨)를 내리게 하는 사람(人), 즉 샤먼/무당을 의미한다는 설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훈고학적 유교가 송나라 시대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로 변화하면서, 도교적 요소들이 삽입된 것도 지적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공자(孔子)의 본명 자체가 그 부모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니구산(尼丘山)에 가서 산신에게 기도를 올린 후 가지게 된 아이여서 이름을 구(丘), 자(字)를 중니(仲尼)로 지어준 것에 연유한 것을 생각하면(서진영, 2009), 이미 유교 이전에도 도교적, 애니미즘적 사상이 민간에 깊이 퍼져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설명 방식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일본의 문제다. 기존의 여러 비교문화학적 연구들이 일본을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클러스터로 구분했다시피 (Haire, Ghiseli and Porter, 1966; Ronen and Kraut, 1977; Hofstede, 1976; Hofstede, 1980; Ronen and Shenkar, 1986), 일본이 과연 유교적 문화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두 나라와 같이 묶일 수 있는지는 비판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에서 유교의 영향력은 에도 막부 시기에 주자학이 전래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유교는 그것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 한나라 때부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과 한국을 위주로 형성된 ‘중화권 문화(Chinese cultural sphere)’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에 있어 유교는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 형태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 기타 요소들

가. 불교, 도교, 애니미즘 등의 영향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 그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관이자 종교를 설명함에 있어 유교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힘들지만, 동양의 전통사상의 핵심 축을 이루는 3가지인 유불선(儒佛仙) 중 나머지 두 개인 불교와 도교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 중 불교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현대에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그리고 불교가 인도로부터 건너오고, 도교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기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적 사고를 통해 농경사회의 변영이나 굿주림 혹은 부족 간/국가 간 전쟁에서의 생사를 결정짓는 신적 존재를 대하는 일련의 종교적 문화적 태도와 관련 의식들(rituals)을 낳았다. 그리고 이는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유교나 불교가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나서도 일반 민간 신앙으로 남아 기복과 구원을 하는데 있어 문화적·종교적 자원으로 기층에 계속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 민족개념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민족에 대한 개념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이다. 임현진(2010)은 한중일이 “서구의 일반적인 경험과는 달리 전(前)근대 시기에 족(族: *ethnie*)을 바탕으로 국가형성을 이룬 오랜 민족국가의 전통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각 민족들마다 그 민족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통의 전국신화와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 19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반작용으로, 각 국가는 근대화를 추진을 함에 있어 강력한 근대국가의 건설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과정 속에서 민족은 전근대 시기에 출현했던 상상의 공동체로서 폐기해야 하는 개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강한 국가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던 문화적 자원이 되었다. 즉 과거의 민족주의적 개념은 근대화 과정과 전쟁 및 식민지 경험, 그리고 냉전시기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통해 집단의 결속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온 역사를 지닌다. 한중일의 이와 같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따라서 1) 민족에 바탕을 둔 전근대 정치공동체의 출현, 2) 소농 경영 사회에 뿌리를 둔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3) 제국주의, 전쟁, 부강한 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이라는 폭력적인 근대화 과정에 집단의 결속을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된 역사적 맥락이라는 3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인주의화된 가치체계를 가지고 맹목적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는 새로운 세대가 21세기에도 그와 같은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약화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varieties of nationalism*)에 대한 연구로는 보니코프스키와 디마지오의 작업(Bonikowski and DiMaggio,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극동지역의 역사문제 그리고 군사적 갈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국가주의적, 배타적 민족주의적 태도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 또한 해볼 수 있다. 즉, 자기 국가와 민족의 긍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타 민족/국가에 대한 건설적 관계를 추구하는 긍정적 민족주의가 아닌, 타국가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부정적 동기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생겨날 수 있는데 한중일에서의 민족주의는 따라서 앞으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제 3절 동아시아의 가치관과 종교: 특수성과 차별성

다중근대('multiple modernities')라는 개념을 제시한 아이젠슈타트(Eisenstadt)는, 근대화(modernization)라고 하는 것이 서구화(Westernization)와 다르며, 비서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역사적, 구조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근대화에 대해 각자가 가졌던 유토피아적 비전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근대화의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그러한 경험은 서로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문화 변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경제발전이 (Hofstede, 2001; Inglehart, 2007; Kwon, Kim, and Oh, 2013)라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 시점에서 한중일의 문화적 가치관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인숙(2013)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프랑스와 같은 서구국가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 수준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차이들을 포함, 한중일 삼국에서 나타나는 종교 및 민간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유교의 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이해는 대부분 이 세 국가가 유교 문명권이라는 것을 주된 근거로 출발한다. 실제로 이 세 국가들이 유교의 강한 자기장 안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아시아 3국에서 유교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은 매우 상이하다. 그 이유는 근대화의 경로와 시기적 차이, 경제발전 정도에 따른 가치관 변화의 차이,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가. 유교의 영향력의 강도

일본의 경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도(神道)의 영향력이 가장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신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일본의 문화청에서 내놓은 '종교연감'에 따르면,

“일본 민족의 고유한 신 및 신령에 관련된 신념을 기반으로 발생, 전개되어 온 종교를 총칭하는 말이자, 이와 같은 신과 신령에 관련된 신념 및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뿐만 아니라 널리 생활 속에 전승되어 온 태도나 사고방식까지 함의”한다 (우아미(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일본의 신도에 유교가 분명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신도의 원형을 설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쇼토쿠(聖德) 태자가 6세기에 신도와 유교, 불교의 핵심 정수를 모아 일본 문화의 원류를 만들었고(우치무라, 2003; 최인숙, 2013), 이후 주자학이 가마쿠라 막부와 도쿠가와 막부 등 일본의 막부시기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주종관계와 상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유교의 이데올로기가 일본 사회의 기초질서가 자리잡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유교가 일본에 미친 영향은 양면적 모습을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유교’ 그 자체가 강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학자 층에서도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과거제도는 끝까지 실시되지 않았고 유학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武士; 사무라이) 층의 유학화가 이루어지면서 유교의 존왕사상으로 인해 이후 막부의 쇼군이 아닌 천황의 친정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도쿠가와 체제가 흔들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가게 되는 역사적 파급력이 있었고(박훈, 2014), 막부시대에도 쇼군이 다이묘와 가신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또한 신분질서를 정당화하는 유교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흡수하였다. 이러한 양면적 속성은 메이지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메이지 천황 본인은 유교적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것이 메이지 시대 교과서들에도 반영이 되지만, 오후라 기조(小倉紀藏)에 따르면 ‘유교’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쓰러뜨려야 할 적’으로 여겨지며 배척을 당하게 된바있다.

기층 수준에서는 유교가 18세기~19세기에 이르러 일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일본인들의 일상에 그다지 큰 변화를 주지 못했으며, 개인의 생애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례나 의식을 치름에 있어 신도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현재도 일본인들이 장례를 치루거나 조상을 모실 때 보통 불교식의 절차와 예법을 따르지 유교식 제사나 폐백, 봉분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중국의 경우 유교는 한나라 이후 수천 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통치 질서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왔고, 일상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관장한 윤리철학으로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5.4 신문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교는 퇴출시켜야 할 구습 중의 구습으로, 만악의 근원으로 비판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사람들 다 잡아먹는다는, 곧 유교는 식인(食人)의 사상이라는 루쉰(魯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라는 소설 속 묘사처럼 그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다. 루쉰이 했던 “중국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나온 책은 단 한권도 읽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그 당시 많은 5.4 지식인들이 유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 시기 동안 종교는 실질적으로 금지와 배척의 대상이었고, 잘 알려진 대로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에는 종교를 포함한 전통적 사상 및 윤리체계가 격렬한 공격의 대상이었다. 공자의 후손들은 숨어 지내고, 공자의 고향에 있는 ‘삼공’이라는 공자가 공부하던 곳, 공자가 거주하던 곳, 공자의 묘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 즉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종교 및 민간사상은 급격한 해체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분포를 측정해보면 중국에서 확고한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약 60%,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를 깊이 믿거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98%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전통사회 및 문화의 해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등소평 이후, 특히 장쩌민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시진핑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교와 유교적 가치들에 대한 공식적 홍보와 유교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주목할만 하다. 린바오가 유학경전을 즐겨 읽었다는 이유로 문화대혁명 기간 비림비공(批林批孔)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울 정도로 유교에 대한 배격이 심했던 중국이, 장쩌민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유교를 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게 된다. 1994년부터 공자탄생을 기리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황제의 능 앞에서 유교적 숭배의식을 치르는 행사를 거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체제정비와 기층을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교가 반드시 그와 같은 체제 옹호적인, 국가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연결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청나라 시대의 유교 엘리트들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20세기 중반의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유교가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과 연결이 되었던 경험도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비교적 그동안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로 평가를 받았다. 중국이라는 대국의 사상을 숭양하고 주자라는 개인 사상가가 산 속에서 남겼던 작은 주석들까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절대화 했던 학문적 풍토가 일제강점기가 도래할 때까지도 크게 바뀌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중국의 5.4운동, 사회주의

하에서의 국가무신론, 문화대혁명처럼 종교와 전근대적 풍습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혁하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과거 유교적 전통의 그림자가 더 짙게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기술이나 실용보다는 인문(人文)을 중시해온 성향, 제사와 같은 조상숭배 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경향 등이 그것들이다. 실제로 1995년에 행해졌던 동아시아 3국 서베이 결과를 보면, “유교적 동양문명이 향후 근대 세계의 보편적 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들은 90%가 긍정을, 중국인들은 20%가 긍정을, 일본인들은 63%가 긍정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행해졌던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유교적’인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 역시 전통적 윤리 체계와 관습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나이나 성별에 따른 위계적 권위가 크게 흔들리는 등 유교적 가치관의 해체 과정이 유의미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족주의와 가치관의 문제

앞서 설명하였듯, 한중일 세 나라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는 데에는 이들 세 나라가 유교 문화권으로 구분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유교 문화권이 사람들에게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자 맥락은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은기수, 2009).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가지는 사회적 생산성을 최대화하려 하면서,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은 격하되고 당과 국가가 궁극적인 공동체의 지위를 점유하게 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한국과 일본보다 더 일찍 제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로 인한 가족관련 가치관에 있어 남녀평등의 인식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거기에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가치관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신승배·이정환, 2015; 박광준·오영란, 2011).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는 아직 어떠한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지 못한 상태이며, 중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구조적 요인들과 개인 가치관의 변화 등이 맞물려 다층적인 갈등과 고민의 원인이 된다. 전 인구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의 농민공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고, 농촌에 남은 그들의 부모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과 지지를 종종 잃게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찾아 대도시를 향해

떠나는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하며 살게 되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고, 노동을 하는 연령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 상대적으로 빈곤한 성(省)들에서는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정도의 재정적,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거기에 주로 일자녀 가정에서 태어나 매우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하며, 자신의 이해득실에 투철한 신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가졌던 가족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지만, 동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적 문화의 그림자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거는 기대를 차마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희망과 객관적 처지, 그리고 부모의 기대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큰 국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과정에 한 가지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중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가진 취업을 하건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의 경우가 6~8% 정도 밖에 안 되는 비율을 보인다.

반면, 일본은 중국보다는 유교적 가족주의 문화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가족 내 남녀관계에서 일본의 경우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렸지만, 한국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기존 가부장제의 형태가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나(신승배·이정환, 2015), 전반적인 남녀 간 관계에 있어 일본은 아직 한국보다도 남성중심사회적 태도를 보인다(최인숙, 2013).

이처럼 유교적 영향이 남아있는 가족관계이지만, 어떤 요소가 더 강조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진원(2004)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혈통 중심적 사고를 통해 가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반면, 일본은 그보다는 '가계'라고 하는 생활공동체적 관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또한 그와 같은 가계의 계승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장덕진(2001)의 논문을 보면, 가족구조와 가산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한국, 일본, 대만의 문화적 차이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표 2-1] 한국, 일본, 대만의 가족구조와 가산에 대한 개념: 장덕진(2001)의 표를 일부 발췌

	한국	일본	대만
승계	혈연의 장자 능력은 관건이 아님	가장 유능한 아들 혈연은 중요치 않음	혈연의 아들(장자가 가장 유리) 능력은 관건이 아님
상속	변형단독상속 차남 이하도 일부 받을 수 있음	단독상속 혈연관계 무관하게 승계자가 모두 받음	모든 아들 간 균분상속
가산에 대한 관념	자연인으로서의 현재 가정에 모두 속함	공동재산. 지위점유자로서의 현재 가정에 속함. 기업자산과 같이 계속 전해져야 함	공동재산. 이사회회장으로서의 현재 가정에 속함. 이사회구성원(아들과 형제)에 균분되어야 함.

하지만 20세기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표의 내용을 현 시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표에서 나타나는 가족 가치관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가족주의에 있어 혈연 및 혈족 개념이 강하고, 일본의 이에(家) 체계는 그보다 훨씬 유연하고 가계를 계승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점은 존재하나,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이와 관련된 관념들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기타 종교와 민속신앙

현대 중국에서 종교는 일반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큰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측면을 가지고 중국에는 종교나 민속신앙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사회에서의 과거 종교적 행위 양식들의 부활 과정을 연구한 우신차오(Wu, 2014)의 논문에 따르면, 인민공사 해체 후 재건 및 재조직화를 기층 수준에서 다시 기획해야 했던 지역 농민들은 전통적인 풍습과 민속 신앙과 관련된 의례들(traditional practices)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구축과 조직화, 집합 행동의 자원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 모든 작업들을 한꺼번에 ‘전통 문화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고 그것들이 다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전통 문화의 요소에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있고, 그 중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어떤 집단이나 지역, 혹은 사회

가 조직적 혹은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가는 지역마다, 시기마다 상당히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우신차오(Wu, 2014)의 경험 연구에서도, 중국의 지역별로 그러한 전통문화가 부활한 방식과 조직화된 방식,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었던 정치적·경제적 동기들은 각각 달랐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 비록 중국에서 제도화된 종교가 그리 강력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의 오랜 역사 동안 누적되어 온 종교적 의식과 습속들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1970년대에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World Religion Database에 따르면(Johnson and Grim, eds., 2018), 현재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민속신앙(folk-religion)으로서, 대략 4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불교 2억명, 기독교 1억명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카테고리에 유교는 없음).

그런데 이와 같이 민속신앙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유교가 등장하기 전 7~8천년 전에 있었던 은나라 때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와 관련된 신앙 문화들이 존재를 하였고(e.g.,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용봉(龍鳳) 토템 숭배) 당시부터 있었던 국가/부족 간 치열한 전쟁들은 그러한 종교와 종교적 의식의 발전을 강화하였다. 이로부터 도교 및 노장사상 그리고 ‘도’라는 개념 또한 뿌리를 두고 뻗어져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종교적 토양이 형성된 이후 먼 세월이 흘러 생겨난 유교에 담긴 다양한 위계서열의 가치관들과 제례문화 등 종교적 의례(ritual)에 대한 강조는 그 이전에 누적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규범들과 종교적 관습들이 투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 정책에 따라 제도화된 거대 종교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존재하기 힘든 상태에서, 그것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속 신앙, 민속 신앙들이 일반인들과 기층 사이에 널리 퍼져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본인들은 ‘신사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결혼하며, 절에서 장례식을 치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종교와 민속신앙들이 혼합된 형태로 주요 의례와 행사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삶에 있어 종교는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통해 그 믿음과 실천 양식이 재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세츠(節)’, ‘코토노히(事の日)’ ‘오리메(折目)’ 또는 금지되었다는 뜻을 가진 ‘모노히(物日)’라고도 한다(우야미, 2011). 특히 일 년에 걸쳐 일어나는 많은 연중행사들은 그 핵심에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 일본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부적이나 토템, 신사에서의 기원 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양식을 보인다.

신도에서의 신(神)은 뚜렷한 대상이 있거나 특정 존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신도에는 팔백만개의 신이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만큼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신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존재/관념/대상이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도에서 신으로 취급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자연의 거대한 혹은 중요한 대상(e.g., 산, 들, 바다, 밭 등)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적 신이 있고, 이는 보통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본의 자연환경 조건으로부터 연유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도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나타났던 민간 신앙처럼, 조상신이나 일상적 경험(e.g., 사고, 여행, 죽음, 행운 등)을 관장하는 무수히 많은 신들도 신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이는 신도가 가지는 범신론적 속성을 보여주고, 그러한 신도의 의식에 활용되는 다양한 종교적 대상물들이나 부적들은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토테미즘적 요소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도의 특징은 일본인들의 일상에서 신사와 마츠리를 중심으로, 무당까지 중요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사와 마츠리가 아직도 시기별로 치루는 중요한 의례의 요소들로 남아있고 지역 공동체의 핵심적인 행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도는 어떻게 보면 종교라기 보다는 반복되어 나타나고 일본인들의 몸과 의식에 체화되어 있는 문화적 행위양식(cultural practice)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속 신앙들의 경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대적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기 다른 변화를 겪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자본주의화(상품화)와 세속화라는 큰 두 가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샤머니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무당의 역할과 존재 양상이 바뀌게 되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모수족(摩梭族)의 사례처럼 무당이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국은 정부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타로점처럼 기복(祈福)의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표 2-2>는 조정현(2011)이 정리한, \ 문화변동에 따른 한중일 무당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표 2-2] 한중일 무당 변화의 양상: 조정현 (2011)에서 인용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무속 연행자	여성 비중이 높지만 남성도 있음	남성 중심	여성 중심
사회적 지위 변화	높아짐	약간 높아짐	별 차이 없음
무속본업 전승 현황	자연적 상황의 전승도 활발, 무대화된 전승 공존	무대화된 전승 중심	자연적 상황과 무대화된 전승의 공존
경제적 상황	전체적으로 고소득이나 빈부격차 큼	약간 나아짐	나아짐
사회적 참여 양상	무형문화재 전수 점복과 굿 수행 전화, 인터넷, 타로카드 등 활용	관광자원화 소수민족의 상징	무형문화재화 및 축제자원화의 상징 다양한 매체로 활용
현실 대응 양상	자본주의 사회에 능동적 적응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무대화	공식적 사제자로 자리매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속 신앙의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종교나 믿음의 형태로만 기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힘과 세속화라는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민간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종교의 상품화라는 과정을 통해 그러한 신앙들이 경제적으로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의 한 부분(niche)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움직임들을 포착해야 한다.

제 4 절 소 결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가치관 특히 종교 및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적 권역에 존재하는 문화적 보편성과 구체적 특수성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종교적, 가치관적 보편성 혹은 공통점은 유교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적 서열화와 조직화, 그리고 개인의 내적 도덕성과 수양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적 통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도교, 불교,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종교와 민속신앙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교적 의례와 윤리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 또한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인지는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와 서구화, 전통주의의 해체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적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시점에서, 유교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세계와 마음의 습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심이 제기된다. 유교적 가치관과 문화는 더 이상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으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위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베버적 의미에서의 가치(value)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현재 동아시아인들의 일상과 생활은 종교적 가치(religious value)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결혼, 가족, 생활, 목표, 삶의 의미 등은 근본적으로 후자의 가치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적 가치는 매우 희미해졌고,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이나 종교가 아니라, 설사 과학적 기반이 없을지라도, 동아시아인이라는 ‘인종적 기반’에만 의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와 같이, 그저 생김새에 기초한,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이라는 동질성의 기초는 이 지역의 통합과 평화의 기초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미약한 근거가 된다.

유럽의 경우, 이미 중세시기부터 범유럽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로서의 유럽연합(EU)에 대해 많은 유럽인들이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는 슬로건 안에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반면(신종훈, 2014), 앞서 논의했듯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은 과거 중국의 ‘천하질서’라는 세계관 하에 형성되었던 조공질서 체제가 서구에 의해 강제로 흔들리면서 ‘아시아’라는 유럽산 단어가 지역의 명칭으로 붙게 되는 강제의 역사를 통해 그 뿌리가 없는 형태로, 그저 ‘유교 문화권’이라는 희미한 이름만 가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기초가 허술한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긍정적 정체성과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자오팅양(趙汀陽) 같은 현대 중국의 학자들은 예전의 천하체계론을 신천하질서로 부활하고자 하는 이론적 기획을 제시하고 있고, 마틴 자크(Martin Jacques)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과거의 조공질서와 비슷한 체제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진단한다. 일본 보수세력의 평화헌법 9조 수정의 노력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존재, 그리고 역사적 앙금을 질게 가지고 있는 한반도, 그리고 시진핑 체제 하에서 다위다오/센카쿠 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을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간에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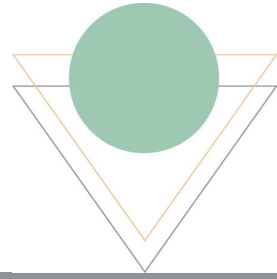
그 해법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결국 이 글의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동아시아라는 공간은 결국 '지적실험'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라는 점(백영서, 2000)을 통해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에는 단순히 국가들의 동아시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들의 동아시아도 있고, 시민사회들의 동아시아도 있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음(구갑우, 2004)을 생각하면서, 동아시아라는 실체가 현재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찾으려 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한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어떠한 과제가 던져져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변화'와 '공존'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짚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한국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문화에는 전통적 요소들부터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감수성까지 다양하고 이질적인 측면들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나타내며 혼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어떠한 체계적 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뿌리에 해당하는 가족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들에 대한 가치관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기존의 가치관이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자체적인 문화변동의 동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화의 교류와 확산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아시아라는 맥락에서 공존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정치적·경제적으로 평화롭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들의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주, 문화교류 및 노출, 다문화적 현상의 경험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국가주의적 맥락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이민자들과, 문화·가치관·종교가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세계화와 타문화, 다문화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동아시아의 세계화, 이주 그리고 문화

주 윤 정

Ⅲ. 동아시아의 세계화, 이주 그리고 문화

주요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제 1 절 서론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유례없이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는 전세계적인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region)내에서의 지역화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 미디어, 노동 등 여러 물질/비물질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교류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세계화란 자본, 노동, 상품, 지식, 문화,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교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관계의 심화를 가져온다. 경제적으로 국제적 무역 및 생산의 확대, 자본 이동의 심화, 정치적으로 정부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의 혼효, 국제 정부, 비(非)정부 조직의 증대, 사회적으로 국제 이주와 관광객의 증가,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출현,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구의식(global consciousness)의 등장과 세계의 압축(compression of world) 등이 그것이다(Robertson, 1993). 이러한 전 지구적 상호 의존은 세계 곳곳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확장(stretching)과 깊은 영향을 주는 심화(deepening)의 성격을 지닌다(임현진, 2011:28)”. 하지만 세계화는 경제적 개방과 번영만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특히 세계화 경험의 확장과 심화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 이후 교통과 인구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며, 또한 인종주의 등 반이민적 극우 정치가 확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계화 이후 국민국가의 경계와 국가별 특수성이 약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세계화로 인해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확산(임현진, 2013)될 필요도 있다.

이 글은 세계화와 이주가 야기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이주라는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와 미디어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화는 유례없는 사람, 물자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시공간적 압축이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리적 이주와 전 세계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는 세계화는 같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분석적으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접촉이자 직접적 물리적 접촉으로 이것은 일종의 생물학적 접촉이기도 하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 상호간에 감정(affect)이 형성되며,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기도 하면 때로는 전염병의 전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호연관성이 심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본, 매체 등 간접적 접촉은 반드시 일방향이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의 혼종성을 야기한다. 또한 매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갈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성,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의 형성 등에 주목했다.

세계화와 이주가 야기하고 있는 문화적 변화는 다층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변화의 측면도 존재하며,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변화,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변화 등을 복합 스케일(multi-scale)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에 대한 시각 역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 이주와 관련된 제 현상과 이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들을 검토한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세계화가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변화상에 대해 기술했으며, 한국과 동아시아의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 문제를 검토했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 상품과 매체로 인한 매체적 접촉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사유와 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기술했다.

제 2 절

세계화와 이주 : 인구이동으로 인한 물리적 접촉

1. 이주와 문화의 변화

가. 다문화 사회의 도래

세계화로 인해서 인구의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인구이동과 이주가 활발해지는 것은 비단 20세기 후반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기부터 이어진 것이며 냉전시기 이주가 주춤하다 세계화 이후 국가 간의 장벽과 경계가 다소 개방되면서 다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식민통치와 제국주의로 인해 인구이동이 활발해졌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식민통치, 태평양 전쟁 등을 통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만주 등으로의 집단적이주 등이 존재했으며, 조선인들도 노동기회를 찾아서 일본으로 이동해갔다. 식민주의는 단순히 권력의 지배력의 확장이 아니라 생활권의 확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제권이 통합이 되고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이주는 활발해졌다(이정은, 2011; 조정우, 2014).

그래서 세계화의 시기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제국주의 시기의 세계화와 2차적으로 1980년대 이후 냉전종식 이후의 세계화 시기의 차원이 있다. 현재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세계화의 효과는 2차 세계화, 다시 한번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민, 이주의 역사 역시 제국주의 시대의 이주와 그 이후의 새로운 이주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도 이주, 이민의 문제는 식민지배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통치의 경험이 있는 나라들 간의 이주가 보다 활발한 편이다. 또한 이주가 증가하는 데는 전후 경제성장국의 비숙련 노동력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망명자도 있었다. 한편 서구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대표적인 이민자 문제가 상이하게 등장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문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알제리 이민자의 위협 문제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인종주의와 이주자의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① 정치, 사회, 경제적 차별 ② 문화적 차이의 조절(유럽과 북미의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했다(Rex, 1997).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이주(설동훈, 2005)가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결혼이주 여성 역시 상당히 증가(김현미, 2014)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노인 등에 대한 돌봄노동자로 동남아의 여성들이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화,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등 각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주자 집단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자 집단은 주변적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시민권을 형성하고 있다(박우, 장경섭, 2017). 아프리카 이민자(한건수, 2008), 탈북자, 버마 난민(류수경, 2017) 등 이주자 집단의 성격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해 단순히 노동 통제, 이민관리 정책의 한계를 넘고, 또한 일회성의 축제성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민권 개념에 입각해서 이주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김현미, 2014)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단위국가 내의 이주 집단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민족의 이산(diaspora)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했다. 디아스포라는 흔히 비극적 이산, 노동이나 상업·제국 경행을 통한 확산, 집합적 기억과 모국에의 신화, 조상의 나라에 대한 이상화, 귀환운동의 존재, 장기간에 걸친 강한 종족적 집단 의식의 유지, 거주국 사회와의 불편한 관계, 다른 사회에 거주하는 동일 종족집단과의 연대의식 등이 특징이다. 재일교포, 재중동포, 구소련지역 한인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전 지구적 이동을 이해하는 다른 프레임(박명규, 2004)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 이주자들이 많아지면서 문화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인구 구성은 유래 없이 이질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본, 대만 등 모두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별로 상이한 이민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나. 다문화주의의 등장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다양한 이주자 집단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 끝에 각국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국가적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남국, 2005). 스튜어트 홀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의 구별(Hall, 2000)된다고 말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주의 개념을 발전시킨 킬리카는 다문화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하나 그 속에서 소수자의 문화 내지는 삶의 양태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한 집단의 권리 내지는 집단에 부여되는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설명한다(Kymlicka, 2005). 또한 다문화주의는 좌파에서 우파까지 내부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사실 식민통치, 제국주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계화와 이주의 흐름은 대체로 제3세계에서 제1세계로의 이민이 문제시되고 있다. 제1세계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등의 많은 나라를 제3세계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민의 증가로 인해 제1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 안에서 제3세계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공존하게 되면서 제3세계의 문제는 제1세계의 내부문제로 변했다(Rex, 1997). 다문화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식민통치의 간극과 모순을 내부화해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다문화주의는 서구와는 다른데, 특정 역사적, 인구학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선 식민통치를 겪은 나라이기에 사회적 관계의 양상이 상이하고, 또한 단계성(sequencing)의 문제가 있다. 서구에서 다문화주의, 소수자 권리 등의 채택은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정착된 이후에 일어났지만, 반면 아시아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요구는 민주화와 동시에 일어난다. 실은 민주화가 다문화주의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시아 민주화와 더불어 소수자들이 권리(문화적 정체성)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 시민권의 확장과 소수자의 시민권의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난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범주설정에 있어서도, 서구적 모델을 따를 수가 없고 혼재되어 있다(Kymlicka & He, 2005).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개념과 분석틀을 수용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적 맥락에 맞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 구성이 요구된다.

다문화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정치적 통합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통합은 한 사회 내에서 일치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의 요구를 중재하는 것인데, 동화주의부터 분리주의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자율, 자치, 다양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 예로 시민적 동화주의(civic assimilation)는 정치 공동체는 정치 문화를 공유한다. 여기에서는 공적, 정치적 가치, 이상, 실천, 제도, 정치담론의 양식, 자기 이해 등 시민들이 공적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

공유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면서 공적 영역 통일 ↔ 사적 영역(가족 및 시민사회)간의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 문화공동체는 사적영역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만, 상위 사회의 정치문화는 수용해야 한다. 결국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치성(unity)와 다양성 양자 사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자 사이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물론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다문화주의 사회가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스스로 생동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Parekh, 2000)고 할 수 있다.

- 합의에 기반한 권위구조
- 정의롭고, 불편부당한 국가
- 집합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헌법적 권리
- 다문화적으로 구성된 공통 문화
- 다문화 교육
- 국민 정체성에 대한 복수의 포괄적 관점

하지만 911 이후 서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옹호와는 별개로 문명충돌론의 시각 역시 공존했다. 헌팅턴으로 대표되는 문명충돌론은 결국 문명간에는 본질적 차이로 인해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시각이다. 한편 다문화주의는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비판(Benhbib, 2002)도 있다. 문화는 근본적으로 생성적이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서 보전하는 문화에 대해 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자유주의의 관용(tolerance)의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와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웬디 브라운이라는 정치학자는 이런 관용의 담론들이 “세계시민주의적 서구 사회와 근본주의적 타자들”이라는 대립항을 정당화하고 제국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서구사회에서 자유주의 관용담론은 “근본주의” 사회와 “자유”사회, “야만”사회와 “문명”사회 등을 구분하면서, 이항대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관용은 일종의 지배자가 베푸는 미덕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비대칭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포스트식민적·자유주의적·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동원

해 관용을 일종의 문명담론으로 만들면서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옹호하면서, 실제로는 계급정치나 인종정치 등을 은폐하는 효과(브라운, 2010)가 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정책으로 규정되어 진행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계몽적이고 규범적 가치로 도입되어서 실제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인구나 실제적 다문화 사회에 기반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한건수, 2012). 한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중심이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법령,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다문화정책 기본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일본은 혁신적인 자치단체, 외국인 비율이 높은 대도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다문화 공생 정책을 연계”(박성호, 2012:244)했다. 동아시아의 각국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정책으로 수용되는 과정은 차이가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통해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고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했었다. 이는 세계화 이후 본격화된 인구이동과 그로 인한 새로운 세계 사회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계화가 확장되면서 이런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는 상당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2. 다문화주의의 비판과 혐오

가. 다문화주의의 위기

세계화로 인한 이동성의 증가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다층적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마찰과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마찰과 갈등의 대표적인 예는 다문화주의 실패 담론이다. 다문화주의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선언이 서구 사회에서 독일 수상 메르켈(201)이나 혹은 영국의 카메론 수상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 존재했다고 해서 사회전체가 다문화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다문화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곤경을 드러내는데, 극우정치가 강화되고,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 볼 수 있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극우 테러리즘도 발생했고, 2017년에는 영국에서는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기도 했다. 아프리카로부터의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테러리즘이 일상화되면서 인종주의가 다시

발호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실패로 인해서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역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등 반이민정책으로 미국 사회의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유럽이나 서구사회 내에서 극우나 인종주의 등이 등장하는 데에는 다문화주의 내에 잠재해있던 모순이 증폭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가치, 혹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충돌되는 지점이 많다는 논쟁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민자 집단이 프랑스의 세속적 공화주의 정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도 상당했다. 공공 공간에서의 여성 히잡 착용이나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이런 다문화주의로 인한 갈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소수집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구심점이 생기지만, 원집단의 경우에는 별다른 구심점이 없어서 오히려 소외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백인 하층 남성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와 혐오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다문화주의의 실패와 위기는 다층적인 이유로 인하여 등장했다.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는 마찰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여성 할례와 같은 여성에 대해 인권침해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들을 문화상대주의의 측면에서 옹호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간의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히잡 착용등이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속박시키는 것이라며 이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지만, 제3세계의 무슬림 여성 등은 이것을 일종의 문화적 특수성이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잡 뿐 아니라 여성 할례, 명예살인, 사티 등 종교적 문화관습 속에서 허용되는 특정 행위들이, 일종의 보편주의적 인권과 충돌하는 사례는 다수 있었다. 특히 유럽 사회 내에서는 “무슬림 이민자 남성의 폭력성과 공격성 등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문경희, 2013:207)때문이라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슬람교 및 가부장적 젠더문화가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성의 근원”이며 “무슬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이민국 주류사회의 젠더 평등 문화에 위배”(문경희, 2013:207)되기 때문에 유럽인의 세속주의와 젠더평등과 충돌했다. 이렇듯 다문화적 소수집단의 문화가치가 보편적 집단의 문화가치와 충돌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갈등들은 공동체의 통합과 일치성(unity)에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의 시각 안에는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시각이 내재해 있다. 전 세계에 있는 가부장제적인 요소들이 지역적으로 발현되며 여성에 대한 억압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특정 종교나 민족집단의 문화적 특성으로 본질화하면서 보편적주의적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인종/문화적 문제로 구성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와 유례없는 인구이동으

로 야기된 여러 가치와 문화의 갈등에 대해 대처함에 있어서, 문화를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최현덕, 2010).

또한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양극화의 부의 집중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문제가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문화주의의 관용 정치에서는 이런 계급 격차와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한 사회상의 변화는 문화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층과 불평등의 문제가 같이 얽혀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문화중심적 시각으로 사회변화와 정책을 구성하고 대응한데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래서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나 비주류 사회의 구성원이나 모두 불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력이 약화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가 정치적으로 선언된 이후, 유럽의 제 국가들은 통합(integration)을 더욱 강조했으며, 유럽의 방식을 옹호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자유주의 정치를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젠더, 성적 관계에 있어서의 개인의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주의는 유럽의 이상(ideal)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Rita, 2017). 유럽의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 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화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변화와 복합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하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치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절실하다.

나. 혐오의 증가와 신인종주의

한국 사회에서도 세계화의 복합위기가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다양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혐오 표현은 흔히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홍성수, 2015)로 유형화될 수 있다. 대상은 흔히 사회적 약자집단 혹은 소수자인데, 대체로 이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자 집단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선족들의 경우에는 범죄율이 높거나 무슬림 이주자들은 성폭력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 집단에 대해 일종의 일탈적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한국에서는 예멘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일종의 혐오가 확산되고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논쟁이 발생했었다. 한국사회는 2017년~2018년 사이 미투운

동이 활발해지는 등 여성이 자신의 권리 찾기, 시민권 확보 운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멘난민들의 입국 소식과 난민지위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성 난민인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예멘 난민들은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식되었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예멘 난민에게 투사²⁾되었다. 그래서 여성운동 진영에서도 이것이 정당한 공포인지 혹은 새로운 인종주의적 투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이런 새로운 혐오는 일종의 신인종주의라고 개념화될 수 있다. “신인종주의에서는 개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고유한 문화를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래 위치(국가)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야 하며, 이것이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즉, 문화와 민족성에 기대어 구분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인종주의다. 이들은 이주민들이 자국 사회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을 하며, 이들에 대한 행동이나 주장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주로 이주민들이 사회에 유입되어, 범죄가 급증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말한다.”(이완, 2017:3)

다시 말해 이주민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국민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있다. 이런 시각은 프랑스의 국민전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르펜을 당수로 하는 국민전선은 민족 간의 우열은 없다는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며, 집단사회의 문화차이를 절대화시키며 프랑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박단, 2001).

이주민 혐오와 반다문화 정서는 비단 대중적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집단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로, 더 나아가 유럽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의견으로 대항논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김지영, 2017:139).“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반다문화 정서와 이의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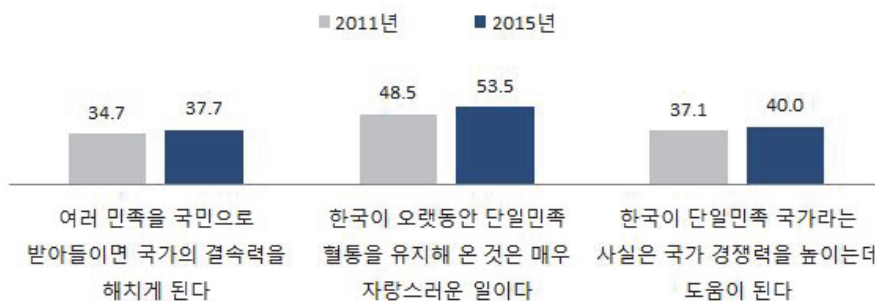
또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런 갈등과 충돌, 마찰들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다. 일본에서 한국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조총련계의 조선적 구성원에 대한 혐오범죄와 남한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범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는 조선적을 가진 재일교포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조총련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이들은 전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이후 남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문화적으로는 북한과 친화적이

2)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577.html

다만 실제로는 어떤 국적을 갖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의 학교는 민족학교라 불리며 일본 공교육 체계와는 다른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데,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이 증가하면서, 조총련계 학교계열의 여학생들의 치마저고리 찢기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와 혐오발언이 급증했다.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식민지 시기부터 거주한 이들이지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한국 관광객 등이 일본에서 증가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종적 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사회에서 조선적, 한국인 등에게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는 사례가 증가(金明秀, 2018)하고 있다.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 온 차별적인 태도에, 새로이 재편되는 차별과 배제까지 몇 종의 중층적인 차별과 혐오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접촉은 증가했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주 집단을 일종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거리감은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종류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거리감은 학력,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태도를 균질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계층, 세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보다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 2011~2015년도 단일민족 지향성의 긍정응답률 비교(일반국민)



자료: 여성가족부(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안상수), p.113.

이주민이 증가하고 세계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단일민족적 정체성이 증가하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에서 보이듯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2015)에

의하면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지수 추이에서 '일반적 동화기대' 요소의 수용성이 약화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등장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내의 경쟁과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혈통에 기반한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학교교육, 대중문화 매체, 유사역사학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조사에서 '다양성 확대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된다는 항목 비율은 낮아졌으나, '다양한 인종 종교문화의 공존'과 '외국 이주민이 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는 두 개 항목의 응답은 상승했다. 이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면이 증가하면서 이주민 증가로 인한 위협인식을 크게 느끼거나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가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혼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는 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김지영(2018)은 국수주의적 태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위의 조사나 대중문화에서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도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는 애국교육을 강조하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냉전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자국 국민통합을 위해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정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민족주의적 지향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 3 절

세계화와 미디어: 자본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매체적 접촉

1. 문화제국주의와 문화혼종성

세계화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 교류와 접촉도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과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접촉 역시 증가했다. 자본과 문화상품, 그리고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 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와 접촉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문화제국주의

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등장했었다. 문화제국주의는 종속이론에 기초하여 문화 역시 선진국의 문화가 주변부에 일방향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제국주의론이다. 이런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상품생산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산과 정보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미디어의 경우 주변부는 주변부의 독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중심부의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문화제국주의라 지칭되는데 단순히 뉴스뿐 만 아니라 문화일반, 사회구조,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문화제국주의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실러는 “서구 국가의 대중문화의 독점과 영향력 확대가 서구 제국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 예로 “오락,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보산업 분야의 경제적 파위가 대중문화와 미디어 메시지의 글로벌 확대와 연계”(진달용, 2011:15)되어 문화제국주의로 발달했다고 한다. 또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저서에서 중심부 제국의 시각이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자본의 흐름, 권력의 불균등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맥도날드화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의 음식문화가 균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계화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상품이 이동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로 인해 자국의 문화가 파괴될 것이라는 비판과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전체 사회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에 열려 있게 되면 이는 전 세계적인 소비주의와 상품화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맥도날드가 프랑스의 자국의 식문화를 파괴할 것이라 우려했으며, 한편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으로 인해서 자국 영화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력이 강한 곳의 문화가 일방향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고유의 자생적인 문화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했다. 또한 언어의 다양성 역시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자생적 문화가 축소되고 파괴되어갔다.

하지만 문화의 세계화는 문화의 동일화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존 톰린슨(Tomlinson, 1999)은 문화제국주의 이론은 지배, 식민지, 압제,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문화의 흐름을 잘못 분석했으며, 경제 환원주의는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라두이 역시 세계화/지구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문화제국주의와는 별도로 문화가 서로 혼종적으로 뒤섞이는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기반해 있다. 그래서 문화는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접촉을 통해 교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등장하는 것은 문화의 습합성(syncretism)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사회학자인 아이젠슈타트(Eisenstadt, 2000)는 근대성이라는 것이 복수의 근대성으로 존재한다면, 60~70년대 지배적인 근대화 이론을 비판했다. 각국에서 고유의 문화와 만나서 근대성의 경로들이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을 형성하는데 문화이론적으로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에드워드 사이드 이외에도 호미 바바, 스피박 등의 학자들은 문화의 상호접촉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 특히 호미 바바란 영문학자는 <문화의 자리(The Location of Culture)>란 저작에서 문화라는 것이 혼종(hybrid)적이라 주장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배적인 문화와 하위문화가 끊임없이 뒤섞여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상이한/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언어의 발화자들 간의 새로운 형식의 교차 소통을 요구한다.”(간디, 2000:162) 그리고 이것은 틈(in-betweenness)이란 개념을 상정하며 문화들 사이의 상호 연계성, 상호 의존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지구화는 지역 문화, 로컬리티에 근거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며 문화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혼종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문화를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고유의 것으로 환원하는 시각에 저항해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변화하며 생성(becoming)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화는 타문화와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혼종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세계화 초기에는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문화가 균질하게 변화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문화제국주의론 등이 널리 퍼졌지만, 점차 문화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혼종적이란 시각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단위와 로컬 단위의 상호교류의 접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 이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 각 국의 고유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국의 유사한 다른 전통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논의해야 하는 지점이 많아지면서,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역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세계화와 그로 인한 문화적 접촉은 다양한 접촉의 경로를 만들었으며,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또한 미디어 기술 등이 확산되면서 주변부에서도 아랍권의 알자지라 등 주변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들이 증가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미디어가 다변화되었다. 그래서 최초에 문화제국주의론자들이 우려한 바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와 미디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미디어의 발전은 때로는 각국의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아랍의 민주주의의 확산에서도 SNS 등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의 발전은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면서, 자본집중 현상에 균열을 내기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소수언어가 줄어들고, 자생적 문화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단위나 국가단위의 문화 활동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문화 중심으로 생활양식들이 변화하면서 소수 민족들의 문화는 위협에 처해있다. 그래서 세계화의 영향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차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은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접촉하면서 문화제국주의, 글로벌/로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세계화로 인해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사람들의 접촉이 증가했고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이런 탈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의 고유의 지역적 문화와 인식틀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들이 증가했다(천광신, 2003).

2. 동아시아의 문화접촉과 인터넷 민족주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원래 일본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강해서 일본 만화와 JPOP 등이 강세였다. 할리우드의 영화를 제외하고 일본의 문화컨텐츠들이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점차 복합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한류는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 세계가 변화하는 데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한류가 확산되는 데에는 한국의 독특한 스타시스템도 있지만, 또한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의 마케팅 방식이 기여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 2005년에는 13억 113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1년에는 43억 201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했다(윤대엽, 2017).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가 활성화되면서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서양권의 문화에 비해 가족주의적인 문화 등 공유되는 심성구조로 인해서 비교적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 내의 교류와 문화소비가 활성화되어갔다. 특히 중국의 소비력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시장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확장되면서 문화시장과 소비시장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해 혐한의 문화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혐한 등이 일종의 문화컨텐츠처럼 활성화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넷우익이라는 집단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혐한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청년, 남성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혐한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사드이후 반한감정이 증가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미디어 교류가 증가하지만 또한 그로 인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충돌하고 있기도 한다. 혐한 현상이 등장하는 배경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경제적 배경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류의 확산이나 한국문화를 제거해야 할 장애로 인식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일 영토 분쟁으로 인해 보수주의에 의해 혐한현상이 증폭(강동국, 2006; 박정수, 2012)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일본 법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조선 국적자의 40퍼센트가 헤이트 스피치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김명수, 2018)고도 한다. 또한 세계화 이후 다양한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신문, 방송 등의 매체보다는 인터넷 매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간 및 민족 간의 태도, 거리감, 감정 등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2000년대 편칭(화난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을 대대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는 중국의 부상, 강한 중국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의 이행기에 내재된 국가 통합성의 약화데 대한 대체 이데올로기로 등장”(박기철, 2011: 114)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체제 이행기 국가단위의 통합력이 약화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다시 강화되었고 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대중민족주의로 자리매김 되었다(이정훈, 2017). 이처럼 온라인, 문화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국가간의 국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이 동원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반일, 반한, 혐한 감정들이 인터넷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다는 것은 항상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중심의 사고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폐쇄적인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 내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각국간의 인식이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반드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에는 역사문제 및 영토문제 등 항상 잠재되어있는 갈등요소들이 많은데, 이것이 깊이 연결된 미디어를 통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또한 세계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영어활용 능력에 대한 계층적 차이가 확대(박효민, 2018)되고 있음이 본 보고서에 분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극우적 민족주의, 헤이트 크라임이 각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 특정 계층 사람들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중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문화와 국수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동아시아의 문화가 확산되고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5.18과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가 중국의 농민공 운동, 대만의 민주화 운동, 홍콩의 우산 혁명 등에서 활용되고 공유(정근식, 2015)되고 있다. 대중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화 확산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콘텐츠, 문화 등이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태일 평전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 등이 농민공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변호인〉 등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소재로 해서 생산된 대중영화들은 중화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접촉은 단순히 소비문화를 매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항적인 문화로까지 확장되면서 다른 방식의 동아시아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라는 것은 자본과 시장의 확장, 개방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적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관계의 얽힘(entanglement)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자본 중심적 방식의 관계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대와 네트워크, 그리고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디어의 다양성과 동아시아 지역 내의 다층적 교류를 가능하게하기 위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일 것이다.

제 4 절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다양성

앞서 기술했듯이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교류가 발생하고 기회가 확장되어가고 있다. 문화 역시 일방향적으로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교류가 발생해서 문화의 창조성과 혼종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네티즌의 등 접촉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나 혹은 국제기기와 국가 등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주의 중심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상대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문화의 이론적 입장보다는 새로운 보편성에 대한 탐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시민주의

의 논점을 살펴보고, 또한 문화다양성 등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사회적 포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시민주의

철학자 칸트 이래 세계시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올리히 벡이라는 사회학자가 세계 시민사회와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세계화로 인해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세계로 확대되고, 세계가 하나의 ‘사회’로 좁혀지는 현상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세계도시의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올리히 벡은 세계도시에서 ‘세계시민적 의미지평’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벡은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에서 국민국가가 ‘국제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사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국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지구 현지화’의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홍찬숙, 2016:206-207)” 다시 말해 초국적인 민주주의는 구체적인 현장과 구체적 로컬리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 등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의 세계시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시민들은 현재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테러리즘 등 공통의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시민단위에서 연대하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새로운 세계시민주의의 탄생이 가능하다. 올리히 벡은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기존 방식의 계급적 연대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과 위험의 구성과 이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세계시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히 벡이 말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첫째로는 “영토와 결합된 국민국가를 ‘사회’와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근대성의 제도적 형태는 서구적 형태가 유일하다고 본 기존의 ‘보편주의’적 근대화론의 관점이 잘못되었다”(홍찬숙: 2016:225)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에 속한 사회라는 단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사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미디어 등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시민사회의 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토성에 종속되어있는 경우도 많긴 하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고찰과 상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근대성의 개념이 서구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학자 아이젠슈타트의 논의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며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차크라바티의 관점이기도 하다. 근대성이라는 특정한 발전 형식은 서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서구 사회에서도 근대로의 이질적 경로가 존재했다. 이런 이질적 역사발전 경로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세계시민주의는 비로소 가능하다. “세계시민주의는 복잡한 상호의존으로 얽힌 세계와 지구적 규모로 제기되는 공동의 위협(common threats)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공동체 입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세계주의적 규범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박희제, 2014:97)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노 라투르는 세계화에 대해 보다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그는 인류세(Anthropocene)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들, 기후변화 등을 강조한다. 라투르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을 강조하면서, “인류의 눈앞에 펼쳐지는 전대미문의 문제들, 즉 지구 온난화, 생명공학의 영향, 인구 증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매개로 지난 수백 년간 만들어낸 수많은 잡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라투르는 “흔히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수많은 지방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일 뿐이다. 도대체 '글로벌(globe)'는 어디에 존재하나? '글로벌(global)'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착각에 빠뜨리는 위험한 개념이다. 흔히 '전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provincial)에 갇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의 시각을 갖으며 구체적 지역(locality)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다층적 관계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정치의 차원을 세계시민적 정치의 차원에서 우주시민정치(cosmopolitics)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인간-자연관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라투르의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당연시하던 세계화란 개념을 미시-거시의 연계로 치환하면서 상호적인 얽힘(interconnectedness)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 사물들 간의 관계를 고찰해야하기 때문에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넘어 다자연주의(multi-naturalism)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 중의 하나인 슬라보예 지젝은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 등

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766#09T0>

다양한 분절화 현상에 대항하여 새로운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지젝은 “자본주의 세계화는 개방과 정복뿐 아니라, 내부로 외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기봉쇄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난민문제로 인해 벽을 건설하거나 영토성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지젝은 그렇지만 문을 열어 잠그고 영토를 안전하게 봉쇄한다고 해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태학적 위기에서부터 난민의 위협까지 현재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만 가능해진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를 별개의 시대로 분리한 지질시대 개념이다. 인류세에 접어든 지구는 인류의 생산활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우리의 생산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진 바로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⁴⁾

울리히 벡, 브루노 라투르, 슬라보예 지젝 등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들은 현재 세계화 이후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성의 추구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당면 과제, 위험, 인류세적 재난 등이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을 통해서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존의 인간중심적 관점(anthropomorphism)을 넘어 새로이 지구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인정해야 하며 생태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보편성의 기반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시민주의를 구성한다.

2.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책 이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다

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1411.html#csidx1b83ad350c74aaeb65bc07a8bba843a>

양성은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주의의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다. 초기에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 의해 시작되었다.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⁵⁾ 유네스코에서는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인류의 발전이 단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증진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만족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 인간의 생존이 모든 형태에 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되는데 있다는 것이다.”⁶⁾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은 자본중심과 서구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가치와 규범으로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선 문화중심적인 관점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정책화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이후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이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로,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지개 다리 등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지자체 단위(10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문화다양성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확장된 개념으로 보며,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작용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문제”(김규원)이며 “단지 이주민 문제가 아니라 내문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혜자) 하는 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제언도 있었다. 문화다양성 관련 운동을 지속한 시민운동가는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정책의 차이는 문화다양성은 이주민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선주민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소수자, 소수종교 신자, 장애인, 원손잡이 등 개별적인 소수성은 물론, 여성, 청소년, 노인, 출신, 직업 등 다양한 소수성을 가진 인구집단이 어떻게 공존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최혜자, 2018)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다. 지자체 단위, 공동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점증하고 있는 혐오 등 갈등의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다양성은 사회적 포용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새로이 정의되고 있다.

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헌장

6) Our Creative Diversity. Ch.1.

7)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회의 회의록

[그림 3-2] 배제-격리-통합-포용의 시각화



자료: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표 자료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주민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다문화정책과 달리, 이주민들이 소수자로서 사회에 포용될 수 있는 관계구성을 고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소수자들과 더불어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2>와 같이 포용은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동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이주민 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포용(inclusion)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포용의 원리는 사회의 구심점이나 중심을 설정한 통합과 구성원리가 사뭇 상이하다. 한편 다문화주의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런 문화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박탈감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각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화와 공동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는 물론, 이주민 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모색⁸⁾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차이의 인정을 통한 보편성의 추구라는 앞서 말한 세계시민주의의 이상과 맞닿아 있으며 포용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의 담론과 정책은 각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 정의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제 5 절 소 결

이 글은 세계화로 인한 이주, 그리고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 세계의 유례없는 교류와 접촉은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기도

8) 라도삼.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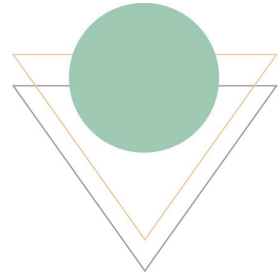
한다. 세계화 이후 문화는 다층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세계화가 모든 문화를 균질화하고 동일화할 것이라는 문화제국주의의 암울한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의 역동적인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등 위의 전망이 틀렸음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접촉이 세계를 평평(flat)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서구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등 서구에 진출하기도 한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인기와 현재 미국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BTS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 덕분이다. 문화는 혼종적(hybrid)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가 일방향적으로 전파되고 타문화를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접촉과 얹힘을 통해 다양성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비문화의 확장으로 인해 소수민족이나 소수문화가 사멸되어가는 측면도 존재한다. 세계화가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중층적이고 다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디어가 확대되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영어활용도나 고급 정보를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계층적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등 양극화의 영향이 포착되기도 한다.

또한 이주 및 여행 등을 통해 인구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정체(governance)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주의가 창출되었고 이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이민자가 급증하고, 다문화주의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정치가들은 공공연하게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브렉시트, 반이민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당선, 극우 정치의 약진 등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인구가 동이 증가하면서 반외국인 정서가 때로는 혐오의 감정으로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족과 무슬림 난민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넷우익을 중심으로 혐한이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대중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반일이나 반한의 분위기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와 그로 인한 이질적 인구집단의 접촉은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혐오(hatred)로 표현되고 있으며 신인종주의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갈등, 거리감등은 모든 인구집단에서 균질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세대/혼인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등장한다.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이질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한국의 다문화/반다문화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외부의 이질적 타자와 접촉하는 경험도 증가했지만, 각 사회내부에서의 계층적 격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는 양극화라는 사회문제와 조우하여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복합위기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학자들은 세계시민주의 등에 대한 고민을 전개하고 있다. 올리히 벡, 브루노 라투르, 슬라보예 지젝 등 유럽의 지성들은 문화상대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보편성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는 서구의 문명이 비서구를 관용한다는 점을 내재적으로 은폐하며, 다양성을 관용했지만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치성(unity)를 획득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편이었다. 기존의 동화주의적 입장에서는 일치성은 자국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통합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중심주의에 기반하여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할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주민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다양성과 일치성 간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데, 위의 세 학자들은 모두 새로운 보편성의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보편성은 특정 이념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류가 현재 공통으로 당면한 위기와 위협, 다시 말해 인류세의 위험을 공통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상호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와 상호인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다문화 정책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고민하는 담론이며 포용적 사회(inclusive society)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 지구 시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기 때문에 한 단일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야기되는 위기와 위협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지역(regional)적인 차원에서 더욱 상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필요하며, 이런 포용적 실천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가족과 소속 집단 그리고 전통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

조 원 광

Ⅳ. 가족과 소속 집단 그리고 전통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

조원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제 1 절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

왜 가치관과 문화에 주목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중국에는 사회적 갈등과 합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늘 완전히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상황에서 그 능력은 좀처럼 발휘되지 않는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동원하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의 영향에 휘말리곤 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프레임의 효과는 인간의 판단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Tversky & Kahneman, 1986).

우리가 가치관 혹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그것이 유일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큰 고민 없이 손쉽게 따르는 판단의 원칙이자 현상에 대한 즉각적인 태도와 감정을 결정하는 토대이다. 이런 가치관과 문화는 한 개인이 완전히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며 개인들에게는 사회구조처럼 작동한다. 집단 혹은 국가마다 현상을 판단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Nisbett, 2004). 이런 차이는 서로 다른 집단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큰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안겨주기도 한다.

구체적인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집단 수준에서 존재하는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탐구했다. 예를 들어 푸코는 하나의 시공간을 관통하는 담론과 지식이 존재한다고 봤다. 담론과 지식의 차이는 유사해 보이는 현상에 대한 아주 상이한 태도를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행동과 태도로 이어진다. 푸코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광기는 합리성

너머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여겨졌으나, 근대에서 광기는 정신의 퇴화나 질병으로 여겨진다. (Foucault, 2003) 두 시대의 광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하였고, 그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이런 가치관과 문화가 사회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무의식적 태도와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등이 형성되는 지점과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속 집단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는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소속 집단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멋진 일이라 여겨지는 문화권의 갈등은 아마 적잖이 다를 것이다. 전자에서는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하기에 갈등은 주로 집단 간의 경쟁과 투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집단 내 갈등과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두드러질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한 집단이나 국가의 가치관과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해당 집단과 국가의 갈등을 예측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여러 대상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가족과 소속집단에 대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문화를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과 기타 소속집단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갈등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와 구도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까닭은, 홀로 존재하는 대신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과 직장 기타 여러 결사체는 그런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사회화와 교육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일하고 교류한다. 그 공간에서 주로 접촉하는 타인과 제도에 대해 어떤 무의식적 태도와 판단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사회적 갈등의 특징과 구도를 결정한다. 만약 한국인의 가족과 소속집단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변화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개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전통 신앙에 대해서도 가치관을 측정할 것이다. 전통 신앙이 전통 신앙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오랜 시간 사람들의 행동이나 판단에 무의식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도 그러하다면, 이들 역시 사회적 갈등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된다.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 신앙에 대한 가치관 측정 역시 시도할 것이다.

제 2 절 가치관 범주별 문항과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연도에 걸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KGSS는 가치관과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여러 연도에 걸쳐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본 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가족과 소속 집단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기 동안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 측정을 시도하고 그 함의를 살펴볼 가치관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2)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3) 전통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그것이다. 각각을 측정하기 위해 동원한 KGSS 문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1. 가족에 대한 가치관

〈표 4-1〉 가족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연도
남성 가장 중심성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가족 우선성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6, 2016, 2018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6, 2016, 2018

본 보고서에서는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태도와 가족 우선성을 엿볼 수 있는 문항에 주목하였다. 모든 문항은 특정한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도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1: 매우 동의, 2: 동의, 3: 다소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5: 다소 반대, 6: 반대, 7: 매우 반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보고서는 여러 방식으로 가치관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데, 간단한 표나 막대그래프를 이용한 설명에는 관심 변수의 응답 범주가 많은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응답을 “찬성”, “반대”, “동의도

반대도 아님”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재분류하였다.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를 “찬성”으로, 매우 반대, 반대, 다소 반대를 “반대”로 분류하고, 동의도 반대도 아님은 기존의 응답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반면 응답의 전체 분포가 필요한 분석이나 시각화의 경우 (예를 들어 박스 플롯) 원 응답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2. 소속집단에 대한 가치관

다음으로 가족 이외의 소속 집단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크게 세 가지 태도, 즉 집단 순응성과 내집단 우선성, 그리고 집단 내에 작동하는 위계에 대한 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을 활용한다.

〈표 4-2〉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연도
집단 순응성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내집단 우선성	“사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친척/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나는 우리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집단 내 위계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의견	2008, 2018

역시 모든 문항은 특정한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형태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는 해당 명제에 대해 〈1: 매우 동의, 2: 동의, 3: 다소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5: 다소 반대, 6: 반대, 7: 매우 반대〉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앞서와 동일하게 때에 따라 세 가지 범주(“찬성”, “반대”, “동의도 반대도 아님”) 응답을 재분류하거나 원 응답의 범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3. 전통신앙에 대한 가치관

〈표 4-3〉 전통 신앙에 대한 가치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연도
전통 신앙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 흉일 고려 여부	2008, 2018
	지난 1년간 가족구성원의 묘지 방문 빈도	2018
	지난 1년간 소원을 빌기 위해 특별한 곳 방문 빈도	2018
	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불운을 막아주는 부적을 가까이에 지니고 있다	2018

전통신앙과 관련된 문항은 앞선 문항들과 응답 구조가 다르다. 길일과 흉일을 고려하는지 여부의 응답은 〈1: 매우 많이 고려, 2: 상당히 고려, 3: 별로 고려하지 않음, 4: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단순화가 필요할 경우 1과 2는 “고려함”으로, 그리고 3과 4는 “고려안함”으로 재분류하였다. 묘지 방문 빈도와 소원을 빌기 위해 특별한 곳을 방문한 빈도는 〈1: 없음, 2: 한 번,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6: 다섯 번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대로 활용하였다. 부적 소유 여부는 〈1: 예, 2: 아니오〉로 조사되었으며, 그대로 활용하였다.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기본적으로 각 가치관들이 연도별로 어떤 평균적인 경향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성별, 소득, 연령, 학력 같은 기본적인 인구 변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조성된 집단 별로 관심 변수들의 특징과 그 특징의 변화가 어떻게 관찰되는지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것이다.

앞으로 보고될 분석결과는 모두 KGSS 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를 고려하였음을 밝혀둔다. 가중치는 성별, 연령, 지역, 도시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관찰치마다 부여되었다.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 STATA, SPSS, R(version 3.4.4)을 활용하였다. R에서 tidyverse package(version 1.2.1), cowplot package(version 0.9.3), haven package (version 1.1.2), survey package(version 3.34) 등을 사용하였다.

제 3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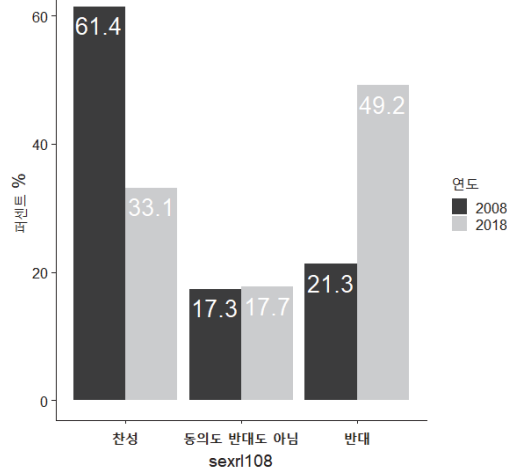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가족 내의 경험과 갈등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가족은 오랫동안 사회 질서 구축에 기여한다고 여겨졌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사회의 규범을 교육하는 일차적 기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필립 아리에스 같은 역사가는 근대에 들어 가족의 경계가 강화되었다고, 즉 과거에 비해 가족 이외의 성원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 강화되었고, 그것이 사회 성원들이 교류하고 활동하는 양상을 바꾸어놓았다고 주장한다.(조형근, 1998) 또한 자크 동즐로 같은 학자는 가족의 역할을 활용한 통치의 작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Donzelot, 1979) 초점은 다르지만, 가족의 형성과 변화가 전체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침이 많이 지적된 셈이다.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둘 때,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의 파악은, 가족을 둘러싼 성원들의 행동과 갈등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탐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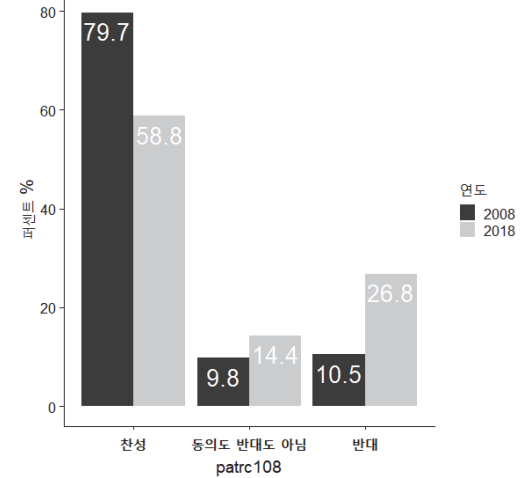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제에 대한 의견과,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의견으로부터 이를 추측할 수 있다. 2008년도와 2018년에 해당 문항이 조사되었는데,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4-1>을 살펴보자 2008년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61.4%가 찬성하였으나, 2018년에는 33.1%로 감소하였다. 대신 그 명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2008년 21.3%에서 49.2%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변화도, 앞선 문항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20% 포인트 이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찬성이 2008년 79.7%에서 2018년 58.8%로 감소하였으며, 반대가 10.5%에서 26.8%로 증가하였다.

[그림 4-1]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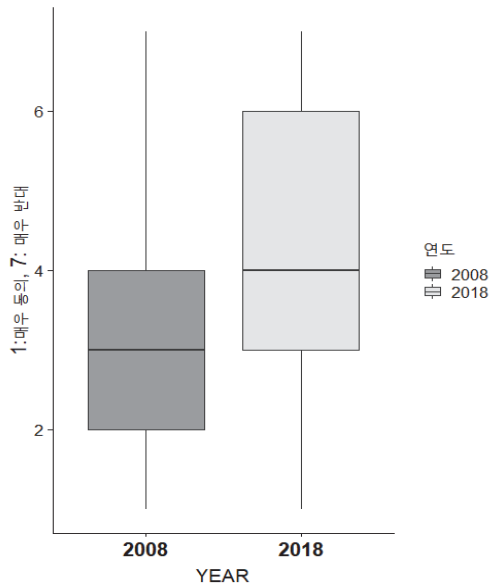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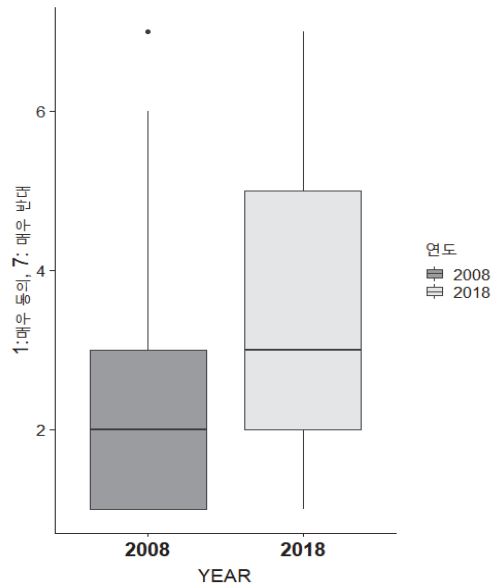


[그림 4-2] 남성 가장 중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의 시기별 응답 분포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의 시기별 응답 분포



〈그림 4-2〉는 문항을 찬성, 반대, 중립으로 단순화하지 않았을 때 연도별 문항의 분포의 차이를 보여준다.⁹⁾ 보다시피, 아내가 내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에서는, 2008년에는 중앙값이 〈3: 다소 동의〉였으나, 2018년에는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으로 변화되었다. 반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태도는,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분명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평균적인 찬성 반대 여부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에는 해당 질문에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2018년에는 대체적으로 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중앙값 3: 다소 동의) 가지게 된 셈이다. 이것이 찬성, 반대, 중립으로 표현한 그래프에서 해당 문항의 변화가 덜 극적으로 표현된 이유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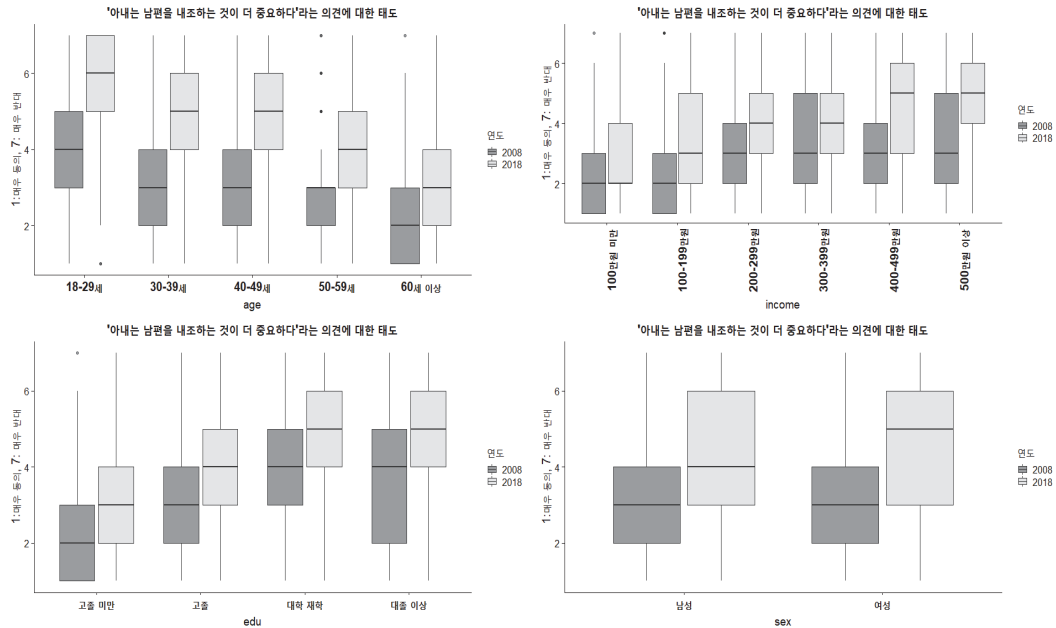
이들 문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그 특징의 변화는 응답자를 소득, 연령, 학력 별로 구분해보면 좀 더 여러 각도로 관찰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4〉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을 해당 변수로 집단을 분할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연달아 등장하는 〈그림 4-3〉 역시 이런 구분에 따른 응답의 분포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분포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4〉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찬성	200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201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9.3	13.4	7.3	73.3	11.2	15.6
	100~199만원	77.2	10.4	12.4	52.5	15.0	32.5
	200~299만원	61.6	18.6	19.9	38.2	17.0	44.8
	300~399만원	57.1	14.9	28.1	28.4	24.2	47.4
	400~499만원	53.7	21.5	24.8	31.6	14.0	54.5
	500만원 이상	53.1	21.1	25.8	22.4	19.0	58.6
연령	18~29세	34.3	22.6	43.1	7.1	15.6	77.3
	30~39세	50.6	24.5	24.9	20.6	16.9	62.5
	40~49세	66.5	13.0	20.4	23.7	19.4	56.8
	50~59세	77.9	15.0	7.1	38.5	20.9	40.6
	60세 이상	81.2	11.1	7.7	69.1	15.7	15.2
학력	고졸 미만	78.1	12.8	9.1	68.0	15.6	16.5
	고졸	71.2	12.3	16.6	39.1	19.5	41.4
	대학 재학	43.5	22.1	34.4	19.7	16.5	63.8
	대졸 이상	49.4	23.4	27.2	17.7	18.6	63.8

9) 박스 플롯의 각 박스는 해당 응답의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의 범위를 표현하며, 가운데 선은 중앙값이다. 이는 어떤 변수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4-3]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전체적으로 응답이 2018년에 큰 폭으로 변화하였기에, 여러 방식으로 분할한 응답자 집단에서도 변화가 쉽게 관찰된다. 적어도 2018년 응답에서는 저연령일수록, 고소득일수록, 고학력일수록 해당 문항에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급한 집단에서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좀 더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분할은 연령별 집단이다. 무엇보다 저연령층의 변화가 분명하게 눈에 띈다. 서로 다른 두 연도의 응답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8-29세 집단 등 저연령층에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변화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더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태도 변화가 중앙값 기준으로 좀 더 크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역시 소득,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4-5>가 이를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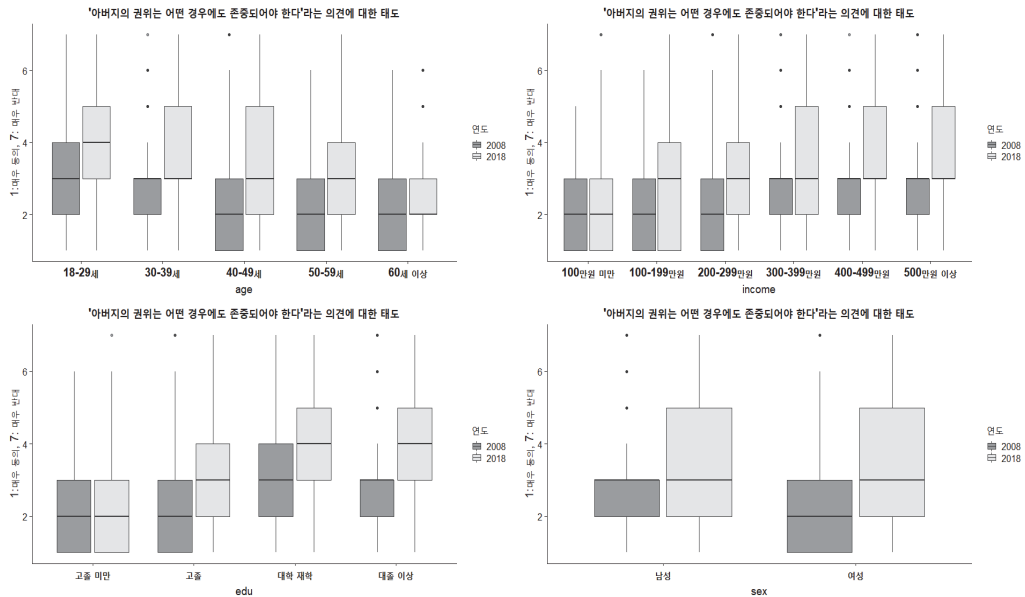
〈표 4-5〉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찬성	200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201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4.4	10.4	5.2	80.0	9.3	10.8
	100-199만원	84.9	6.3	8.8	74.1	10.6	15.3
	200-299만원	76.8	10.5	12.7	62.4	17.6	20.0
	300-399만원	77.0	9.5	13.6	58.2	16.7	25.2
	400-499만원	78.7	10.8	10.5	53.2	12.4	34.4
	500만원 이상	79.6	10.3	10.1	53.8	14.0	32.3
연령	18-29세	61.7	17.5	20.8	31.8	21.8	46.3
	30-39세	79.0	9.0	12.1	50.0	19.0	31.0
	40-49세	85.8	6.5	7.8	56.4	9.6	34.1
	50-59세	85.5	7.7	6.8	71.4	12.0	16.6
	60세 이상	87.5	7.9	4.7	79.8	10.6	9.57
학력	고졸 미만	84.8	7.7	7.6	76.4	11.3	12.3
	고졸	84.2	8.3	7.5	68.8	14.6	16.6
	대학 재학	70.4	15.3	14.3	48.6	13.9	37.5
	대졸 이상	77.3	8.8	14.0	47.9	16.6	35.6

〈표 4-5〉에 따르면, 해당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감소가 400만 원 이상 소득 집단과, 18-29세 연령 집단, 그리고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응답이 500만 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79.6%에서 53.8%로, 18-29세에서는 61.7%에서 31.8%로, 대졸 이상에서는 77.3%에서 47.9%로 감소하였다. 이런 변화는 집단 별 응답 분포 전체를 시각화한 〈그림 4-4〉 박스 플롯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29세 집단과 대학 재학 이상 집단은 중앙값이 3에서 4로 바뀌었는데, 이는 전체적 태도가 해당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결과이다.

[그림 4-4]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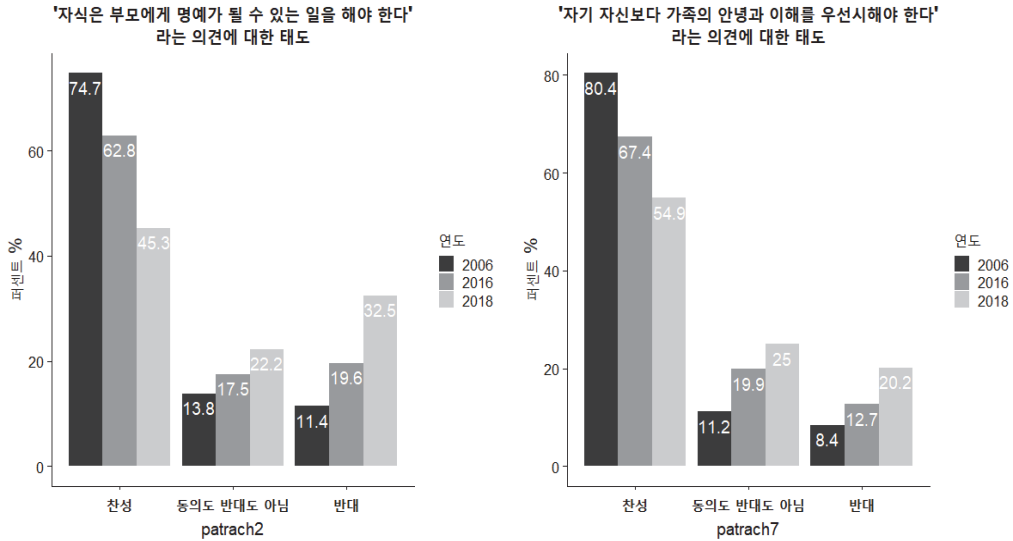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남성 가장 중심성은 약화되었다고 추측된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졌던 주도권 혹은 중심성에 대한 태도가 아예 대체적으로 찬성에서 중립 혹은 반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저연령층의 태도변화가 눈에 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앞선 문항만큼 변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년에도 찬성의 비중이 여전히 반대보다 우세한 경우가 많고, 일부 집단에서 중양값이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을 보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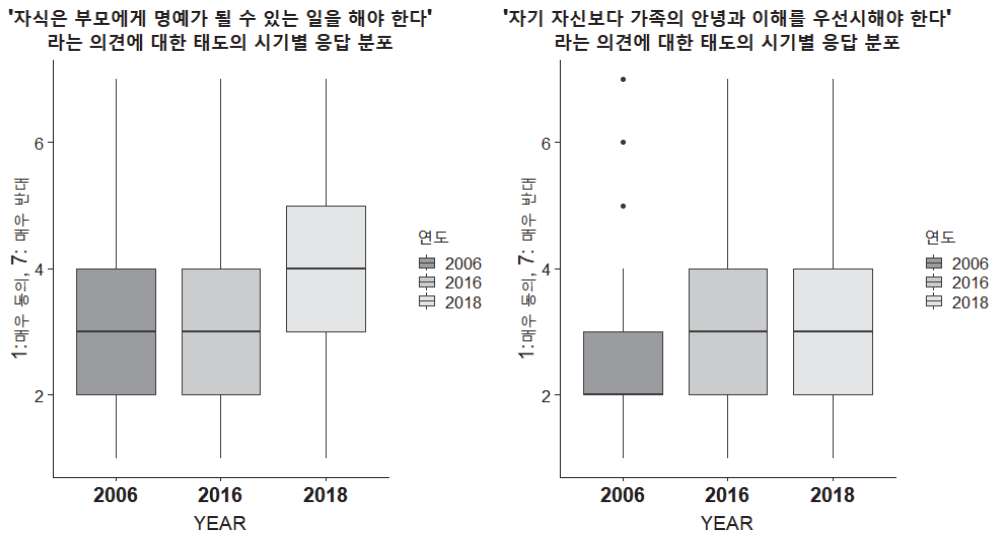
2.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가치관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이다. 해당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2절에서 밝혔듯 두 가지인데, 이는 2006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측정되었다. 전체 응답의 변화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고려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와 <그림 4-6>을 살펴보자.

[그림 4-5]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림 4-6]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인식 변화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명제나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가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 각 명제에 대한 찬성은 2006년 74.7%와 80.4%에서 2018년 45.3%, 54.9%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대하는 의견은 2006년에는 11.4%와 8.4%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32.5%와 20.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태도가 좀 더 우세하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2018년에도 중앙값이 <3: 다소 동의>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4-6>)

가족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 역시, 소득, 연령, 학력 집단 별 특징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부터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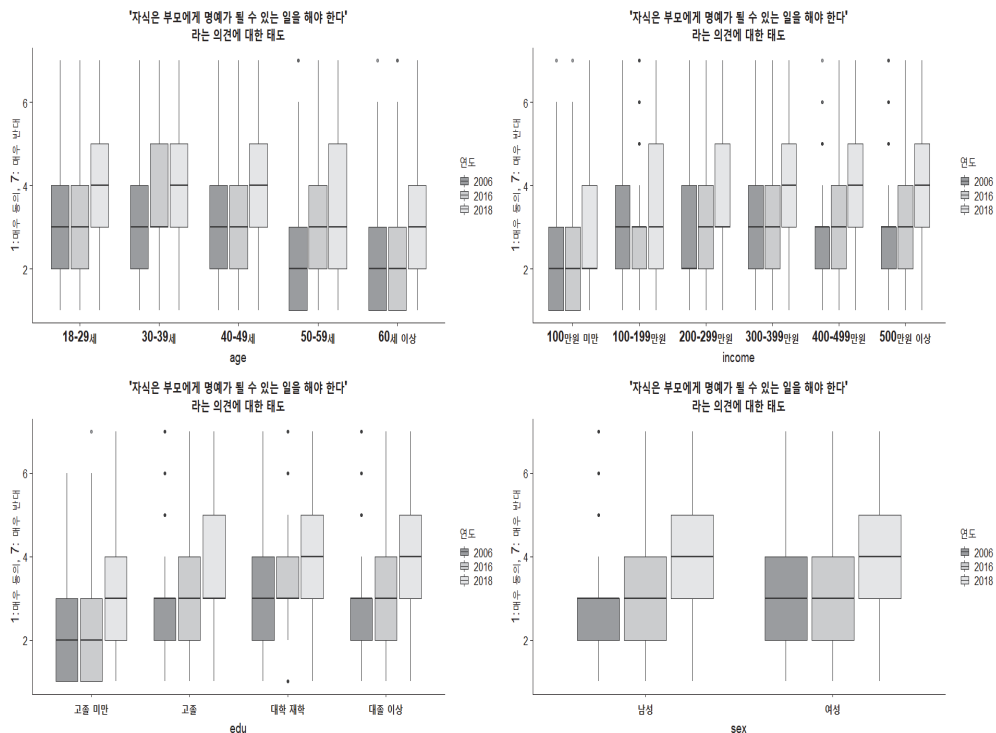
〈표 4-6〉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찬성	200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201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7.2	14.9	7.8	76.2	12.3	11.4
	100-199만원	70.9	14.4	14.7	75.9	10.3	13.9
	200-299만원	74.9	15.5	9.6	58.9	18.7	22.4
	300-399만원	72.7	14.4	12.9	68.5	17.1	14.4
	400-499만원	78.1	13.2	8.7	57.5	21.8	20.6
	500만원 이상	75.7	12.3	12.1	58.1	17.6	24.4
연령	18-29세	67.6	19.3	13.1	58.9	20.6	20.4
	30-39세	71.4	14.8	13.8	51.4	23.0	25.7
	40-49세	73.2	13.1	13.7	59.8	19.2	21.0
	50-59세	83.7	9.4	6.8	61.6	14.8	23.5
	60세 이상	83.6	9.5	6.9	79.3	11.3	9.4
학력	고졸 미만	80.8	11.8	7.5	75.9	10.4	13.7
	고졸	75.0	14.9	10.1	64.2	18.2	17.6
	대학 재학	66.9	17.9	15.2	59.8	20.0	20.2
	대졸 이상	76.5	10.6	13.0	56.9	19.3	23.8

〈표 4-6〉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300만 원 이상 소득층 집단에서, 고연령층보다는 49세 이하 연령층 집단에서, 그리고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확대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해당 집단에서 찬성 비중의 감소가 좀 더 뚜렷하다. 이는 〈그림 4-7〉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층에서는 중앙값의 변동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전히 긍정적 응답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집단에서는 중앙값이 대부분 긍정적 응답 영역에서 2018년에는 〈4:동의도 반대도 아님〉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폭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도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연도별 분포가 서로 제법 겹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크게 변화한 집단에서조차 중앙값이 중립 응답인 4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해당 문항에 대한 찬성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그림 4-7] 소득, 연령, 학력에 따른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표 4-7>이 기초 통계치이다. 바로 이어서 <그림 4-8> 박스 플롯을 제공하고 한꺼번에 살펴보겠다.

〈표 4-7〉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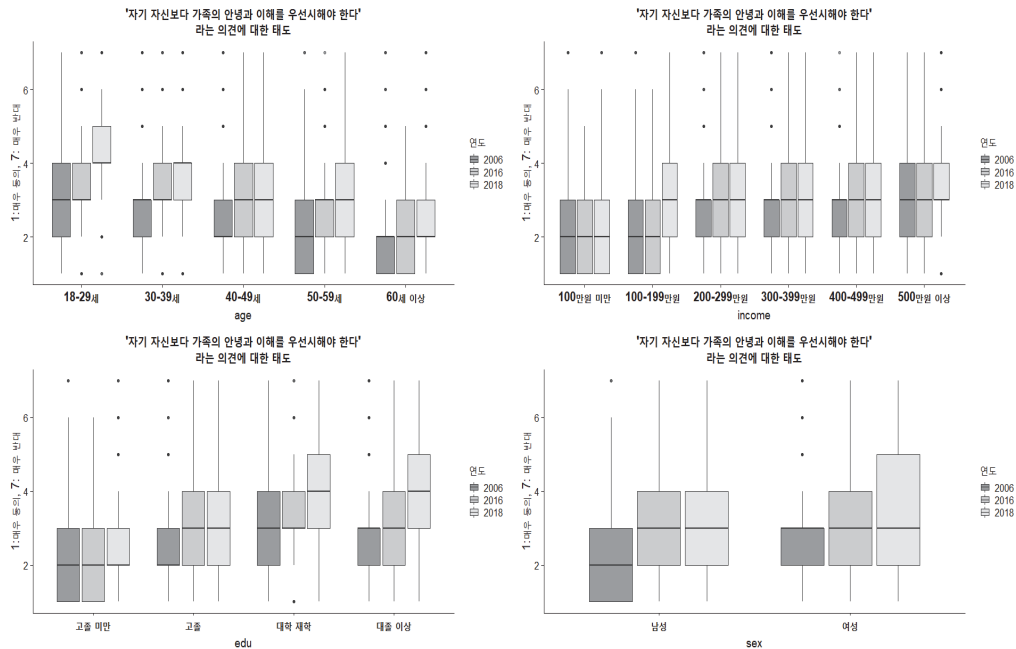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찬성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찬성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5.6	5.3	9.1	81.5	14.6	3.9
	100~199만원	86.7	8.1	5.2	81.8	8.9	9.4
	200~299만원	82.2	11.0	6.9	71.2	19.3	9.5
	300~399만원	75.2	14.5	10.3	69.5	14.6	15.9
	400~499만원	80.8	8.9	10.3	63.4	23.7	12.9
	500만원 이상	74.5	15.5	10.0	61.0	22.9	16.1
연령	18~29세	68.2	20.3	11.5	51.1	32.8	16.1
	30~39세	77.5	12.5	10.0	55.8	27.2	17.0
	40~49세	84.0	8.8	7.1	61.9	21.9	16.3
	50~59세	88.1	6.6	5.3	75.7	11.8	12.5
	60세 이상	90.0	3.8	6.2	88.3	8.3	3.4
학력	고졸 미만	89.3	3.7	7.0	85.4	9.8	4.8
	고졸	83.5	10.5	6.1	74.0	17.2	8.8
	대학 재학	72.8	17.3	9.9	58.7	26.1	15.2
	대졸 이상	76.1	13.0	10.9	58.8	23.1	18.1

우선 시간이 2006년에서 2018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몇몇 집단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눈에 띈다. 100만원 미만 집단과 고졸 미만 집단이 그들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태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다. 반면 18-29세 집단은 시간에 따라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에서도 해당 집단의 찬성 응답이 4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8.2 → 51.1 → 23.5). 18-29세 연령 집단은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경향을 부정하는 정도가 강하다. 더불어 30-39세 집단의 변화도 중앙값이 중립으로 옮겨갈 만큼 두드러지며, 대학 재학 집단, 대졸 이상 집단의 변화도 눈에 띈다.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 의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다가 중립적 태도로 변화하였다. 중앙값이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으로 이동하였으며, 찬성 응답 비중의 감소가

40% 포인트 내외로 확인된다.

[그림 4-8]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이제까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남성 가장 중심성]과 [가족 우선성]이라는 두 범주의 네 문항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시간적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지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제법 큰 변화를 경험했다. 남성 가장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으며,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태도 역시 감소하였다. 네 문항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내에 비해 남편을 우선하는 관습에 대한 태도이다. 전체적으로 찬성의 태도에서 반대의 태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연령층, 구체적으로 18-29세 집단이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가 남편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과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고학력층, 저연령층 일수록 시간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가 조금이나마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2018년 자료에 이르면, 남성 가장 중심성과 가족을 우선하는 경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는 점을 적어도

미약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과 범주에 따라 이 경향은 달라지나, 대체적으로 관찰된다. 애초 2006년부터 이런 경향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이라 보기는 힘들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시간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로의 변화 속도가 집단마다 달랐고, 그 결과 이런 경향이 2018년에는 좀 더 강화된 것이다.

제 4절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

사람들이 가족 이외의 수많은 집단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만큼, 가족 이외의 소속 집단에서 타인과 관련 규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했다시피, 집단의 순응성과 내집단 우선성 그리고 위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집단에 대한 순응은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유명한 애쉬(Solomon Asch)의 동조 실험은, 집단의 의견이 명확히 틀렸을 때조차 그것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집단 동조성 혹은 순응성은 시공간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리처드 니스벳 같은 사회심리학자는 동서양 사이에서 이런 경향의 차이가 적지 않게 확인됨을 이야기한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까닭은, 앞서 말했듯 그것이 집단 내 갈등은 물론 집단 간 갈등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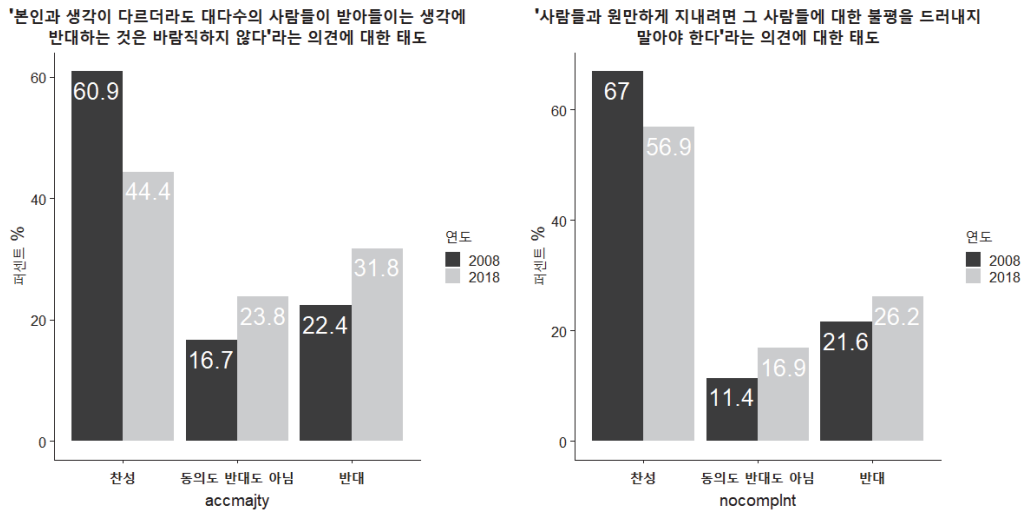
두 번째 내집단 우선성 역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심지어 집단 경계의 근거가 자의적이고 일시적이라도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자퍼 셰리프(Muzafer Sherif)에 의해 보고된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이 이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11살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무작위로 배분된 집단에 몰입하고 타 집단을 배척하게 되는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내집단 우선성의 발현 정도가 사회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내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때로는 이를 위해 외집단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지 않는 성원이 많을 때 사회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 번째 위계에 대한 태도 역시 사회적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계에 순응하는 존재보다, 위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존재가 많을 때, 즉 이견을 제시하는 존재가 많을 때 사회가 운영되는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함과도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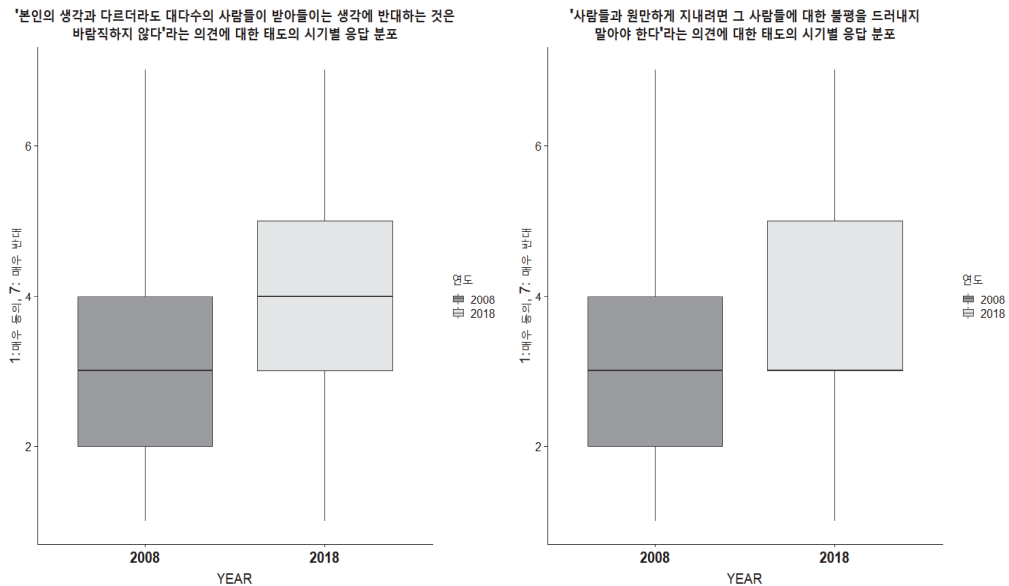
1. 집단에 대한 순응성

먼저 집단에 대한 순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문항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한 한국인의 응답은 2008년, 2018년 KGSS 조사에 기록되었으며, 두 시기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와 <그림 4-10>에서 전체적인 경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집단 순응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림 4-10] 집단 순응성에 대한 인식 변화



전체적으로 2018년의 응답에서 집단 순응성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된다. 대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응답자의 60.9%가 찬성한다고 나왔으나, 2018년에는 44.4%에 그치고 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반대는 소폭 증가하였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은 소폭 감소하였고 반대는 소폭 증가하였다. 변화의 폭은 첫 번째 문항이 조금 더 크다. 첫 번째 문항은 중앙값이 변화하였지만, 두 번째 문항은 그렇지 않다. (〈그림 4-9〉) 이 결과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집단 순응성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두 문항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장에 대한 의견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 소득이 높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변화폭이 약간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박스 플롯을 보자.

〈그림 4-10〉에서 보다시피, 중앙값과 그를 둘러싼 분포를 고려했을 때, 연령에서는 49세 이하 집단들에서, 소득으로는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학력으로는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뚜렷하게 시간에 따른 변화가 확인된다. 연령집단에 따른 구분은 특히 인상적인데, 예를 들어 2018년의 18-29세 집단은 고연령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응답의 분포를 가진다. 타 연령에 비해 해당 의견에 확연히 더 부정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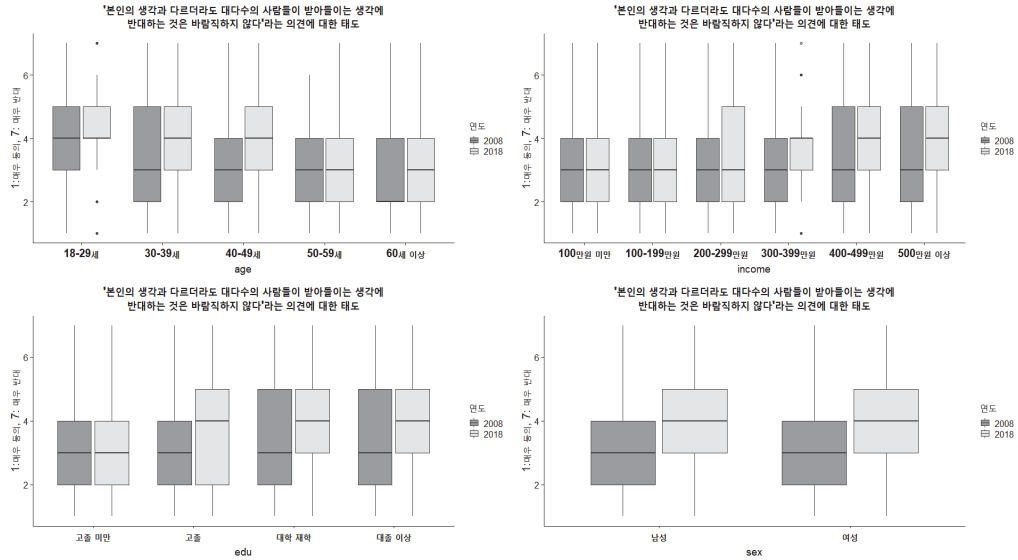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 〈그림 4-11〉 박스 플롯을 보았다..

전체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찾기 어렵다. 이는 전체 응답이 두 시간 간 아주 큰 변화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중앙값 2008년 2018년 동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29세 집단, 30-39세 집단, 대학 제학 집단의 해당 문항에 대한 중앙값이 중립 응답으로 변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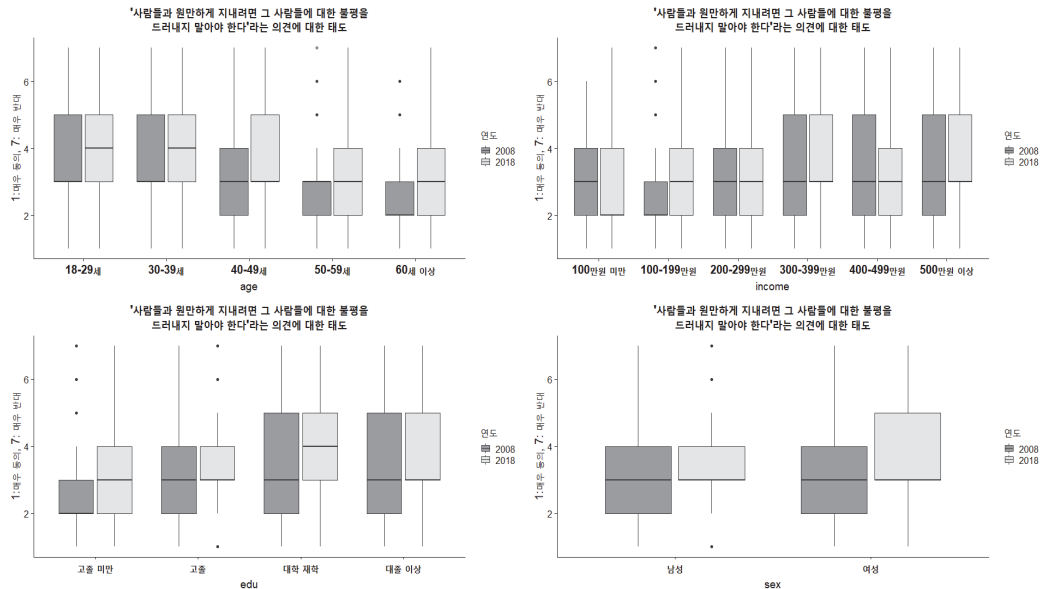
요컨대 전체적으로 집단 순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개방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변화는 49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인간관계를 위해 불평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아주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우나, 몇몇 집단에서 (18세-29세 집단, 30-39세 집단, 대학 제학) 눈에 띄는 감소가 확인된다.

[그림 4-1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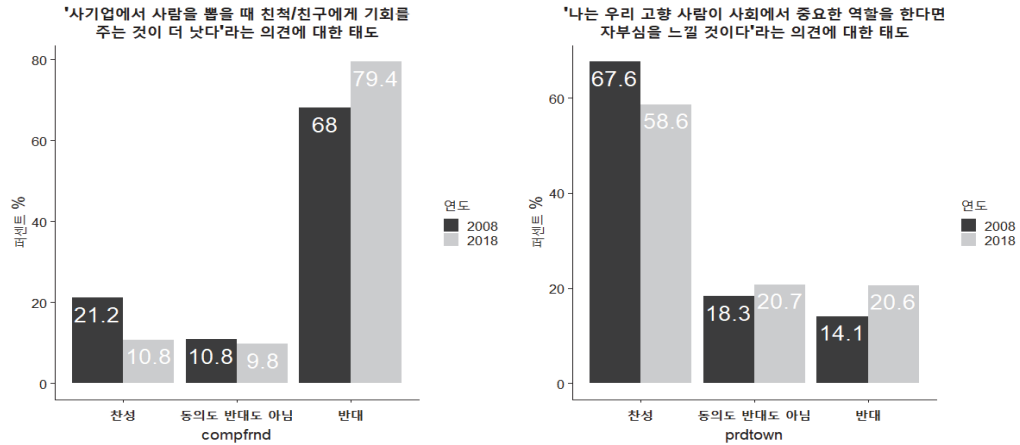


[그림 4-1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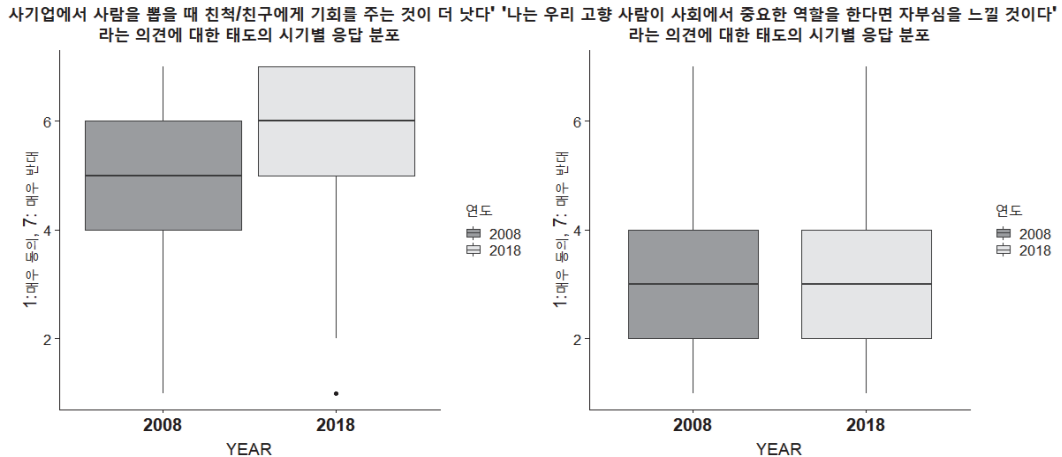


2. 내집단 우선성

[그림 4-13] 내집단 우선성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림 4-14] 내집단 우선성 인식에 대한 변화



두 번째로 내집단 우선성의 경우에도, 두 가지 측정 문항 모두 2008년과 2018년 사이에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3>과 <그림 4-14>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집단 우선성에 대한 태도는 2018년이 2008년에 비해 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사기업에서 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태도는 2008년에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막대그래프와 박스 플롯에서 모두 확인된다.

고향 사람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때 느끼는 자부심에 대한 응답은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스 플롯을 비교해보면,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중앙값과 분포에 큰 변화가 없다. 종합해보면,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리 크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에 따라 응답을 나눠서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사기업에서 지인에게 채용 기회를 주는 의견에 대한 태도부터 살펴보자. <표 4-8>을 살펴보았다.

<표 4-8> 사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친척/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찬성	200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201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2.4	17.9	49.8	18.1	15.0	66.9
	100~199만원	30.1	9.1	60.8	14.4	10.4	75.1
	200~299만원	20.8	11.3	67.9	16.1	8.4	75.5
	300~399만원	19.6	10.8	69.7	16.3	9.4	74.4
	400~499만원	18.5	9.7	71.8	11.9	10.2	77.9
	500만원 이상	15.6	9.1	75.4	5.4	8.3	86.2
연령	18~29세	19.0	13.0	68.1	1.7	6.5	91.8
	30~39세	11.9	9.4	78.7	9.2	5.1	85.7
	40~49세	14.9	10.2	74.9	8.5	8.5	83.1
	50~59세	31.2	9.4	59.4	12.5	13.9	73.6
	60세 이상	31.1	12.0	56.9	20.3	13.8	65.9
학력	고졸 미만	33.1	13.4	53.5	21.9	14.5	63.6
	고졸	22.5	10.4	67.1	12.0	10.5	77.5
	대학 재학	14.8	11.0	74.3	7.5	7.8	84.7
	대졸 이상	13.6	8.7	77.7	5.6	7.8	86.6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에 부정적이었는데 확연히 더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한 문항이라 아주 극적인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찬성이 소폭 줄고 반대가 소폭 늘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저연령 집단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8~29세 집단은 2018년에 사기업에서 지인 채용 의견에 대해서는 2% 이하만의 사람들이 찬성하였으며, 90%이상이 반대하였다. 2008년의 동일 연령 집단과 비교하면, 찬성의 경우 약 17%포인트, 반대의 경우 약 23% 포인트 정도 변화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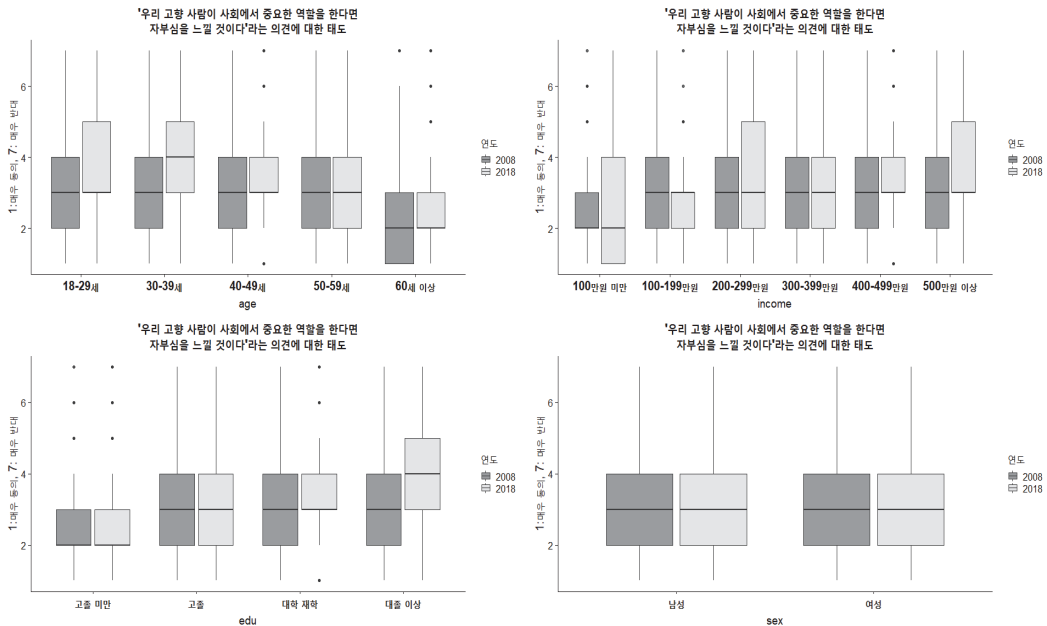
두 번째로 동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4-9〉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찬성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8.1	14.8	7.1	72.8	14.8	12.4
	100~199만원	74.0	14.5	11.5	76.5	12.7	10.8
	200~299만원	63.3	19.8	16.9	59.8	13.7	26.5
	300~399만원	69.1	17.6	13.3	64.5	27.8	7.7
	400~499만원	68.3	15.5	16.2	58.9	17.0	24.1
	500만원 이상	62.2	22.1	15.7	53.3	21.4	25.3
연령	18~29세	56.1	24.1	19.8	50.9	20.3	28.8
	30~39세	64.9	18.6	16.5	44.4	28.1	27.5
	40~49세	68.2	18.7	13.2	51.6	25.7	22.7
	50~59세	68.9	17.1	14.0	65.7	18.0	16.3
	60세 이상	81.0	12.4	6.6	76.9	13.1	10.0
학력	고졸 미만	77.2	15.4	7.4	76.5	12.5	11.0
	고졸	71.9	15.2	13.0	66.2	16.6	17.2
	대학 재학	56.3	25.2	18.4	50.5	25.0	24.5
	대졸 이상	63.3	18.7	18.0	47.8	25.9	26.3

〈그림 4-15〉 고향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의 변화 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인데, 눈에 띄는 점은 30-39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이다. 상대적으로 이 두 집단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편이며, 이는 표와 그래프 모두에서 확인된다. 우선 30-39세 연령 집단에서 타 연령집단에 비해 고향 사람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한 정도가 크다. 찬성 응답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39세 집단에서는 약 20% 포인트의 하락이 관찰된다. 더불어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해당 의견에 대한 부정적 변화가 눈에 띈다. 찬성을 기준으로 15%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타 학력 집단에 비해 큰 변화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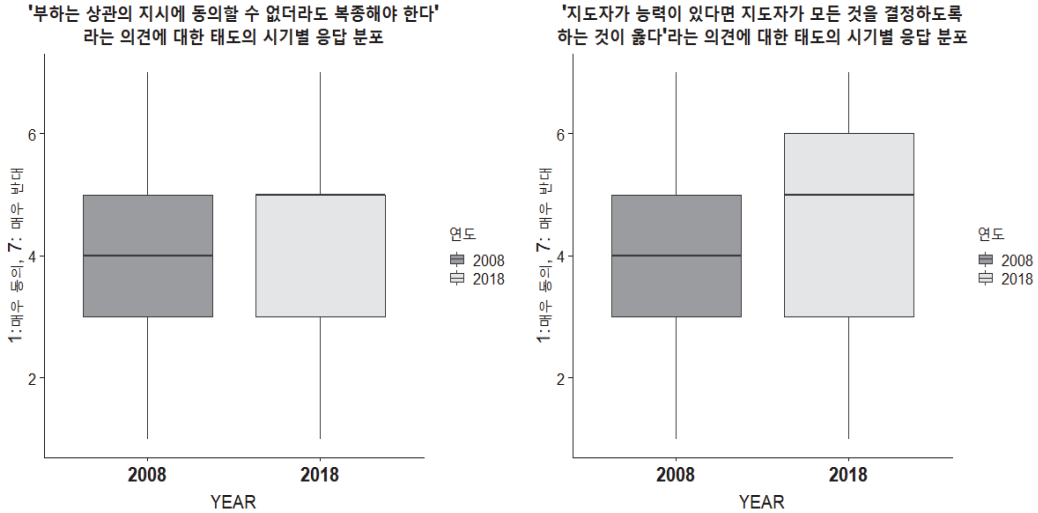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집단 우선성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두 문항 사이의 절대적 태도 차이가 눈에 띈다. 즉 사기업 채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며 2018년에 이르러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했으나,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시간에 따라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해당 의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내집단 우선성과 공정성 인식이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내집단 우선성이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긍정되지만, 직접적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입힐 순간에서는 배격되고 있는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정성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18-29세 연령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 응답을 끌어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3. 위계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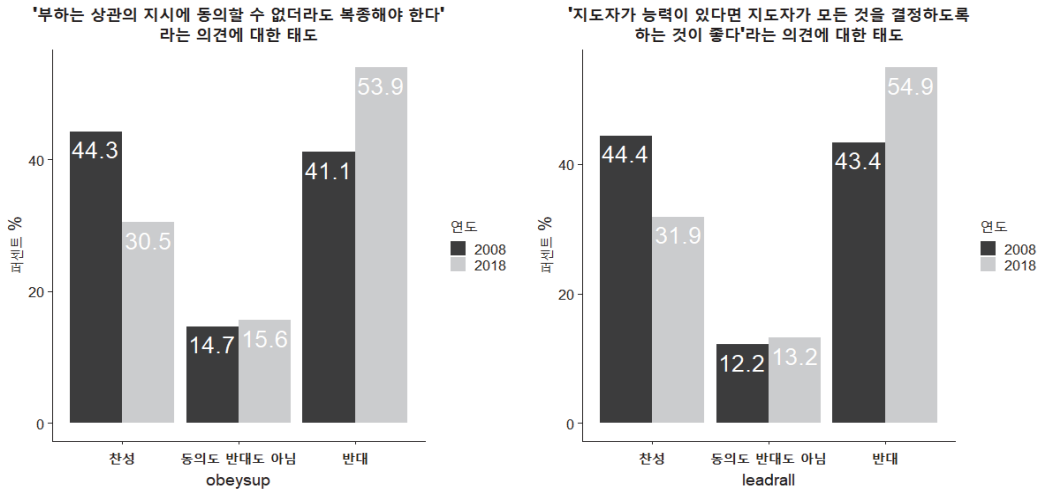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위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았다.

위계에 대한 두 문항에 대해서도 시간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항 모두 2008년에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와 비등한 비중을 갖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부정적 태도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 <그림 4-16>의 비중 변화와 <그림 4-17>의 중앙값 변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항 모두 2008년 중앙값이 중립 응답인 4였으나 2018년에는 ‘다소 반대’인 5로 변화했음이 눈에 띈다.

[그림 4-16] 위계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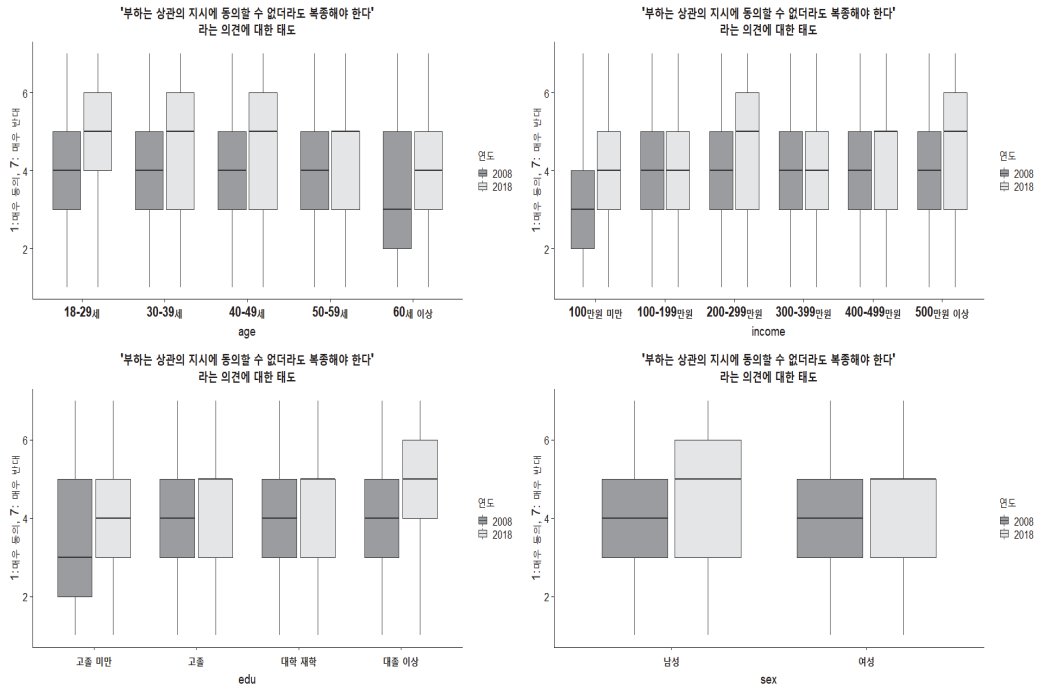


[그림 4-17] 위계에 대한 인식 변화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부하의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4-18>를 보면 18-29세 집단, 1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 대출 이상 집단에서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표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 집단들의 대체적 경향이 중립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에서 중립적인 태도로 변화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4-18]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표 4-10〉 부하는 상관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찬성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성별	남성	45.5	12.8	41.7	31.0	16.6	52.4
	여성	43.0	16.5	40.5	30.0	14.6	55.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8.6	23.1	18.3	46.0	18.6	35.4
	100~199만원	44.6	13.4	42.0	34.1	16.9	48.9
	200~299만원	39.8	14.2	46.1	31.3	16.3	52.5
	300~399만원	46.8	10.8	42.4	36.9	14.2	48.9
	400~499만원	39.2	18.8	42.0	33.3	11.7	55.0
	500만원 이상	41.9	12.9	45.2	28.4	14.3	57.3
연령	18~29세	45.6	13.1	41.4	24.8	17.7	57.5
	30~39세	35.8	17.7	46.4	27.0	15.4	57.6
	40~49세	38.9	13.0	48.1	26.1	9.7	64.2
	50~59세	45.7	12.8	41.6	26.7	17.4	55.9
	60세 이상	56.0	16.6	27.4	45.2	17.9	36.8
학력	고졸 미만	51.9	17.2	30.9	41.0	19.0	40.0
	고졸	44.2	14.3	41.5	30.2	16.7	53.0
	대학 재학	39.9	14.9	45.3	31.9	15.7	52.4
	대졸 이상	40.7	12.4	46.9	23.0	12.4	64.6

다음으로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표 4-11〉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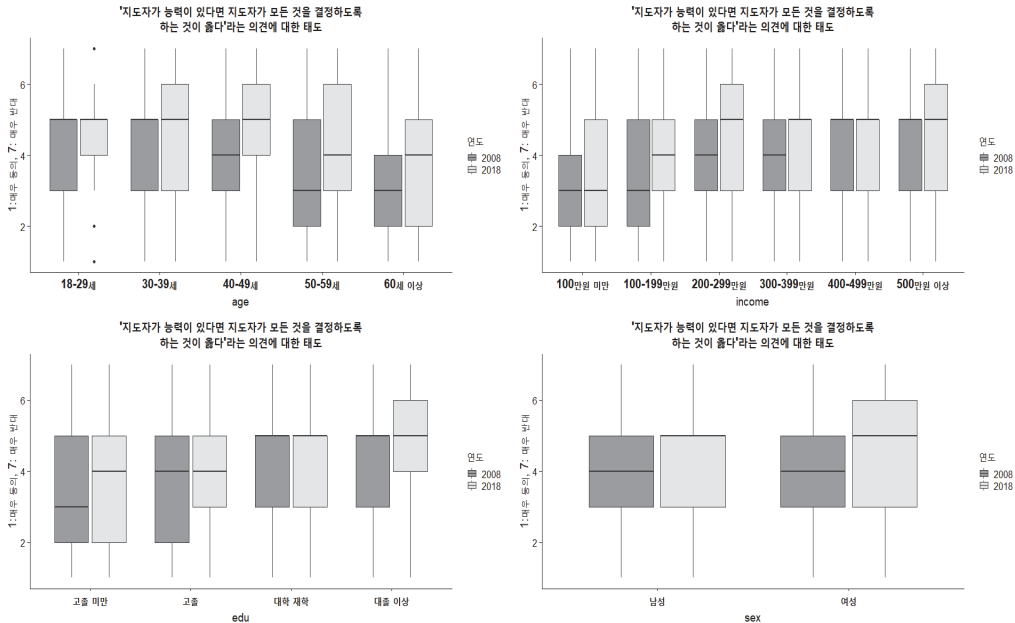
구분		찬성	200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찬성	2018년 동의도 반 대도 아님	반대
성별	남성	44.4	11.2	44.5	34.0	13.3	52.7
	여성	44.5	13.1	42.4	29.8	13.0	57.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0.3	21.9	17.8	54.5	16.2	29.3
	100~199만원	55.3	10.3	34.4	45.4	9.1	45.5
	200~299만원	43.3	13.4	43.3	26.9	15.8	57.3
	300~399만원	40.1	11.4	48.5	35.0	11.5	53.6
	400~499만원	36.3	13.1	50.6	32.0	15.8	52.1
	500만원 이상	41.2	8.5	50.3	25.9	10.7	63.4
연령	18~29세	32.3	15.2	52.5	20.5	18.5	61.0
	30~39세	36.7	9.8	53.5	25.6	11.1	63.3
	40~49세	42.5	10.0	47.5	22.1	12.8	65.1
	50~59세	51.6	10.3	38.1	41.5	8.6	49.8
	60세 이상	61.1	15.3	23.6	47.2	14.7	38.2
학력	고졸 미만	56.4	15.6	28.0	47.5	16.8	35.7
	고졸	49.0	10.7	40.3	35.0	15.2	49.9
	대학 재학	36.9	11.8	51.4	28.1	14.0	57.9
	대졸 이상	34.3	10.9	54.9	22.9	8.7	68.5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연령별 집단에서는 40~49세, 50~59세 집단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들은 2008년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50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40대), 2018년에는 반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변화하였다. 박스 플롯에서도 두 집단의 분포와 중앙값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 소득 200~299만원, 300~399만원 집단도 눈에 띈다. 이들은 중앙값이 4에서 5로 변화하였고 반대가 찬성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들 집단의 전체적 경향이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위계에 대한 두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지도자의 위계에 순종하지 않는 방향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값으로 판단할 때, 여러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집단들의 전체 경향이 중립에서 반대, 혹은 찬성에서 중립으로 옮겨져 왔음을 알 수 있고, 응답자 전체 경향 역시 중립에서 반대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좀 더 탈 위계적 분위기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9]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면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 특성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 순응성이 감소했다. 집단에 순응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전체적인 경향이 중립적인 경향으로 이동하거나 동의의 수준이 떨어졌다. 두 번째로 내집단 우선성과 관련해서도 태도가 소폭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이것이 사회공정성과 관련된 사기업 취업과 관련된 문항에서 좀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2008년에도 부정적이었으나,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반면 고향 사람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은 소폭 떨어지는데 그쳤으며 여전히 전체적으로 해당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것은 내집단 우선성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 집단을 우선하는 태도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계에 대한 태도 역시 전체 집단의 경향이 중립적인 성격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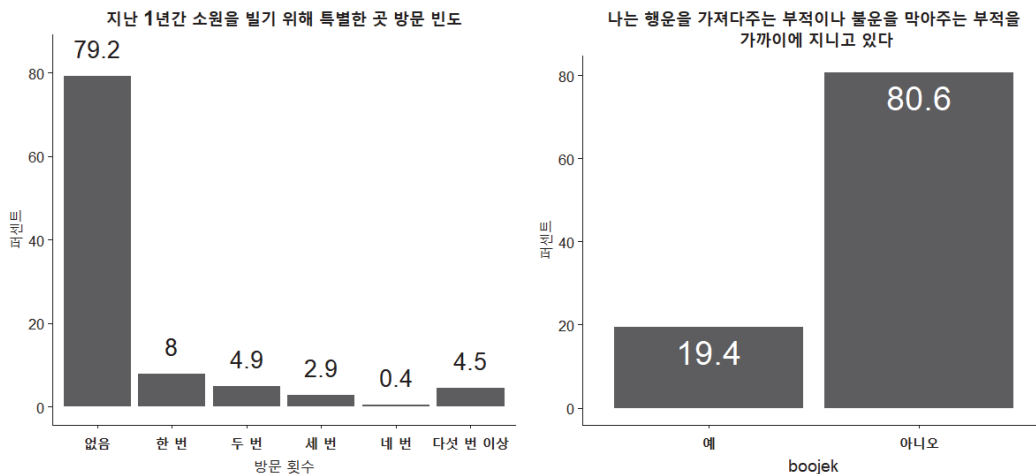
제 5절 전통 신앙에 대한 가치관

전통 신앙이 전통 신앙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오랫동안 인간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전통 신앙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그것의 함의를 살펴본다.

아쉽게도 전통 신앙에 대한 문항은 여러 시기에 걸쳐 조사된 것이 드물다. 특별한 날을 위해 길길이나 흥일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은 2008년과 2018년에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세 개 문항은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 빈도, 소원을 빌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방문한 빈도, 부적 소유 여부) 2018년에만 조사되었다. 우선 2018년에만 조사된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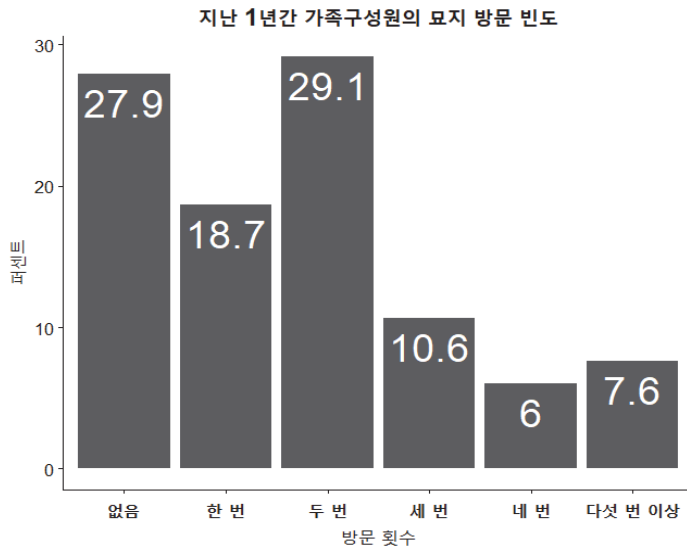
우선 부적 소유나 소원을 빌기 위한 장소 방문 등의 응답에서 전통 신앙의 영향이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0>을 보면 소원을 빌기 위해 어딘가를 방문했거나 부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별, 소득, 연령, 학력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도 전반적으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모든 집단에서 부적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원을 빌기 위해 특별히 어딘가를 방문하지도 않는다.

[그림 4-20] 소원을 위한 장소 방문과 부적 소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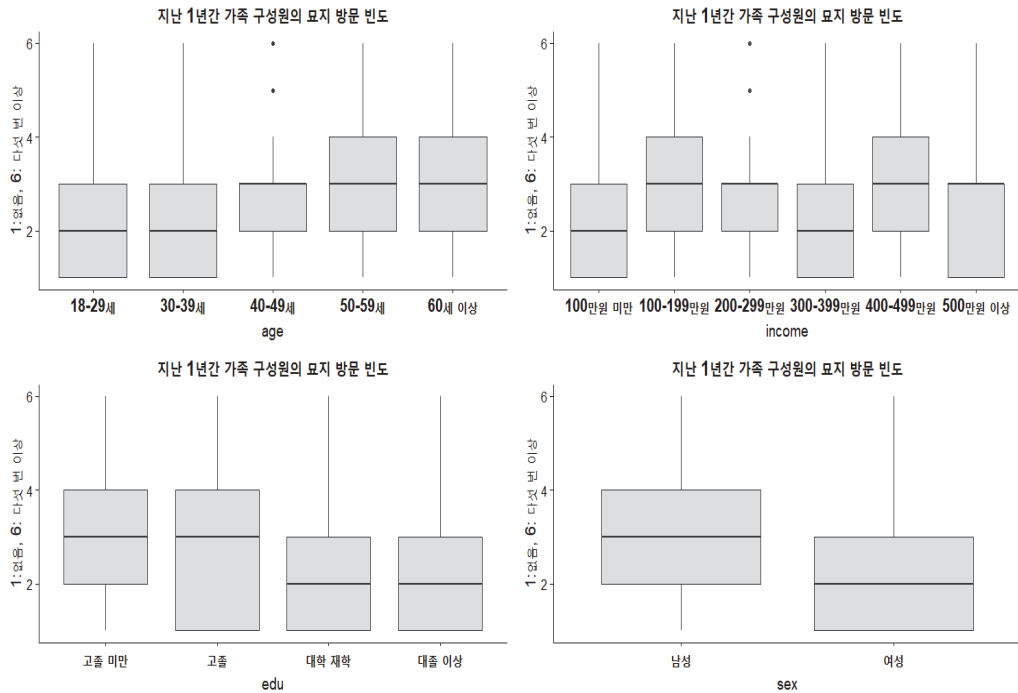
반면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은 조금 다르다.

[그림 4-21] 가족 구성원 묘지 방문 빈도 분포



〈그림 4-21〉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 이상 방문한다는 비중이 70%에 이른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묘지 방문이 앞선 문항에서 언급한 실천과 구분되는 성격을 지녔음을 알려준다. 앞선 문항에서 언급된 것이 거의 사라진 전통 신앙의 흔적이라면,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은 각종 현대 종교나 세속적 삶의 양식에서도 의례적 차원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 횟수를 각종 집단 구분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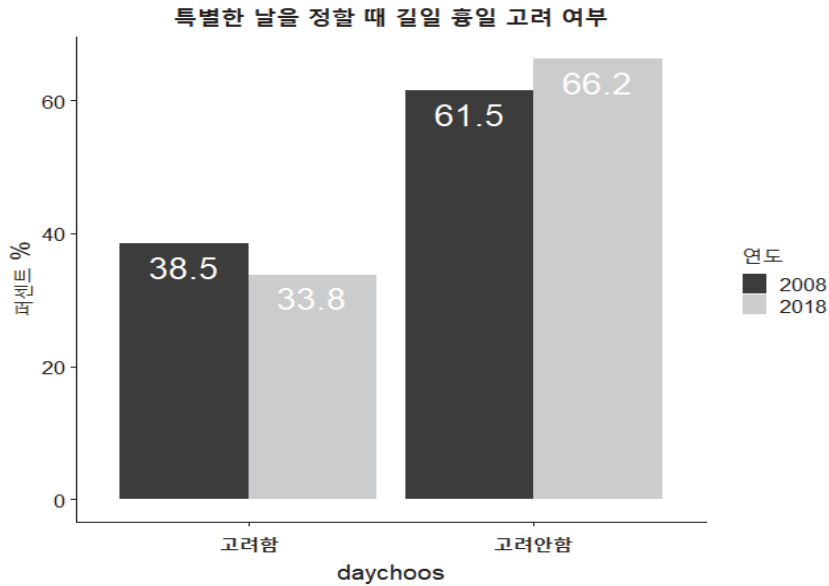
[그림 4-22] 가족 구성원 묘지 방문 빈도 분포



〈그림 4-22〉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방문 빈도가 높은 경향이 약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방문 빈도가 높다. 이는 묘지 방문에 대한 의례나 믿음에 해당 집단이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길일과 흉일을 고려하는지의 여부는 전통신앙과 관련된 문항 중 유일하게 2008년과 2018년 두 시기에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응답은 〈그림 4-23〉와 같다. 보다시피, 10년 전에 비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적 소유나 소원을 빌기 위해 어딘가를 방문하는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편이나,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며, 10년에 걸쳐 이런 경향은 더욱 확대되었다. 〈표 4-12〉는 성별, 소득, 연령, 학력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거의 모든 집단에서 고려한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100만원 미만, 200-299만원, 대졸 이상 집단에서 고려한다는 응답이 아주 조금 증가한 결과가 관찰된다.

[그림 4-23]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 흉일 고려 여부



〈표 4-12〉 특별한 날을 정할 때 길일과 흉일 고려 여부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찬성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찬성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성별	남성	37.2	62.8	31.8	68.2	13.3	52.7
	여성	39.8	60.2	35.7	64.3	13.0	57.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0.8	59.2	40.9	59.1	16.2	29.3
	100~199만원	42.0	58.0	39.9	60.1	9.1	45.5
	200~299만원	37.1	63.0	40.4	59.6	15.8	57.3
	300~399만원	41.0	59.1	27.4	72.6	11.5	53.6
	400~499만원	37.0	63.1	33.8	66.2	15.8	52.1
	500만원 이상	36.0	64.0	33.1	66.9	10.7	63.4
연령	18~29세	36.5	63.5	23.5	76.5	18.5	61.0
	30~39세	36.8	63.2	31.3	68.7	11.1	63.3
	40~49세	38.3	61.8	36.0	64.0	12.8	65.1
	50~59세	36.4	63.6	34.2	65.8	8.6	49.8
	60세 이상	44.5	55.5	41.8	58.2	14.7	38.2
학력	고졸 미만	45.2	54.9	39.7	60.3	16.8	35.7
	고졸	42.2	57.8	37.7	62.3	15.2	49.9
	대학 재학	35.3	64.7	29.0	71.0	14.0	57.9
	대졸 이상	30.8	69.2	30.9	69.1	8.7	68.5

종합해봤을 때, 한국인이 전통 신앙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원을 빌기 위한 장소 방문이나 부적 소유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길일 흉일 고려는, 고려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에서는 2008년, 38.5% 2018년 33.8%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간 고려한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은 상대적으로 아직 많은 이들이 실천하는 행동이다. 여성보다는 남성,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방문 빈도가 약간 더 많다. 이는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이 전통 신앙 혹은 의례 중 현대 사회에 가장 잘 정착된 실천임을 보여준다.

제 6절 가치관 특징과 변화의 정책적 함의

이제까지 가족과 소속 집단 그리고 전통 신앙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이 10년 전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네 가지이다. 첫째, 가족의 응집성과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집단 및 조직 내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집단들은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칙과 노하우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세대 간 가치관의 괴리와 그에 따른 갈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이해를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할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각 정책 함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경우, 남성 가장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고,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경향이 찬성에서 중립으로, 집단에 따라서는 아예 반대로 전환되었을 만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준다.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 역시, 2008년에는 중양값이 <3: 다소 동의>였지만, 2018년에는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으로 바뀌었다. 반면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버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다.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집단 순응성과 내집단 우선성, 그리고 위계에 대한 복종 경향 모두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체적인 경향을 기준으로 보면, 집단 순응성에 대한 응답은 2008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2018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이 감지되며, 특히 대다수의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의 중앙값은 <3: 다소 동의>에서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으로 변화하였다. 내집단 우선성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두 문항의 절대적 수준은 크게 다르다. 사기업에서 지인에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은 2008년에도 아주 부정적이었으며, 2018년에는 더 부정적 경향이 강화된다. 고향 사람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가 관찰되나, 여전히 그것에 동의하는 비중이 우세하다. 앞서 말했듯, 이는 내집단 우선성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뚜렷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억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긍정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위계에 대한 태도 역시 위계에 부정적인 쪽으로 이동하였다. 2008년에는 두 문항 모두 중앙값이 <4: 동의도 반대도 아님>이었는데, 2018년에는 <5: 다소 반대>로 이동하였다. 위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전통 신앙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유일하게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만이 여전히 넓은 범위에서 실천되는 의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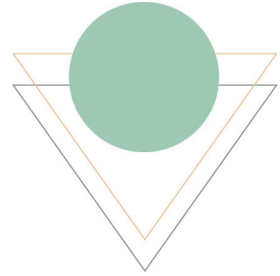
앞서 말했듯, 이런 결과들이 가지는 사회 정책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이다. 첫째, 가족의 응집성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서 파생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 가장이라는 전통적인 리더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우선성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변화라는 말은 아니다. 과거의 강한 응집성은 일부 가족 성원의 희생으로 유지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과거에는 억제되었던 가정 내 성원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일 수도 있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일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이 늘어나면, 자연히 가족이 과거 수행한 전통적인 기능, 예컨대 양육이나 노후 보장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가족 내 건강한 합의와 소통문화를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비추어볼 때, 집단 및 조직 내 갈등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단 자체의 힘과 리더의 권위로 억제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다. 민주 사회에서 이견과 갈등은 더 나은 해답과 대안을 찾기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과 갈등에서 대안을 고안하고 합의에 이르는 노하우를 가지지 못하면, 이는 자칫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집단, 예를 들어 기업과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세밀하게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구성원을 교육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세대 간 갈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저연령, 고소득, 고학력 집단의 시간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두드러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해당 집단들이 나머지 집단들과 가치관 차원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중 특히 두드러진 것이 저연령층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18-29세 집단의 경우, 남편 중심성, 가족 우선성, 집단 순응성, 상관에 대한 복종 등, 굉장히 많은 문항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줬다. 애초에도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두드러지게 전통 가족의 역할에 부정적이며, 집단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향후 큰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의 사회적 영향을 클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가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과 공동체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다. 성원의 소득이나 학력이 동질적인 집단은 존재할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세대로 이루어진 조직은 많지 않다. 한 세대만이 존재하는 가정이나, 성원의 연령이 모두 비슷한 회사가 희소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커지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 및 조직 내 갈등이 세대 간 격차와 겹쳐 증폭될 공간이 무척 크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이 위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합의에 이르는 절차와 기술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대 간 이해를 강화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회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력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기업에 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압도적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반대가 79.4%에 이르며, 18-29세 연령층에서는 91.8%의 반대가 관찰된다. 한 가지 문항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최근 고위층이 개입된 채용 비리에 터져 나온 사회적 분노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한국 국민이 공정성에 민감한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분명 건강한 태도이나, 정책이 늘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에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즉 공정성과 얼핏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원칙, 예를 들어 분배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 예측된다.



V. 문화교류와 세계화

박 효 민

V. 문화교류와 세계화

박효민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 연구소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이번 장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 현상에 따른 한국인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세계화라는 단어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면서도 그 의미나 범위, 영향력이 불확실한 개념도 드물 것이다. 사회학자 기든스는 세계화 혹은 지구화를 뜻하는 globaliza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는 인구집단들이 서로 간에 보다 가깝고 즉시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단일한 운명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 사회를 창출하는 것¹⁰⁾

물론 위와 같은 세계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물자와 인력의 빈번한 이동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19세기부터 발생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발한 세계화를 체험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Giddens 2015).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력의 이주가 활발해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매체들이 거의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문화적인 세계화가 함께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도 늘어났는데, 한국의 경우 미주나 유럽의 서양의 문화가 보다 쉽게 들어오게 됨과 동시에,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막혀있었던

10)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필립 W 서튼. 2015.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동녘. p. 42.

동북아시아 국가의 문화와도 교류가 시작되었다.

우선 일본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1965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는 수립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문화는 “왜색문화”라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어 오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부터 이후 2004년에 이르는 6년 동안 4차에 걸쳐 비로소 단계적으로 대중문화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1998년의 1차 개방에는 제한적으로 일본영화와 일본어판 만화의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1999년 2차 개방에서는 영화의 개방폭을 넓히고 대중가수 공연이 허용되었다. 2000년 3차에서는 미성년자 관람가 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부, 그리고 대중가수 공연, 음반 등의 수입이 허용되었고,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친 4차 개방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까지 거의 모든 범위가 개방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오랫동안 이웃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서로 다른 체제가 수립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실상 문화교류 단절되어 왔으며, 홍콩이나 대만을 통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중국문화와의 교류가 있었을 뿐이다. 이후 중국의 개방정책과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통해 문화교류의 물꼬가 트였으며, 1990년대 외국인력의 유입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중국의 문화도 급속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

즉, 한국과 이웃한 일본과 중국은 실질적으로 대중문화의 교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당히 빠르게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서의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 동아시아가 하나의 가치관, 혹은 문화권으로 묶일 수 있는가, 묶인다면 어떠한 차원으로 묶일 수 있는가, 이들 간의 문화적 교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은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으로 한국사회는 199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 분야에 이른바 “국제적 표준”에 대한 담론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이해,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사용, 외국에서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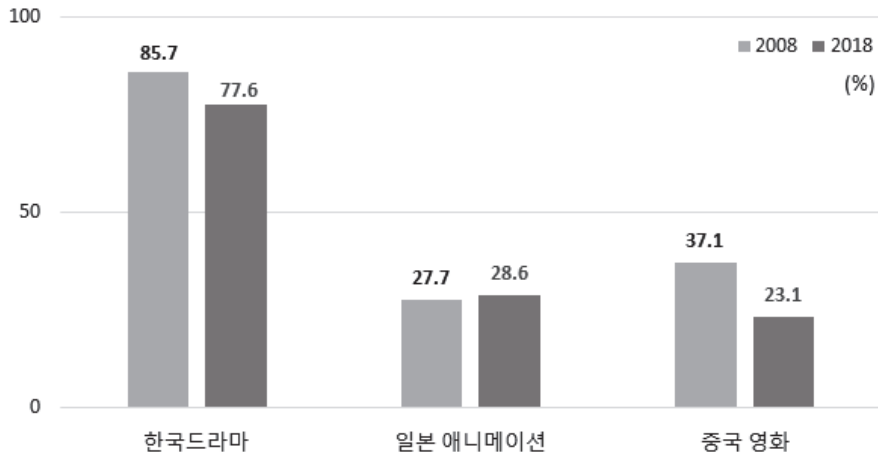
제 2 절 자료 분석 결과

동아시아 3국간의 문화교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8년과 이번 2018년 실시된 동아시아사회조사(EASS)의 설문 문항 중 문화교류 측면을 측정한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 다룰 문항들은 크게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중국의 영화, 한국 드라마 등 동아시아 3국의 영상물을 관람하는 비율,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국제문제를 접하는 매체, 응답자의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교육, 훈련 경험 여부 등이다.

1. 미디어 콘텐츠 이용

우선 일본과 중국, 한국에서 각기 다른 국가들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77.6%의 응답자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28.6%는 일본 애니메이션, 23.1%는 중국 영화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영화를 본다는 비율은 37.1%에서 23.1%로 14.0%p 하락하여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의견은 27.7%에서 28.6%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 2008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10%p 가까이 더 높았던 반면, 2018년 조사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응답자 비율이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자 비율 보다 오히려 5%p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중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그림 5-1] 한, 중, 일 미디어 콘텐츠 이용률: 2008년과 2018년 비교



가.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여성은 26.5%가 본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0.5%가 본다고 응답하여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2008년의 각각 여성 26.0%, 남성 28.1%의 차이에 비해 약간 커진 것이다(표 5-1).

〈표 5-1〉 일본 애니메이션 관람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본다	안 본다	계 (N)	본다	안 본다	계 (N)
전체		27.0	73.0	1,505	28.6	71.4	1,027
성별	남성	28.1	71.9	693	30.5	69.5	508
	여성	26.0	74.1	812	26.5	73.5	52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2	92.8	195	10.7	89.3	84
	100-199	23.7	76.4	190	18.1	81.9	72
	200-299	24.9	75.2	265	34.8	65.2	89
	300-399	34.3	65.7	272	29.0	71.0	107
	400-499	33.5	66.5	186	28.8	71.2	118
	500만원 이상	29.2	70.8	357	31.0	69.0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1.0	79.0	994	22.4	77.6	637
	배우자 없음	39.8	60.2	509	38.0	62.0	384

구분		2008			2018		
		본다	안 본다	계 (N)	본다	안 본다	계 (N)
연령	18-29	51.2	48.8	293	51.8	48.2	195
	30-39	42.4	57.6	361	43.5	56.5	186
	40-49	25.4	74.6	347	32.2	67.8	214
	50-59	6.8	93.3	201	12.4	87.6	202
	60세 이상	4.8	95.2	301	7.4	92.6	230
학력	고졸 미만	8.5	91.5	361	11.6	88.4	199
	고졸	24.7	75.3	423	23.0	77.0	252
	대학 재학	42.8	57.2	315	41.8	58.2	261
	대졸 이상	33.9	66.1	406	32.5	67.5	314

수입과 연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비율이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10.7%만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응답하였으나,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대인 가구에서는 34.8%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에서 역시 약 30.0% 내외의 응답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이다. 18-19세를 포함한 20대에는 51.8%, 30대는 43.5%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12.4%, 60대는 7.2%로 떨어져 연령별 일본 문화에 대한 수용성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2.4%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8.0%로 그 비율이 올라가 큰 차이를 보였다.

나. 중국 영화

중국 영화의 경우 이를 본다는 응답이 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여 나타나, 남성의 경우 27.1%가 본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19.2%에 그쳤다. 반면, 연령이나 혼인상태별로 응답의 큰 차이를 보인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중국 영화의 경우 혼인상태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 이상의 응답자들이 중국 영화를 본다고 응답한 반면 18-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12.3%만이 중국 영화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에 비해 2018년 조사에서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률이 줄어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2).

〈표 5-2〉 중국 영화 관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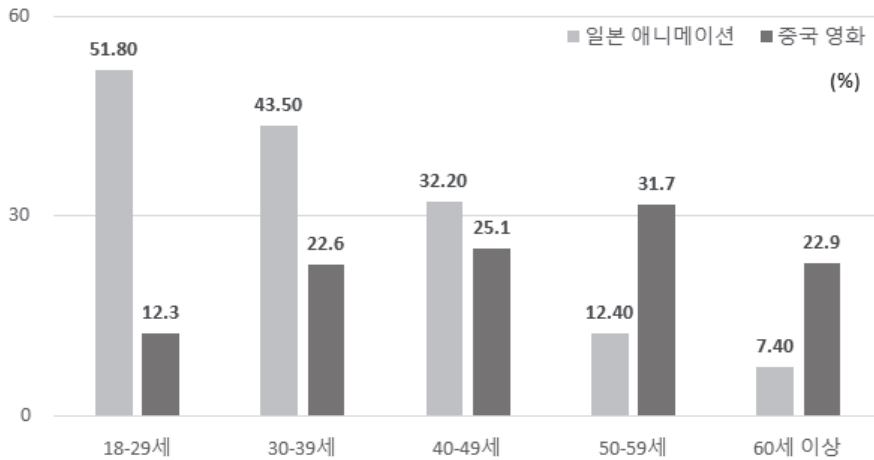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본다	안 본다	계 (N)	본다	안 본다	계 (N)
전체		38.4	61.6	1,506	23.1	76.9	1,028
성별	남성	44.7	55.3	693	27.1	73.7	509
	여성	32.4	67.6	813	19.2	82.3	52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8.6	81.4	196	18.1	84.9	83
	100-199	37.5	62.5	190	25.4	79.6	71
	200-299	36.6	63.4	265	23.6	76.2	89
	300-399	43.4	56.6	272	23.4	75.0	107
	400-499	43.6	56.4	186	24.4	76.0	119
	500만원 이상	41.8	58.3	357	24.9	76.4	405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9.2	60.8	994	24.8	76.3	638
	배우자 없음	36.8	63.2	510	19.3	81.4	383
연령	18-29	40.7	59.3	293	12.3	87.1	195
	30-39	43.7	56.4	361	22.6	76.3	186
	40-49	46.7	53.3	347	25.1	75.0	215
	50-59	42.4	57.6	201	31.7	73.4	202
	60세 이상	18.2	81.8	302	22.9	79.6	231
학력	고졸 미만	24.2	75.8	362	15.2	85.5	198
	고졸	44.8	55.2	423	26.5	73.6	253
	대학 재학	43.1	56.9	315	22.6	77.1	261
	대졸 이상	41.1	58.9	406	25.7	76.8	315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응답과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의 비율 분포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젊은 연령층에서는 중국 영화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비율이 높았으나 40대에서 그 비율이 비슷해지고, 5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올라가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비해 중국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문화컨텐츠가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장르의 특성상 노년층 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향유하여, 연령효과도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중국의 영화가 일본과 중국 각국의 영상 컨텐츠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가정한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영상물 소비 선호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림 5-2] 일본 애니메이션과 중국 영화의 연령별 관람률



다.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경우 77.6%의 응답자가 본다고 응답하여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영화에 비해 3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국 영상물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영상 콘텐츠에 비해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조사에 비해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응답이 8.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19세를 포함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한국드라마를 본다는 응답이 70% 초반대로 나타나, 80%대의 응답 비율을 보인 4-50대에 비해 낮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로 한국 드라마 시청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 영상물과는 달리 한국 드라마의 경우 여러 인구집단별 응답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표 5-3).

〈표 5-3〉 한국 드라마 관람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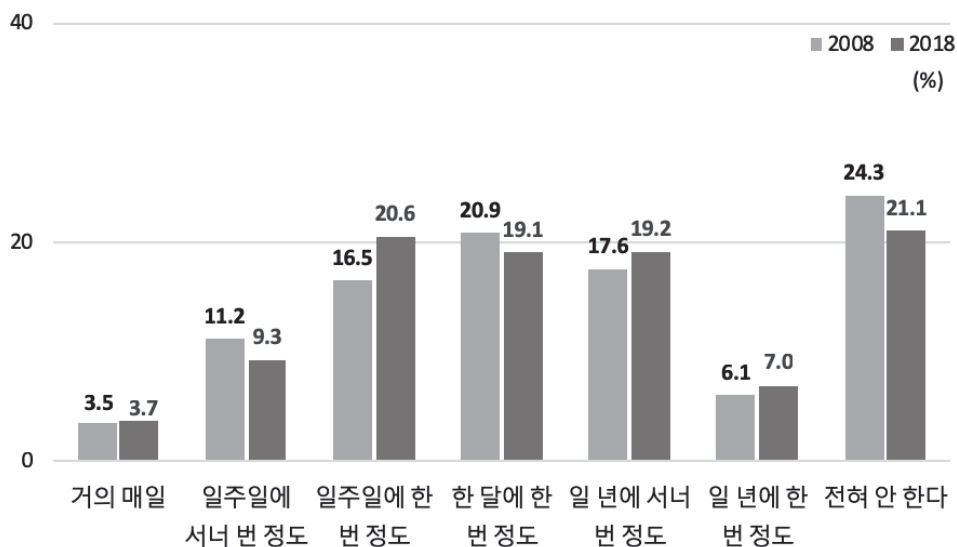
구분		2008			2018		
		본다	안본다	계 (N)	본다	안본다	계 (N)
전체		85.7	14.3	1,508	77.6	22.4	1,031
성별	남성	80.4	19.6	693	70.8	29.2	510
	여성	90.7	9.3	815	84.3	15.7	521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4.1	15.9	197	80.7	19.3	83
	100~199	86.3	13.7	190	83.3	16.7	72
	200~299	86.9	13.1	266	84.3	15.7	89
	300~399	86.5	13.5	272	75.0	25.0	108
	400~499	84.3	15.7	186	73.3	26.7	120
	500만원 이상	85.4	14.7	357	76.6	23.4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85.2	14.8	995	79.8	20.2	639
	배우자 없음	86.7	13.3	511	73.8	26.2	385
연령	18~29	85.6	14.4	293	71.6	28.4	194
	30~39	87.0	13.0	361	73.0	27.0	185
	40~49	84.2	15.8	347	81.8	18.2	214
	50~59	85.8	14.2	201	82.7	17.3	202
	60세 이상	85.9	14.2	304	78.6	21.4	234
학력	고졸 미만	87.6	12.4	363	83.1	16.9	201
	고졸	89.5	10.5	424	77.8	22.2	252
	대학 재학	84.8	15.2	315	78.5	21.5	260
	대졸 이상	80.3	19.7	406	73.1	26.9	316

2. 국제문제

가. 국제문제관심도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인들과 만나서 국제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질문하였다. 2018년도 조사 결과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0%의 응답자가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제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일 년에 서너 번이라는 응답은 19.2%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매일 국제문제를 논의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응답 패턴은 2008년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전혀 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3%에서 21.1% 줄어들어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3).

[그림 5-3] 국제뉴스를 논하는 빈도: 2008년과 2018년 비교



국제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21.1%의 응답자가 국제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9.7%, 여성은 22.4%가 국제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국제문제 관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소득과 연령, 학력 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7.8%가 국제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100만 원대 응답자는 37.5%, 200만 원대 응답자는 24.7%만이 국제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월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11.3%만이 국제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5-4).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 응답자들은 국제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0%대 이하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에서는 41.0%가 국제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60대 이상과 그 이하 연령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력별로도 고졸 미만 응답자는 45.2%가 국제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고졸 응답자는

24.9%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들 가운데서는 5.4%만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5-4〉 국제문제 논의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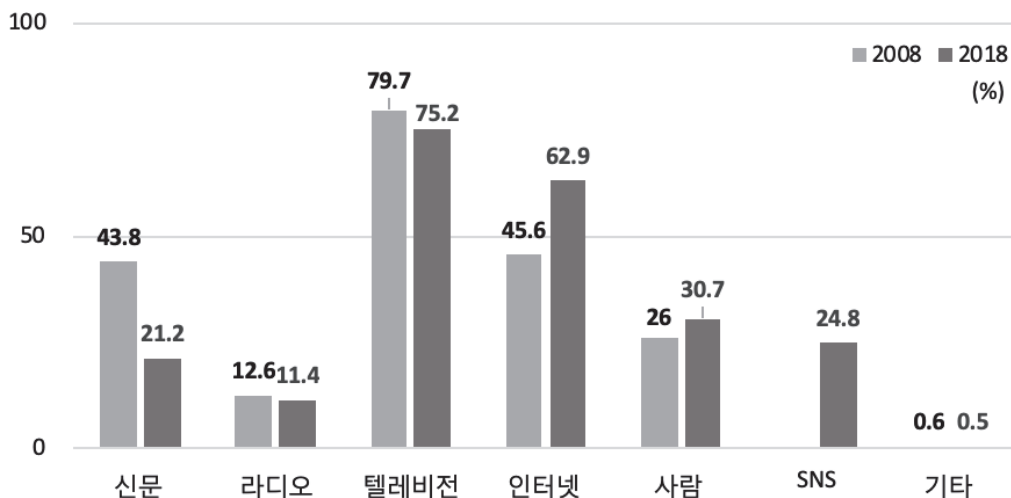
구분		2018						전혀 안 한다	계 (N)
		거의 매일	일주일 에 서너 번	일주일 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서너 번	일 년에 한 번		
전체		3.7	9.3	20.6	19.1	19.2	7.0	21.1	1,029
성별	남성	3.5	8.7	21.1	20.1	20.3	6.7	19.7	508
	여성	4.0	9.8	20.1	18.0	18.2	7.5	22.4	52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4	6.0	7.2	9.6	8.4	8.4	57.8	83
	100-199	2.8	6.9	23.6	12.5	11.1	5.6	37.5	72
	200-299	5.6	10.1	18.0	24.7	6.7	10.1	24.7	89
	300-399	0.0	8.5	22.6	24.5	18.9	7.5	17.9	106
	400-499	3.4	11.9	21.2	16.1	22.0	11.9	13.6	118
	500만원 이상	3.2	11.5	23.1	20.6	24.8	5.4	11.3	407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4.4	9.9	19.9	17.3	19.6	7.7	21.2	637
	배우자 없음	2.6	8.6	21.8	21.6	18.4	6.0	21.0	385
연령	18-29	4.1	6.7	26.7	22.6	21.5	4.6	13.8	195
	30-39	3.2	14.1	18.9	25.4	19.5	4.9	14.1	185
	40-49	4.2	10.3	24.9	19.2	20.7	8.0	12.7	213
	50-59	4.0	8.4	22.3	18.8	19.3	7.4	19.8	202
	60세 이상	3.4	7.7	11.5	11.1	15.4	9.8	41.0	234
학력	고졸 미만	3.0	6.5	11.1	11.6	14.1	8.5	45.2	199
	고졸	5.9	5.1	15.8	16.6	21.7	9.9	24.9	253
	대학 재학	1.2	11.2	26.9	21.2	16.5	5.0	18.1	260
	대졸 이상	4.5	12.7	25.5	24.2	22.3	5.4	5.4	314

나.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2018년 조사에서는 텔레비전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62.9%, 다른 사람 30.7%, 사회관계망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매체인 신문은 21.2%, 라디오는 11.4%로 낮게 나타났다. 2008년 자료와 비교해서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매체의 영향력이 감소한 데 반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의 영향력이 늘어났다. 또한, 이번에 새로 응답에 포함된 사회관계망도 신문에

버금가는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들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었다(그림 5-4).

[그림 5-4] 국제뉴스를 접하는 수단별 분포: 2008년과 2018년 비교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은 2008년 조사에서 43.8%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21.2%로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라디오 역시 같은 기간 12.6%에서 11.4%로 줄어들 전통적인 뉴스매체의 약세가 나타났다.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79.7%에서 75.2%로 국제뉴스 전달 매체로서의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이용률 자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다는 응답의 비중으로, 2008년 45.6%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번 2018년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62.9%까지 상승하여 인터넷이 텔레비전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에 새로 포함된 사회관계망 역시 24.8%가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수치는 신문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보다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 신문

각 매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신문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은 전체에 21.2%에 불과하여 10년 전인 2008년 43.8%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서, 지난 10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신문구독률 자체가 하락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장년층이 신문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2008년의 경우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응답자가 신문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40%대를 넘고 특히 30대에서 50대까지는 50%에 가까운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서만 26.4%로 떨어져 신문의 영향력이 비교적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20대에서 40대 응답자들은 신문을 통해 국제문제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세가 뚜렷하였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은 여전히 20% 이상이 신문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5).

〈표 5-5〉 국제뉴스를 신문으로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전체		43.8	56.2	1,506	21.2	78.8	1,031
성별	남성	51.1	48.9	691	26.7	73.3	510
	여성	36.8	63.2	815	15.7	84.3	5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0	89.0	197	15.7	84.3	83
	100~199	35.5	64.5	190	16.7	83.3	72
	200~299	40.2	59.8	265	21.3	78.7	89
	300~399	46.0	54.0	272	29.0	71.0	107
	400~499	50.2	49.8	186	23.3	76.7	120
	500만원 이상	57.8	42.2	357	22.2	77.8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46.6	53.4	994	23.3	76.7	640
	배우자 없음	38.0	62.0	510	17.9	82.1	386
연령	18~29	42.8	57.2	293	19.0	81.0	195
	30~39	50.0	50.0	361	15.1	84.9	185
	40~49	49.1	50.9	347	19.6	80.4	214
	50~59	49.0	51.0	200	26.7	73.3	202
	60세 이상	28.5	71.5	303	24.0	76.0	233
학력	고졸 미만	20.0	80.0	362	18.1	81.9	199
	고졸	45.0	55.0	423	16.2	83.8	253
	대학 재학	47.9	52.1	315	18.8	81.2	261
	대졸 이상	62.0	38.0	406	29.1	70.9	316

신문을 이용하는 빈도는 학력별로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 학력에서 신문을 통해 국제문제를 접한다는 응답은 줄어들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신문 이용률은 29.1%로 비교적 높게 유지돼 10%에 머문 다른 집단에 비해 2008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높았다.

□ 라디오

라디오의 경우 11.4%의 응답자만이 국제뉴스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어 12.6%의 응답자가 라디오를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20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역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자료와 비교해볼 때 성별로는 여성의 이용률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여성에 비해 라디오를 많이 활용하는 남성의 라디오 이용률이 14.9%에서 13.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젊은 층의 감소세가 뚜렷하여 18-19세를 포함한 20대에서는 5.1%, 30대에서는 12.9%만이 라디오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라디오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40대에서는 19.2%, 50대에서는 11.4%가 라디오를 통해 국제뉴스를 듣고 있으며, 60대 이상도 8.2%가 라디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국제뉴스를 라디오로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전체		12.6	87.4	1,506	11.4	88.6	1,031
성별	남성	14.9	85.1	691	13.1	86.9	511
	여성	10.4	89.6	815	9.8	90.2	5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3	92.8	197	6.0	94.0	83
	100-199	8.8	91.2	190	11.1	88.9	72
	200-299	11.4	88.6	265	8.9	91.1	90
	300-399	12.8	87.2	272	14.0	86.0	107
	400-499	13.4	86.6	186	12.5	87.5	120
	500만원 이상	16.6	83.4	357	13.3	86.7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3.9	86.1	994	15.5	84.5	640
	배우자 없음	9.8	90.3	510	4.9	95.1	386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연령	18-29	10.3	89.7	293	5.1	94.9	195
	30-39	16.4	83.6	361	12.9	87.1	186
	40-49	16.7	83.3	347	19.2	80.8	214
	50-59	11.6	88.4	200	11.4	88.6	202
	60세 이상	7.6	92.4	303	8.2	91.8	233
학력	고졸 미만	6.8	93.2	362	9.0	91.0	200
	고졸	13.7	86.3	423	10.3	89.7	253
	대학 재학	12.6	87.5	315	11.1	88.9	261
	대졸 이상	17.0	83.0	406	14.2	85.8	317

□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2008년 조사에서나 2018년 조사에 모두 국제뉴스를 접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으로 나타나 변함없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전체의 75.2%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국제뉴스 접촉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19세를 포함한 2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올라가, 30대에는 58.1%, 40대는 74.3%, 50대는 85.6%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인 89.7%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TV를 통한 국제뉴스 접근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 미만은 90.5%가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 재학의 경우에는 67.0%,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65.2%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7〉 국제뉴스를 텔레비전으로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전체		79.7	20.4	1,506	75.2	24.8	1,031
성별	남성	77.9	22.1	691	74.1	25.9	510
	여성	81.4	18.6	815	76.2	23.8	521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1.6	18.4	197	88.0	12.0	83
	100-199	84.3	15.7	190	75.0	25.0	72
	200-299	80.6	19.4	265	75.6	24.4	90
	300-399	78.7	21.3	272	71.3	28.7	108
	400-499	79.0	21.0	186	80.0	20.0	120
	500만원 이상	77.3	22.7	357	72.9	27.1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83.1	16.9	994	77.2	22.8	640
	배우자 없음	72.2	27.8	510	71.4	28.6	385
연령	18-29	67.1	32.9	293	64.1	35.9	195
	30-39	80.2	19.8	361	58.1	41.9	186
	40-49	81.4	18.6	347	74.3	25.7	214
	50-59	88.0	12.0	200	85.6	14.4	202
	60세 이상	83.2	16.9	303	89.7	10.3	234
학력	고졸 미만	86.5	13.5	362	90.5	9.5	200
	고졸	85.2	14.8	423	84.1	15.9	252
	대학 재학	74.7	25.3	315	67.0	33.0	261
	대졸 이상	71.1	28.9	406	65.2	34.8	316

□ 인터넷

전반적으로 신문 이용자의 감소와 더불어 이전 2008년 조사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매체는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지난 2008년 45.6%가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62.9%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67.1%가 인터넷으로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여 58.8%가 인터넷을 이용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여성에 비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월평균 가구소득과 연령에 따른 이용률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우선,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가구의 14.3%만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대인 응답자는 37.5%, 200만 원대인 응답자는 61.1%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응답자는 78.3%가 인터넷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령대별로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는 85.6%, 30대는 86.6%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지만, 40대는 그 비율이 73.0%, 50대는 56.9%로 다소 줄어들고 60세 이상은 20.6%만이 인터넷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득수준별,

연령별 인터넷 접근성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들 집단 사이에 정보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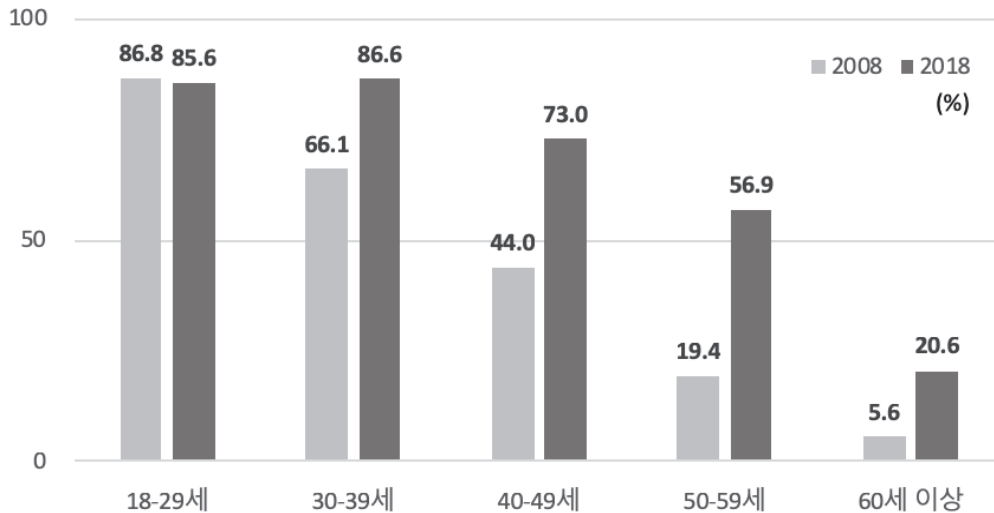
〈표 5-8〉 국제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전체		45.6	54.4	1,506	62.9	37.1	1,031
성별	남성	52.0	48.0	691	67.1	32.9	510
	여성	39.4	60.6	815	58.8	41.2	52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9	94.1	197	14.3	85.7	84
	100-199	24.7	75.3	190	37.5	62.5	72
	200-299	34.7	65.3	265	61.1	38.9	90
	300-399	55.8	44.2	272	57.4	42.6	108
	400-499	65.4	34.6	186	71.7	28.3	120
	500만원 이상	60.2	39.8	357	78.3	21.7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7.4	62.6	994	58.6	41.4	640
	배우자 없음	63.0	37.0	510	69.9	30.1	386
연령	18-29	86.8	13.2	293	85.6	14.4	1026
	30-39	66.1	33.9	361	86.6	13.4	195
	40-49	44.0	56.0	347	73.0	27.0	186
	50-59	19.4	80.6	200	56.9	43.1	215
	60세 이상	5.6	94.4	303	20.6	79.4	202
학력	고졸 미만	6.5	93.5	362	23.0	77.0	233
	고졸	35.2	64.8	423	48.2	51.8	200
	대학 재학	77.9	22.1	315	78.5	21.5	253
	대졸 이상	67.5	32.5	406	87.0	13.0	261

다만, 2008년에 비해 인터넷 사용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은 40대는 44.0%, 50대는 19.4%, 60대 이상은 5.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이 수치가 크게 상승하여 40대는 73.0%, 50대는 56.9%, 60대는 20.6%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10년 전 인터넷을 이용하던 사람은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연령이 올라가는 코호트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를 감안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연령별 정보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그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5).

[그림 5-5] 인터넷으로 국제뉴스를 접하는 비율 연령별 분포: 2008년과 2018년 비교



□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은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7%의 응답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이 많아 월수입 100만원 미만에서는 14.5%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월수입 100만원대 가구의 응답자는 19.4%, 월수입 200만원대의 가구 응답자는 30.0%, 월수입 300만원 대는 26.2%, 월수입 400만원 대는 36.7%의 응답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별로, 만나는 사람의 특성, 혹은 이들의 연결망에서 교환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연령별대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역시 연령대별로 교환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5-9).

〈표 5-9〉 국제뉴스를 다른사람으로부터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그렇다	아니다	계 (N)	그렇다	아니다	계 (N)
전체		26.0	74.0	1,506	30.7	69.3	1,031
성별	남성	24.4	75.6	691	31.0	69.0	510
	여성	27.6	72.4	815	30.3	69.7	5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4.1	75.9	197	14.5	85.5	83
	100-199	22.7	77.3	190	19.4	80.6	72
	200-299	23.2	76.8	265	30.3	69.7	89
	300-399	25.6	74.4	272	26.2	73.8	107
	400-499	26.5	73.5	186	36.7	63.3	120
	500만원 이상	30.1	69.9	357	36.5	63.5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3.4	76.6	994	28.0	72.0	639
	배우자 없음	31.7	68.3	510	34.7	65.3	386
연령	18-29	34.5	65.5	293	44.6	55.4	195
	30-39	25.8	74.3	361	31.2	68.8	186
	40-49	26.2	73.9	347	27.6	72.4	214
	50-59	21.2	78.8	200	34.0	66.0	203
	60세 이상	21.6	78.4	303	18.5	81.5	233
학력	고졸 미만	22.9	77.1	362	23.5	76.5	200
	고졸	25.2	74.8	423	28.5	71.5	253
	대학 재학	33.0	67.0	315	32.3	67.7	260
	대졸 이상	24.2	75.9	406	35.8	64.2	316

□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은 지난 10여년 간 한국 사회 내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번 2018년 조사에 국제관계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로 새로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24.8%의 응답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의 28.4%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응답률은 21.1%에 그쳤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 비율도 높아졌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제뉴스를 접한다는 응답 비율이 6.0%에 그쳤으나, 100만원대 가구는 13.9%, 200만원대 가구는 20.0%, 300만원대 가구는 21.5%, 400만원대 가구는 32.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수입 500만원 이상 가구는 400만원대 가구와 비슷한 31.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이용률도 차이를 보여, 18-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44.8%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30대는 35.5%, 40대는 25.7%, 50대는 16.8%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국제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은 응답률이 5.6%에 그쳐,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차이, 특히 60대 이상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표 5-10).

〈표 5-10〉 국제뉴스를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접하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2018 아니다	계 (N)
전체		24.8	75.2	1,031
성별	남성	28.4	71.6	510
	여성	21.1	78.9	5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0	94.0	83
	100-199	13.9	86.1	72
	200-299	20.0	80.0	90
	300-399	21.5	78.5	107
	400-499	32.8	67.2	119
	500만원 이상	31.0	69.0	406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9.7	80.3	640
	배우자 없음	33.7	66.3	386
연령	18-29	44.8	55.2	194
	30-39	35.5	64.5	186
	40-49	25.7	74.3	214
	50-59	16.8	83.2	202
	60세 이상	5.6	94.4	233
학력	고졸 미만	4.5	95.5	200
	고졸	15.4	84.6	253
	대학 재학	36.0	64.0	261
	대졸 이상	35.4	64.6	316

3. 영어 활용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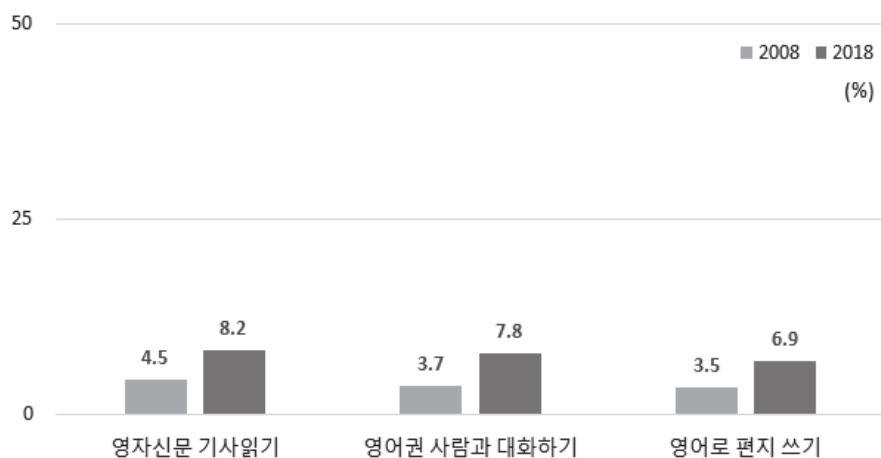
가. 전반적 영어 활용능력

영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 영어의 활용 정도를 통해 국제화의 관심 및 역량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 활용능력은 지난 2008년

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의 경우 영자신문 기사는 4.5%, 영어권 사람과 대화하기는 3.7%, 영어로 편지쓰기는 3.5%의 응답자만이 매우 잘한다, 혹은 잘한다고 응답하여 영어 사용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조사에서는 영자신문 기사 읽기는 8.2%, 영어권 사람과 대화하기는 7.8%, 영어로 편지쓰기는 6.9%의 응답자가 매우 잘하거나 잘한다고 응답하여 영어 활용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10%에 채 미치지 못하였다. 조사의 응답 방식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가 반드시 응답자의 객관적 영어 활용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국제화되고, 일상에서의 영어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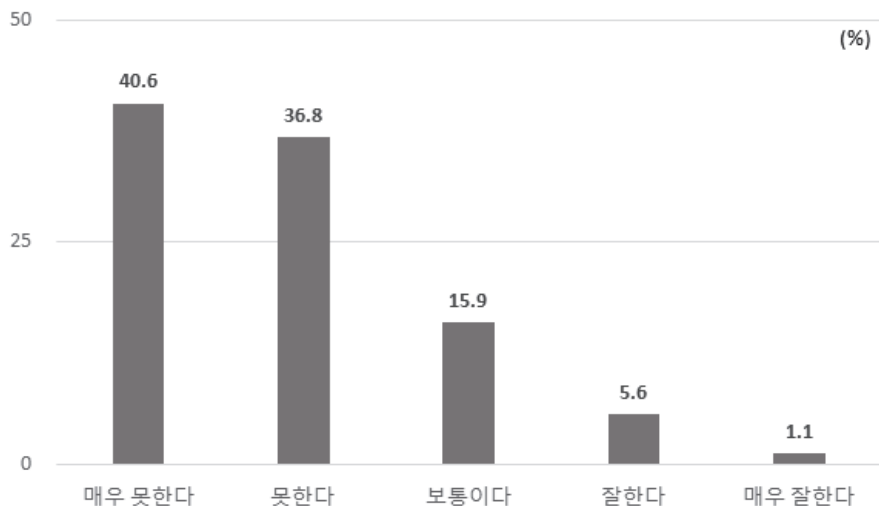
[그림 5-6] 영어 활용능력: 2008년과 2018년의 비교



인구집단별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응답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위에 제시된 영어의 읽기, 말하기, 쓰기 3가지 차원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 분석하였다. 매우 못한다를 1점, 매우 잘한다를 5점으로 놓는다면, 평균점수는 1.91점 정도로 나타났다. 분포별로는 전체의 6.7%만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매우 잘한다(1.1%) 혹은 잘한다(5.6%)의 범주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15.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다수인 77.4%는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못한다(36.8%), 혹은 매우 못한다(40.6%)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5-7).

[그림 5-7] 전반적인 영어 활용능력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 혼인상태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이나 연령과 학력별로 영어 활용능력에 대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못한다의 범주에 가까운 1.35점을 나타냈으며, 가구소득 100만원대 응답자는 1.63점, 200만원대 응답자는 1.72점 등으로 점차 점수가 상승하였다. 가구소득이 500만원대 이상인 응답자들은 못한다와 보통이다의 중간인 평균 2.14점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8세부터 39세 사이 응답자의 점수는 약 2.3점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50대 이상은 1.62점, 60대 이상은 1.43점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영어능력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의 경우 1.27점, 고졸의 경우에는 1.54점으로 나타났으나, 대학 재학의 경우에는 2.0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2.5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5-11).

〈표 5-11〉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종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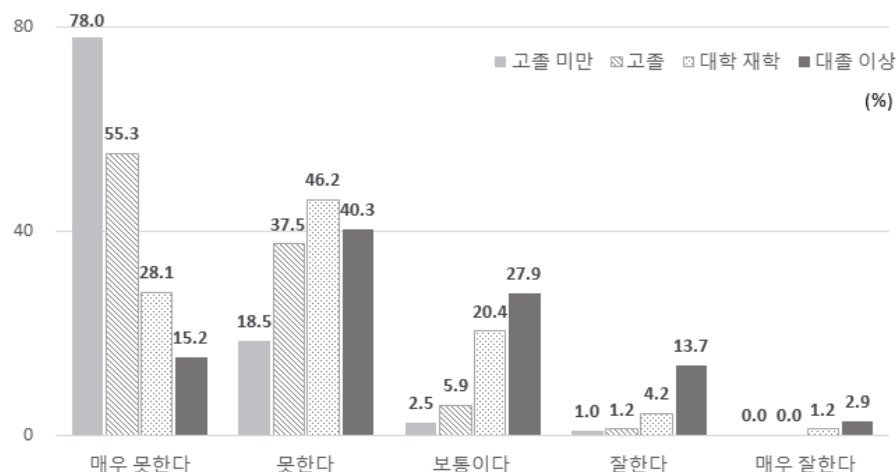
구분		2018	
		영어 활용능력	N
전체		1.91	1027
성별	남성	1.97	507
	여성	1.86	52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35	84
	100-199	1.63	72
	200-299	1.72	88
	300-399	1.84	108
	400-499	1.87	120
	500만원 이상	2.14	403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83	637
	배우자 없음	2.05	384
연령	18-29	2.34	193
	30-39	2.35	185
	40-49	1.96	215
	50-59	1.62	204
	60세 이상	1.43	234
학력	고졸 미만	1.27	200
	고졸	1.54	253
	대학 재학	2.07	260
	대졸 이상	2.50	315

학력별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졸 미만의 경우 78.0%가 매우 못한다, 18.5%가 못한다고 응답하여 96.5%가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졸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으며, 매우 못한다가 55.3%, 못한다가 37.5%로 역시 92.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학 재학의 경우에는 28.1%가 매우 못한다, 46.2%는 못한다고 응답하여 부정평가가 74.3%로 감소하였으며, 잘한다 혹은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각각 4.2%와 1.2%로 나타났다 (그림 5-8).

대학재학과 고졸 이하의 차이도 눈에 띄었지만, 대학재학과 대학 졸업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5.2%만이 매우 못한다, 40.3%만이 못한다고 응답하여, 대학 졸업자들의 부정평가는 55.5%에 그쳤다. 반면 매우 잘한다, 또는 잘한다는 응답은 각각 13.7%와 2.9%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의 실질적인 활용능력이 중등교육기관에서 습득되기보다는 등 대학재학,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 혹은 사회에 나아가 업무를 익히면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8] 학력별 영어 활용능력



나. 읽기

영어 능력별로 살펴보면 우선 영자신문 읽기 능력은 가구소득과 연령, 학력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부터 300만원대 까지는 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4%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 소득 400만원대 가구의 응답자는 10.0%로 약 두 배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 응답자는 11.4%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9세 미만과 30세 이상 39세 이하 응답자의 경우 각각 15.0%와 16.2%의 응답률을 보여 높게 나타났지만, 40대는 7.0%, 50대는 3.0%, 60세 이상은 1.7%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0.5%, 고졸은 1.2%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대학 재학은 7.7%, 대졸 이상은 19.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5-12).

〈표 5-12〉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자신문 읽기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잘함	보통 이 다	못함	계 (N)	잘함	보통 이 다	못함	계 (N)
전체		4.4	16.7	78.8	1,506	8.2	17.9	73.9	1,028
성별	남성	5.6	22.2	72.2	692	8.3	19.3	72.4	508
	여성	3.3	11.4	85.3	814	8.3	16.5	75.2	52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0.6	3.4	96.0	197	4.8	4.8	90.4	83
	100~199	1.4	10.6	88.0	190	4.2	12.5	83.3	72
	200~299	1.7	9.3	89.0	266	4.4	13.2	82.4	91
	300~399	3.1	17.9	79.0	272	5.6	19.6	74.8	107
	400~499	4.9	22.5	72.7	185	10.0	10.8	79.2	120
	500만원 이상	9.6	25.6	64.8	357	11.4	23.3	65.3	403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8	13.3	82.9	995	6.6	15.6	77.8	639
	배우자 없음	5.9	23.8	70.3	509	11.2	21.9	66.8	383
연령	18~29	6.7	30.0	63.2	292	15.0	28.0	57.0	193
	30~39	6.2	20.0	73.8	361	16.2	23.2	60.5	185
	40~49	5.0	18.7	76.2	347	7.0	19.7	73.2	213
	50~49	2.1	9.3	88.7	200	3.0	12.9	84.2	202
	60세 이상	1.6	3.8	94.6	304	1.7	8.1	90.2	234
학력	고졸 미만	1.2	2.1	96.7	362	0.5	4.5	95.0	199
	고졸	1.3	7.0	91.8	424	1.2	7.5	91.3	253
	대학 재학	4.9	24.2	70.9	314	7.7	23.8	68.5	260
	대졸 이상	10.7	35.4	53.9	406	19.5	29.4	51.1	313

다. 말하기

영어권 사람과의 대화 능력에 대한 평가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자신의 영어 대화능력에 대한 평가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앞선 영자신문 읽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18-39세, 학력의 측면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읽기 능력 평가에 대한 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표 5-13〉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권 사람과의 대화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잘함	보통 이 다	못함	계 (N)	잘함	보통 이 다	못함	계 (N)
전체		3.6	13.9	82.5	1,506	7.8	16.8	75.4	1,027
성별	남성	4.6	16.8	78.6	692	7.7	18.5	73.8	507
	여성	2.6	11.1	86.3	814	7.7	15.0	77.3	52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0.6	2.6	96.8	197	2.4	6.0	91.6	83
	100-199	0.5	7.2	92.3	190	1.4	18.6	80.0	70
	200-299	1.7	8.7	89.6	266	4.4	10.0	85.6	90
	300-399	2.3	14.8	83.0	272	5.6	13.1	81.3	107
	400-499	5.8	16.1	78.1	185	8.5	12.7	78.8	118
	500만원 이상	7.1	22.7	70.2	357	10.1	21.5	68.3	404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3	11.0	85.7	995	6.3	14.6	79.2	638
	배우자 없음	4.3	19.8	75.9	509	9.4	20.6	70.0	383
연령	18-29	5.6	25.6	68.8	292	14.1	26.0	59.9	192
	30-39	5.0	17.2	77.9	361	17.8	21.6	60.5	185
	40-49	4.4	12.6	83.0	347	5.2	18.4	76.4	212
	50-49	1.7	7.6	90.7	200	1.5	12.3	86.2	203
	60세 이상	0.8	5.1	94.2	304	2.1	7.7	90.2	234
학력	고졸 미만	0.7	2.5	96.8	362	1.0	2.5	96.5	199
	고졸	0.9	6.7	92.3	424	2.0	8.7	89.3	252
	대학 재학	4.1	20.4	75.6	314	8.0	21.0	71.0	262
	대졸 이상	8.9	27.4	63.8	406	16.9	28.3	54.8	314

라. 쓰기

마지막으로 영어로 편지쓰기 능력의 경우도 앞의 읽기와 말하기의 두 영역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남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연령, 학력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쓰기 능력 역시 앞선 읽기와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연령은 18세 이상 39세미만, 그리고 학력의 경우 대학재학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대학 재학의 경우 5.4%가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은 16.9%가 잘한다고 응답하여 그 차이가 3배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두 영역에서의 차이를 상회하는 차이이다. 이는 아마도 많은 응답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취업여부 및 직업군 포함하여 보다 복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14).

〈표 5-14〉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영어로 편지 쓰기

(단위: %, 명)

구분		2008				2018			
		잘함	보통 이다	못함	계 (N)	잘함	보통 이다	못함	계 (N)
전체		3.2	10.5	86.3	1,506	6.9	12.9	80.2	1,028
성별	남성	4.3	12.7	83.0	692	7.1	13.6	79.3	508
	여성	2.2	8.3	89.5	814	6.7	12.1	81.2	52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0.6	1.7	97.7	197	0.0	6.0	94.0	83
	100~199	1.2	5.2	93.6	190	4.2	8.3	87.5	72
	200~299	1.5	6.3	92.3	266	4.5	7.9	87.6	89
	300~399	2.2	11.3	86.5	272	3.7	13.1	83.2	107
	400~499	3.4	12.1	84.5	185	9.2	8.3	82.5	120
	500만원 이상	6.7	17.5	75.8	357	9.9	15.8	74.3	404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8	7.6	89.6	995	5.8	11.9	82.3	639
	배우자 없음	4.0	16.6	79.4	509	8.6	14.9	76.4	382
연령	18~29	5.0	22.4	72.6	292	13.1	18.8	68.1	191
	30~39	4.5	10.9	84.7	361	15.0	19.3	65.8	187
	40~49	4.1	10.0	85.9	347	4.2	14.0	81.8	214
	50~49	1.3	4.6	94.2	200	3.5	6.9	89.6	202
	60세 이상	0.8	3.2	96.1	304	0.9	7.3	91.9	234
학력	고졸 미만	0.3	2.2	97.5	362	1.0	2.5	96.5	201
	고졸	0.2	4.2	95.6	424	0.4	4.4	95.2	252
	대학 재학	3.5	16.0	80.6	314	5.4	14.9	79.7	261
	대졸 이상	9.1	20.9	70.0	406	16.9	24.3	58.8	313

4. 해외 교육 훈련 경험

해외에서 5일 이상 교육 혹은 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16.2%가 해외 교육,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3.8%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교육 훈련은 13.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에 비해 18.8%를 보인 남성이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의 교육, 훈련 경험 여부는 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6%만이 해외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0만 원대는 11.3%, 200만 원대는 9.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0만 원대는 13.0%, 400만 원대는 15.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응답자는 21.5%가 해외에서의 교육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도 두드러졌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응답자는 3.5%, 고등학교 졸업자는 6.7%만이 해외 교육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학 재학의 경우에는 20.5%, 대졸 이상은 28.6%가 해외 교육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률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5-15).

〈표 5-15〉 해외에서 5일 이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2018 아니오	계
전체		16.2	83.8	1,028
성별	남성	18.8	81.2	510
	여성	13.7	86.3	518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	96.4	83
	100-199	11.3	88.7	71
	200-299	9.0	91.0	89
	300-399	13.0	87.0	108
	400-499	15.0	85.0	120
	500만원 이상	21.5	78.5	405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6.3	83.7	637
	배우자 없음	16.1	83.9	384
연령	18-29	19.1	80.9	194
	30-39	22.7	77.3	185
	40-49	18.7	81.3	214
	50-49	13.9	86.1	202
	60세 이상	8.6	91.4	232
학력	고졸 미만	3.5	96.5	199
	고졸	6.7	93.3	252
	대학 재학	20.5	79.5	259
	대졸 이상	28.6	71.4	315

제 3절 소 결

1. 한국사회 세계화의 모습

이번 장에서는 2008년과 2018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한국사회의 세계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의 응답을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한국사회의 세계화의 흐름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변화의 방향과 정도에서는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변화 양상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별 차이가 벌어 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 각 집단별로 겪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영상매체 이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영화 소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의견도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 영화는 50세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영화의 경우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는 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도 자체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국제문제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와 같은 전통 매체들의 영향력이 감소했으며, 특히 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의 중요도가 올라가 새로운 국제뉴스를 접하는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매체의 사용에서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청, 장년층에서는 인터넷 기반 매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년층에서는 그 활용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를 통해 인터넷 기반 매체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세대별 불평등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영어 활용능력은 2008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여전히 영어는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연령, 소득, 학력 등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수입 측면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 연령별로는 18-39세,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 활용능력에 있어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한국사회 내에 영어 능력습득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턱(threshold)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의 교육훈련 경험 역시 소득수준이나 연령이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에 의해서도 응답이 크게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해외에서의 교육훈련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제언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문화의 세계화 정도는 2008년 조사에 비해 부분적으로 조금 진전이 있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의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매체에 대한 소득, 연령별 차이, 영어 능력에 있어 소득과 연령, 학력의 차이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젊은층,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노년층,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화로 접근하는데 보이지는 않는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와 같은 차이는 매체 활용도에 있어 차이가 컸는데, 전반적으로 전통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사이에서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국제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하는 비율의 경우 연령층에 따라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 비율 역시 그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기존의 매체에 비해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체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세계화, 문화의 다양화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사회집단간 세계화 과정에서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직, 간접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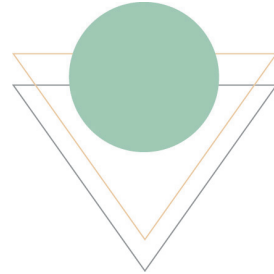
해소를 위한 계층별 지원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한 사회는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다양성의 정도가 사회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차이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 - 교육, 성별, 학력 소득 등 -와 연결이 된다면,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견들을 조율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영어교육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이 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영어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공용어의 위치를 강화해 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영어교육을 위해 각급 공교육 제도부터 사교육 시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는 읽기는 8.2%, 대화하기는 7.8%, 쓰기는 6.9%의 응답자만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8년 조사에 비해 상승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영어교육에 투입되는 여러 자원의 양을 생각한다면 결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영어의 활용능력의 차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과 대학 재학자 집단, 그리고 대학 졸업자 집단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공적교육기관에서의 영어교육 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영어교육이 영어활용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영어교육의 왜곡 현상은 소득별 영어 활용능력의 차이에서도 확인되는데, 소득이 증가 할수록 영어교육에 대한 활용능력은 함께 올라가 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영어 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어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비효율적인 현재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크다 있다. 읽기, 대화하기, 쓰기를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적 교육기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의 양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공교육이 입시제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의 영어교육 역시 입시를 위한 교육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어 활용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제시된 바와 같이 공적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적 노력에 의해 영어 활용능력을 갖춰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계층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는 학력별, 가구소득별로 영어 활용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Ⅵ. 이주와 문화의 확산

김 지 영

VI. 이주와 문화의 확산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조교수

제 1 절 서론

1. 문제제기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stles, Haas and Miller(2014)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가난이나 갈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동을 거듭해 왔다. 16세기 신대륙 발견을 계기로 가속화된 인류의 이동은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시기를 거쳐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 정책이 재정비되면서 아시아권 인구의 이동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남부아시아·아프리카 등 출신국 배경이 다양한 외국인이 노동자로 유입되었다. 한국인의 통제와 감독을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는 1988년 이전까지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유입되던 외국인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로 유입된 외국인 또한 그 후 한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한국인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되었다(설동훈 1997: 131).

외국인이 한국인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인과 반복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인식하는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인과의 문화적 접촉은 1990년대 말 이후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그 양과 질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되었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등

이주의 확산과 문화적 접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흐름 또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인구 이동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지도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이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에서 접촉하는 외국인 ‘주민’으로,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영역의 구성원으로까지 그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문화적 접촉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노동자, 주민, 가족 등의 다양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법적지위 강화에 대한 정책이나 ‘다문화정책’과 같은 정부차원의 생활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표출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강진구, 2014; 전의령, 2015; 육주원, 2016; 김지영, 2017). ‘반다문화’ 흐름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지위를 얻고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주로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나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난민 신분을 남용하는 ‘불량한’ 존재로 묘사하여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친밀한 영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영역으로 각각 확장되어 그 양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외국인과의 실제적 접촉이 증가한 생활 영역은 어디일까?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외국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집단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 한국인은 어떤 지위를 가진 외국인을 ‘낯선’ 존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지위의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의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8년과 2018년 자료를 비교하면서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가운데 외국인 아는 사람의 유무, 직장동료와 동네이웃 그리고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의 유무, 한국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데 대한 인식, 외국인 증가가 한국사회의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응답 조정

이번 장에서는 이주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과 2018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측정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6-1>과 같다.

<표 6-1> 이주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측정 변수

변수 개념	조사 문항	조사 대상 국가 및 국민	2008년/ 2018년
문화 노출 유무	여행경험 유무	중국, 일본, 대만, 동 남아시아, 유럽, 북 아메리카	1: 있다 2: 없다
문화 접촉 현황	아는 사람 유무		
외국인 지위별 수용 의향	직장동료로 수용의향	일본인, 대만인, 중 국인, 동남아인, 미 국/캐나다인, 유럽 인	1: 그렇다 2: 아니다
	동네이웃으로 수용의향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혹은 감소	외국인 전반	1: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 2: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 3: 변화 없기를 바람 4: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 5: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
	결혼이민자의 증가 혹은 감소		
국수주의적 인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을 제한	외국 전반	1: 매우 동의 2: 동의 3: 다소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5: 다소 반대 6: 반대 7: 매우 반대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 국은 국가이익을 추구		
	외국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 는 손상		
세계화의 영향	한국 경제에 부정 혹은 긍정 영향	외국인 전반	1: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2: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3: 다소 긍정적인 영향 4: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도 않은 영향 5: 다소 부정적인 영향 6: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7: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부정 혹은 긍정 영향		
	한국의 자연환경에 부정 혹은 긍정 영 향		

이하의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의견을 긍정적, 부정적, 긍정과 부정 어느 쪽도 아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표 6-1>의 항목 가운데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 국수주의적 인식,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응답은 <표 6-2>와 같이 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6-2〉 응답 조정 비교표

변수 개념	조사 문항	응답 척도	응답 조정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혹은 감소	1: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 2: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 3: 변화 없기를 바람	1. 증가하길 바람 2. 변화 없기를 바람 3. 감소하길 바람
	결혼이민자의 증가 혹은 감소	4: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 5: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	
국수주의적 인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수입을 제한	1: 매우 동의 2: 동의	1. 동의 2. 동의도 반대도 아님 3. 반대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 국은 국가이익을 추구	3: 다소 동의 4: 동의도 반대도 아님 5: 다소 반대	
	외국문화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	6: 반대 7: 매우 반대	
세계화의 영향	한국 경제에 부정 혹은 긍정 영향	1: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2: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3: 다소 긍정적인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긍정적이지도 부정적 이지도 않은 영향 3. 부정적인 영향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부정 혹은 긍정 영향	4: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영향 5: 다소 부정적인 영향	
	한국의 자연환경에 부정 혹은 긍정 영향	6: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7: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응답은 본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하의 분석에서는 ‘매우 증가하기를 바람’과 ‘다소 증가하기를 바람’을 ‘증가하길 바람’으로 ‘다소 감소하기를 바람’과 ‘매우 감소하기를 바람’을 ‘감소하길 바람’으로 리코딩하였다. 국수주의적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구성된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 ‘동의’, ‘다소 동의’를 ‘동의’로, ‘다소 반대’, ‘반대’, ‘매우 반대’를 ‘반대’로 리코딩하였다.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다소 긍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리코딩 하여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제 2 절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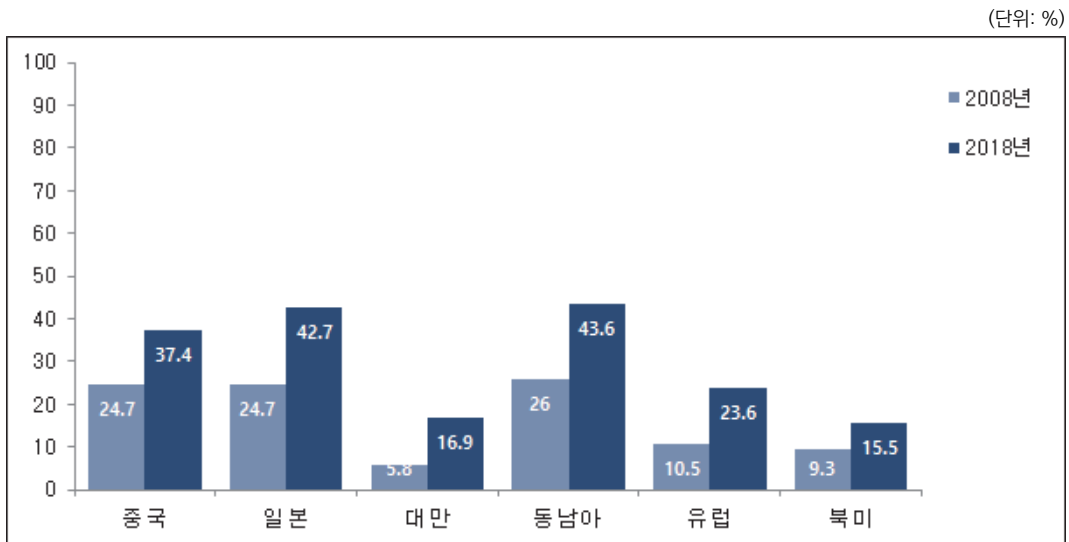
1. 문화 노출 경험과 문화적 접촉 현황

외국인 증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외국 여행 경험을 통해 외국문화나 외국인에 대해 이질감이 적은 지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외국 국가별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가. 여행 경험 여부로 살펴본 문화 노출 경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가 여행 경험이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43.6%), 일본(42.7%), 중국(37.4%), 유럽(23.6%), 대만(16.9%), 북미(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보다는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권 국가를 여행으로 방문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1] 각 나라별 여행 유경험자 비율: 2008년과 2018년 비교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응답을 2008년과 비교해보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여행 경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여행 경험은 지난 10년간 각각 18%와 17.6%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을 여행해 본 응답자의 비율도 37.4%, 1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통한 문화 노출 경험의 확대는 아시아권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과 북미지역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문화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룹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6-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표 6-3〉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의 경우 연령별로 여행 경험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동남아의 경우 18-29세의 젊은 세대보다는 30대-50대가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29세의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지역은 일본으로 18-29세 응답자의 46.2%가 일본 여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3〉 연령별 여행 유경험자 비율 비교 2018년 조사 기준

(단위: %)

연령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전체	37.4	42.8	16.9	43.5	23.7	15.5
18-29세	24.6	46.2	12.8	32.8	19.1	10.8
30-39세	43.0	45.9	15.6	63.4	29.6	20.4
40-49세	36.3	41.6	18.8	47.7	23.4	15.0
50-59세	40.4	45.0	18.3	46.5	25.2	14.9
60세 이상	42.1	36.5	18.5	30.2	21.9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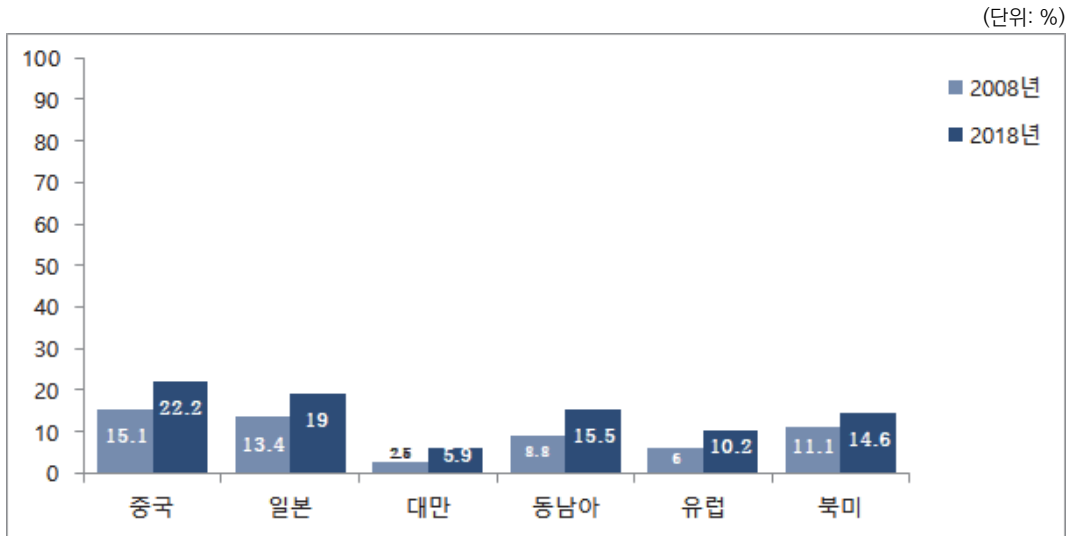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나. 알고 지내는 외국인 유무로 살펴본 문화 접촉 현황

외국인과 알고 지내는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비교한 〈그림 6-2〉를 보면 2018년 조사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알고 지내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22.2%, 일본이 19%, 동남아시아인이 15.5%, 북미 지역 외국인이 14.6%, 유럽인이 10.2%, 대만인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 조사와 경향이 비슷하지만 동남아인과 중국인을 알고 지내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동남아인과 중국인은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은 외국인 그룹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응답자 가운데 직장 및 가족·친척관계를 통해

중국인·동남아인과 관계를 맺고 문화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2] 국적별 알고 지내는 외국인 비율: 2008년과 2018년 비교



응답자가 알고 지내는 외국인의 비율을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상태, 연령, 학력에 따라 분석해보면 2018년 조사에서 외국인을 알고 지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연령과 학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응답자가 알고 지내는 외국인의 비율은 30-3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49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집단은 모두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대이므로 일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학력별로 외국인 지인을 둔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시아권과 유럽, 북미 지역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인을 알고 지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외국인 지인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중국인이 32.6%, 일본인이 30.3%, 북미 지역 외국인이 29.2%, 동남아인이 22.9%, 유럽인이 22.0%, 대만인이 13.5%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고려해 볼 때 응답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인이고 일본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동남아의 경우 여행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지내며 직접 교류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중국인과 유럽인의 경우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지인을 많이 두고 있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인을 제외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다양한 외국인 지인과 직접 교류하며 문화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국적별 알고 지내는 외국인 분포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전체		15.1	13.4	2.5	8.8	6.0	11.1	22.2	19.0	5.9	15.5	10.2	14.6
성별	남성	18.7	16.2	3.3	10.7	7.1	13.3	24.8	19.4	6.8	15.2	12.3	16.8
	여성	11.6	10.8	1.7	6.9	4.8	9.0	19.7	18.6	5.1	15.8	8.2	12.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3.9	3.4	0.7	0.6	2.1	4.0	8.8	2.5	1.3	7.4	2.5	6.2
	100-199	9.7	9.9	2.5	4.0	2.5	3.8	14.3	12.9	2.9	11.4	4.3	8.6
	200-299	11.6	9.9	0.7	9.4	4.4	9.6	20.2	14.6	4.5	15.7	4.5	16.9
	300-399	16.9	11.8	0.7	6.4	3.8	10.8	18.7	10.2	4.7	15.9	5.6	8.5
	400-499	18.8	12.8	1.6	12.2	7.6	10.8	21.7	14.2	2.5	16.7	6.7	15.8
	500만 원 이상	20.9	22.5	6.0	13.7	10.6	18.4	27.2	27.6	8.3	17.9	16.6	19.4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4.2	12.8	2.0	8.9	6.0	11.5	21.2	17.7	5.6	16.1	9.7	14.9
	배우자 없음	16.8	14.6	3.5	8.4	5.8	10.3	23.2	20.1	6.5	14.3	10.2	14.1
연령	18-29	18.3	15.4	3.7	9.9	6.6	10.1	25.1	22.1	4.6	16.6	10.8	13.3
	30-39	17.1	17.3	2.1	11.2	8.5	16.4	28.5	25.4	13.0	25.1	15.1	24.7
	40-49	21.5	13.3	2.5	11.9	9.0	10.1	26.9	23.8	7.7	20.7	14.4	16.3
	50-59	10.5	12.2	1.9	7.0	1.5	12.2	19.6	14.1	4.0	12.1	9.1	11.1
	60세 이상	6.5	8.5	1.9	3.3	3.2	6.8	12.7	10.1	1.8	4.8	2.6	8.3
학력	고졸 미만	4.7	5.1	0.9	2.2	2.2	4.4	14.6	9.1	1.0	6.1	1.5	4.5
	고졸	13.5	7.9	1.6	8.1	3.3	5.2	19.8	10.9	2.0	14.1	4.0	6.5
	대학 재학	15.7	14.2	2.5	7.9	5.7	10.0	17.8	20.2	3.9	15.3	8.6	12.5
	대졸 이상	26.2	26.8	4.9	16.6	12.6	25.0	32.6	30.3	13.5	22.9	22.0	29.2

주: *p<.05, **p<.01, ***p<.001, 통계 검증은 2018년 조사에 한함

1) 성별에 따른 유의확률은 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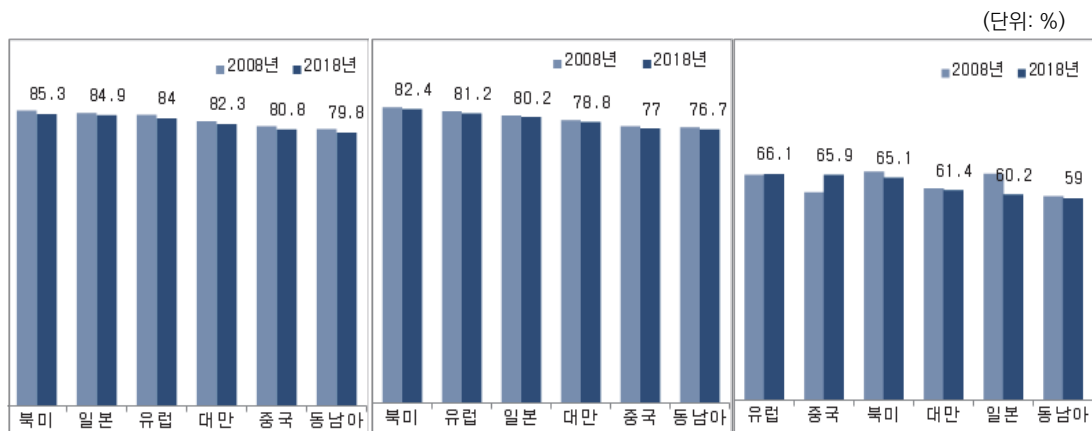
2) 월 평균가구소득별 유의확률은 중국*, 대만*, 북미**, 일본***, 유럽***

2. 외국인 지위별 수용 의향

외국인 수용 의향에 대해 직장동료와 동네이웃, 가까운 친척과 같은 교류의 수준이 다른 예를

통해 질문한 결과 동네이웃으로 수용할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동네이웃과 직장동료로 수용한다는 응답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의 그래프는 2018년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외국인 수용 의향이 높은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6-3] 외국인 국적별 수용의향 (좌: 동네이웃, 가운데: 직장동료, 우: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의향)



<그림 6-3>의 왼쪽에 표시된 그래프는 동네이웃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부터 나열한 것이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동네이웃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80%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8년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 대한 수용 의향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응답자가 동네이웃으로 수용하기 쉬운 외국인 집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85.3%로 가장 높고 일본이 84.9%, 유럽이 84%, 대만이 82.3%, 중국이 80.8%, 동남아가 79.8%로 북미지역과 유럽 등 비아시아권에 대한 수용의향이 아시아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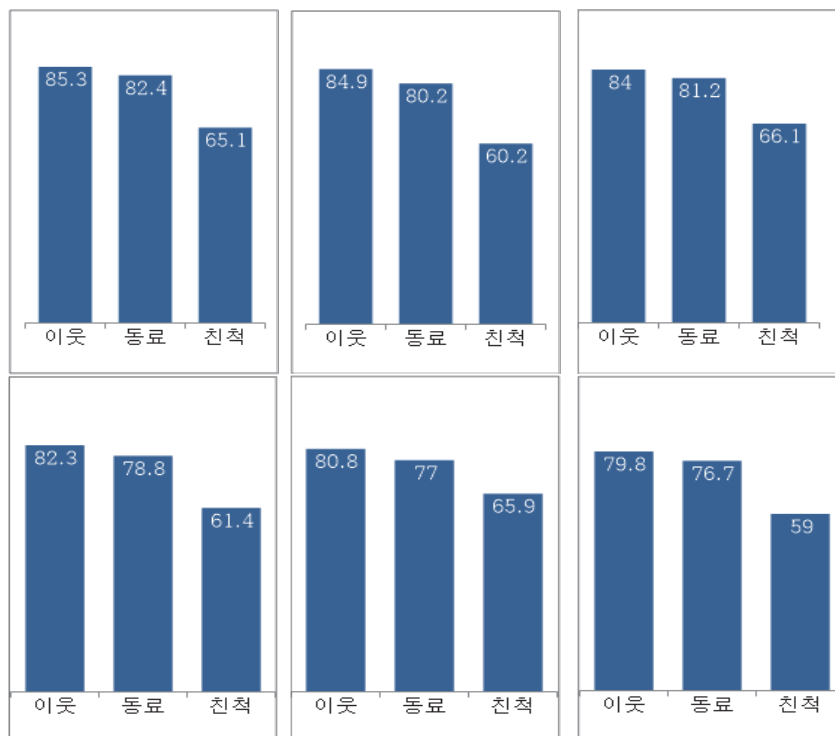
<그림 6-3>의 가운데 표시된 직장동료로 수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네이웃으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과 그 순위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순위가 바뀌어 비아시아권 외국인을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직장동료로 수용하겠다는 의향도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친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의 순위가 북미,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동남아였던 것에 반해 2018년 조사에서는 유럽, 중국 북미, 대만 일본, 동남아의 순으로 바뀌어 중국인을 친척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일본인을 친척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지난 10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외국인 국적별 지위별 수용의향 2018년 조사 기준

(단위: %)



〈그림 6-4〉는 외국인의 국적별 지위별 수용의향을 나타낸 것이다. 동네이웃과 직장동료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웃과 동료 이외에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동네이웃과 직장동료 사이의 수용의향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이 4.7%로 가장 높고, 중국이 3.8%, 대만이 3.5%, 동남아가 3.1%, 북미지역 외국인이 2.9%, 유럽인이 2.8%로 아시아권 외국인과 직장동료로 일하는 것을 북미지역 외국인이나 유럽인과 함께 일하는 것보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과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일본이 20%, 동남아가 17.7%, 대만이 17.4%, 북미가 17.3%, 중국이 11.1%로, 응답자 가운데 일본인을 가까운 친척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수용하려는 의향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으로 맞이하는 것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 수용하려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지만 가까운 친척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9%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수용 의향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 수용의향이 높았던 북미지역과 유럽의 경우 가까운 친척으로 맞이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 6-5〉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전체	60.5	65.6	61.9	59.1	65.5	66.7	65.9	60.2	61.4	59.0	66.1	65.1
성별												
1) 남성	63.3	68.7	66.7	62.5	68.4	69.0	68.6	76.6	76.1	71.2	75.7	76.8
여성	57.7	62.6	57.2	55.9	62.7	64.5	68.9	70.7	70.8	69.7	74.8	75.0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49.8	51.8	49.0	50.3	50.3	51.7	51.9	53.1	51.9	49.4	52.5	55.0
100-199	54.4	55.6	50.5	50.5	57.1	57.3	50.7	51.4	54.9	53.5	59.7	55.6
200-299	63.7	68.1	64.7	63.0	70.1	70.3	65.9	67.0	68.2	63.6	62.5	64.8
300-399	59.7	65.2	65.4	55.3	65.7	66.0	70.1	77.6	72.9	71.0	75.0	76.6
400-499	69.7	71.5	69.5	67.8	72.9	75.4	71.7	79.0	79.2	80.0	79.2	80.8
*** 500만 원 이상	61.3	71.1	63.9	62.4	68.6	70.7	73.1	79.0	80.2	74.6	82.7	83.5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61.5	64.6	62.0	59.7	65.7	66.6	68.5	72.3	72.8	68.8	74.7	75.5
배우자 없음	58.0	67.6	61.6	57.8	65.0	66.9	69.1	75.5	74.3	73.2	76.2	76.7

구분	2008년						2018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북미	
연령 ***	18-29	55.8	70.1	60.5	55.4	68.1	68.5	71.6	81.5	79.4	78.6	81.4	82.0
	30-39	67.1	71.3	70.0	67.0	74.3	75.4	78.0	84.9	84.9	80.1	85.5	85.5
	40-49	62.8	67.3	62.9	60.8	65.2	66.0	79.3	81.6	82.2	79.8	83.6	84.0
	50-59	60.8	59.8	59.4	58.2	63.3	65.3	67.2	71.0	71.5	64.7	73.1	73.5
	60세 이상	55.7	58.1	55.9	53.9	56.0	57.9	50.4	53.0	52.6	52.4	55.7	58.0
학력 ***	고졸 미만	53.9	54.6	52.8	52.6	54.6	56.6	57.8	58.8	57.8	58.3	58.8	62.1
	고졸	60.5	61.4	60.4	58.7	62.5	63.7	62.2	62.8	65.5	61.4	62.1	63.1
	대학 재학	60.2	71.1	65.3	60.3	72.0	72.2	72.3	79.7	79.2	74.4	85.4	83.4
	대졸 이상	67.0	76.2	69.4	64.8	73.8	75.1	77.5	86.3	84.5	81.6	87.6	88.9

주: *p<.05, **p<.01, ***p<.001, 통계 검증은 2018년 조사에 한함

1)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일본*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가까운 친척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할 의사가 가장 높은 그룹은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30-40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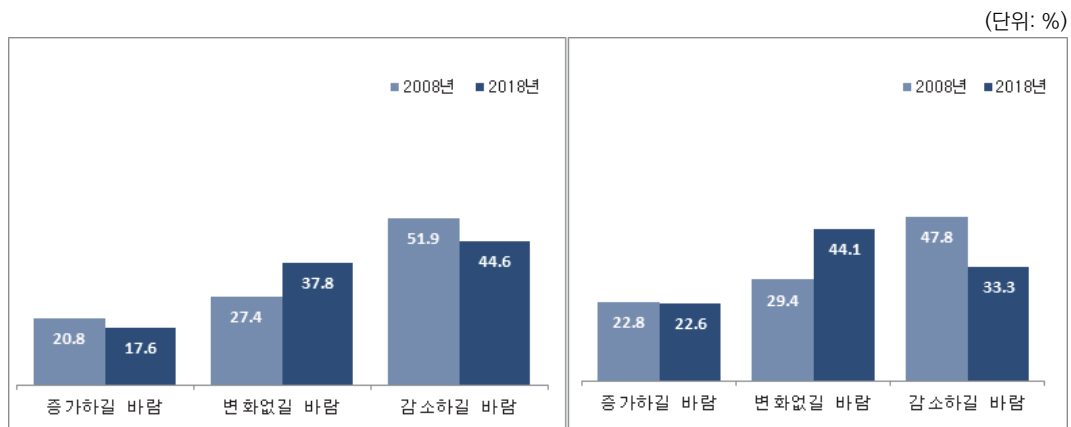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은 그룹에서는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외국인을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은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많은 고소득, 고학력 집단이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에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3.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외국인 지위별로 나누어 질문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는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로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을 나누어 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림 6-5〉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응답을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한 것이다. 2008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증가하길 바란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였으나 2018년에는 그 보다 낮은 17.6%만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적인 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돌려보내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08년 27.4%에서 2018년 37.8%로 1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인식은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응답이 2008년 51.9%에서 2018년 44.6%로 낮아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5] 한국 내 적정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의견 2008년과 2018년 결과 비교 (좌: 외국인 노동자, 우: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식도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이 ‘다문화정책’이 정부주도로 시행된 2006년 이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정책’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08년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반다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확산된 최근 몇 년간은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온 시기였다. 2008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는 결혼이민자가 앞으로 감소하길 바란다고 응답하여 결혼이민자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변화 없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29.4%, 증가하길 바란다는 22.8%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44.1%가 결혼이민자 수가 앞으로 변화 없길 바란다고 응답하여 감소하길 바란다는 응답(33.3%)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길 바란다는 응답에서 결혼이민자 수가 앞으로 변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는 수용하고 있으나 현재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응답자가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성별, 학력, 월평균소득,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6-6〉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전체		51.9	47.8	44.6	33.3
성별 1)	남성	51.9	47.6	41.3	28.0
	여성	51.8	48.0	47.9	38.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53.8	48.6	54.2	35.0
	100-199	54.5	40.3	50.7	40.0
	200-299	61.0	50.0	51.1	44.2
	300-399	52.1	52.2	45.7	28.0
	400-499	46.5	49.8	39.5	34.2
	500만 원 이상	46.9	45.3	40.0	31.7
혼인 상태 ***	배우자 있음	54.3	48.5	44.1	36.0
	배우자 없음	46.5	46.2	44.7	28.9

구분	2008년		2018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연령 **	18-29	49.2	52.5	38.2	25.4
	30-39	45.5	45.6	47.5	35.9
	40-49	53.0	47.9	41.1	31.4
	50-59	57.8	49.4	43.9	36.8
	60세 이상	55.0	43.6	50.9	36.6
학력	고졸 미만	58.7	46.3	47.7	34.7
	고졸	56.5	48.4	49.6	36.3
	대학 재학	50.9	49.5	41.3	28.5
	대졸 이상	41.1	47.1	41.6	34.0

주: *p<.05, **p<.01, ***p<.001, 통계 검증은 2018년 조사에 한함

1)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민자*

〈표 6-6〉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로 성별과 혼인상태와 연령이다. 성별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남성이 28%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38.4%로 남성보다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상대자를 찾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여성의 유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연령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60세 이상이 50.9%로 가장 많고, 30-39세가 47.5%, 50-59세가 43.9%, 40-49세가 41.1%, 18-29세가 38.2%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외국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층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연령 변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0-39세 집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일 것이다. 30-39세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고 직업 안정을 꾀하는 연령대이므로 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50-59세의 경우 남성은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도 단순 노동을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연령층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30-39세 연령집단과 비슷한 의미로 새로운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연령은 노동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연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혼 이민자가 감소하길 바란다는 의견은 50-59세가 36.8%, 60세 이상이 36.6%, 30-39세가 35.9%, 40-49세가 31.4%, 18-29세가 25.4%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결혼이민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 연령층이 갖는 일반적인 보수적인 성향의 영향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39세 집단과 40-49세 집단이 갖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집단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라는 점이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반다문화’의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효과, 즉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다문화가족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지영, 2017).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 이와 같은 ‘반다문화’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 연령층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자신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집단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나라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상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44.1%,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44.7%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연령과 혼인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연령대에서 보면 활발히 일하는 연령대와 퇴직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들 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경쟁하는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와는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6.0%,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8.9%를 나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문항만으로는 충분히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혼의 상대방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4. 국수주의적 인식

다음으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측정한 항목을 살펴보았다.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같듯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 된다' 와 같은 세 가지 지시문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적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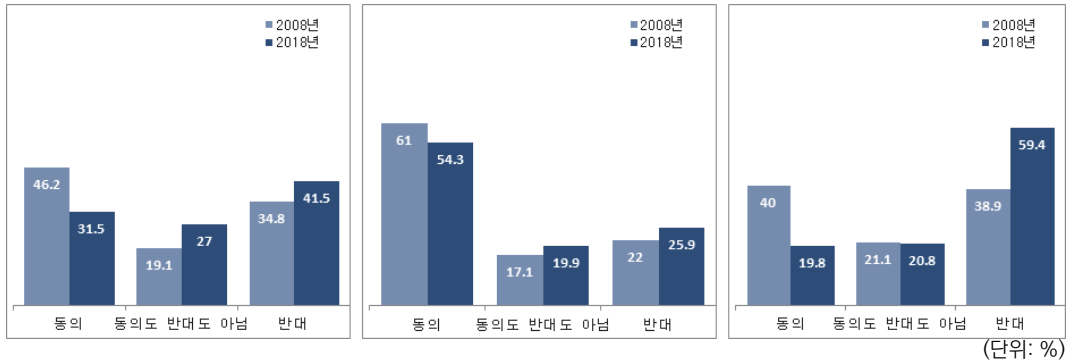
〈그림 6-6〉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지시문에 대해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의견을 제시한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동의가 46.2%, 반대가 34.8%, 동의도 반대도 아님이 19.1%로 응답자의 생각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1.5%로 2008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동의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적 응답이 27%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지난 10년간 41.5%로 소폭 상승하였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는 집단이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6-6] 국수주의적 인식 2008년과 2018년 결과 비교

한국은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된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시문에 대해 2008년 조사에서는 61%가 동의, 22%가 반대, 17.1%가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고 응답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8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년 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25.9%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과 같이 세계화된 시장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번 제시 문장처럼 국가 이익이라는 특별한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원칙적으로는 한국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 상황과 시장구조를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외국의 영화, 음악, 책 등에 많이 노출되면 한국 문화는 손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조사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40.0%, 반대 의견이 38.9%, 동의도 반대도 아님이 21.2%로 동의와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응답자의 의식은 크게 바뀌어 외국문화의 노출이 한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외국문화에 대한 노출이 한국 문화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이 59.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의견이 20.8%, 동의한다는 의견이 19.8%를 차지하

고 있다.

그렇다면 응답자가 가진 국수주의적 관점은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표5-7>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6-7>은 성별, 혼인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 학력이 응답자의 국수주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2018년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국수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모든 제시 문장에 대한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한국의 경제보호를 위한 외국제품의 수입 제한과 외국문화에 노출될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될 것이라는 제시 문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연령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찬성하는 비율은 50-59세가 40.0%, 60세 이상이 39.5%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49세 집단에서는 31.3%, 30-39세 집단에서는 24.2%, 18-29세 집단에서는 20.0%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국수주의적 성향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제시 문장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역시 50-59세 집단과 60세 이상의 집단의 동의가 각각 60.0%, 63.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30-39세 집단과 40-49세 집단에서는 각각 51.6%, 51.2%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8-29세 집단에서는 43.3%만이 한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외국문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찬성 비율 또한 60세 이상 집단에서 33.6%, 50-59세 집단에서 21.5%, 40-49세 집단에서 16.3%, 30-39세 집단에서 15.1%, 18-29세 집단에서 10.3%로 연령에 따라 찬성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국수주의적인 태도가 강한 경향이 보인다.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39.8%, 100-199만 원 미만의 응답자가 38.0% 동의한 것에 반해, 300-399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23.4%, 400-499만 원 미만의 응답자는 28.3%만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적인 경향만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에서 66.3%, 100-199만 원 미만 응답자에서 65.3%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그룹의 국수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문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 또한 1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199만 원 미만 집단에서 29.2%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6-7〉 국수주의적인 인식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외국 제품 수입 제한	국가 이익 우선 추구	외국 문화 노출 염려	외국 제품 수입 제한	국가 이익 우선 추구	외국 문화 노출 염려
전체	46.2	61.0	40.0	31.5	54.3	19.8
성별						
1) 남성	46.2	62.8	41.2	28.3	56.5	17.2
여성	46.2	59.3	38.8	34.5	52.1	22.5
월 평균 가구 소득						
1) 100만 원 미만	45.6	53.8	44.2	39.8	66.3	42.2
100-199	55.7	66.7	56.0	38.0	65.3	29.2
200-299	46.0	63.9	42.6	30.3	52.8	19.1
300-399	46.2	57.4	37.1	23.4	65.4	21.5
400-499	49.3	61.2	37.0	28.3	49.2	18.3
500만 원 이상	41.0	61.8	33.2	31.2	51.6	13.1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48.9	64.5	42.9	33.9	55.6	20.3
배우자 없음	40.4	53.5	33.7	27.8	51.7	19.2
연령						
18-29	41.0	52.5	32.7	20.0	43.3	10.3
30-39	44.8	62.0	35.7	24.2	51.6	15.1
40-49	49.2	68.3	38.2	31.3	51.2	16.3
50-59	46.0	59.1	48.7	40.0	60.0	21.5
60세 이상	49.8	62.6	46.5	39.5	63.9	33.6
학력						
2) 고졸 미만	49.6	60.8	47.1	38.7	57.3	35.5
고졸	54.0	64.5	47.9	39.3	53.8	29.6
대학 재학	43.7	58.3	34.5	28.6	55.8	12.4
대졸 이상	36.2	59.4	28.9	23.4	51.9	8.5

주: *p<.05, **p<.01, ***p<.001, 통계 검증은 2018년 조사에 한함

1) 월 평균소득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외국제품 수입제한**, 국가이익 우선추구**, 외국문화 노출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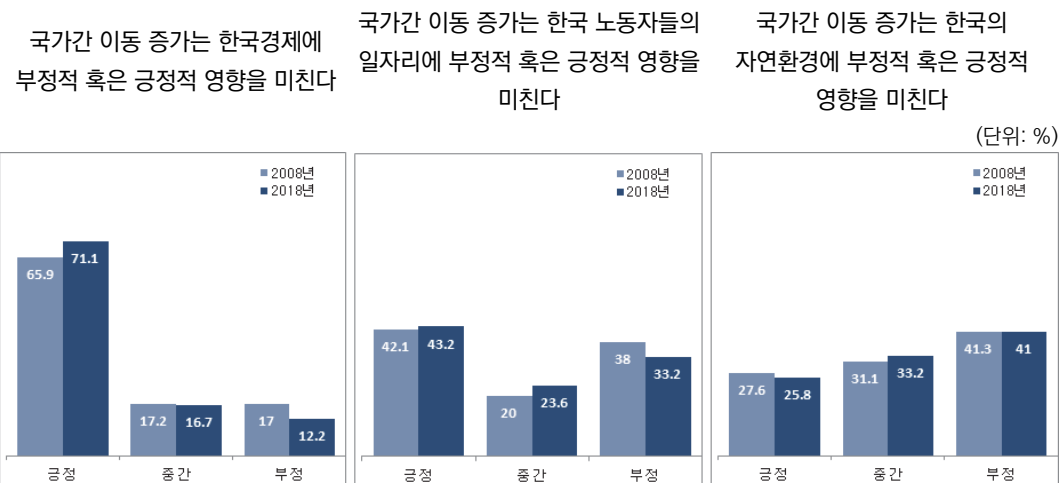
2) 학력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외국제품 수입제한***, 외국문화 노출염려***

학력의 경우 한국 경제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문화에 자주 노출될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된다는 의견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38.7%, 고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재학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각각 28.6%, 23.4%인 것과 비교하면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외국문화에 자주 노출될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35.5%, 고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29.6%로 대학 재학(12.4%)과 대졸 이상의 학력(8.5%)을 가진 응답자의 동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세계화 흐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본 문항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림 6-7>은 2008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6-7]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2008년과 2018년 조사결과 비교



국가 간 이동 증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 2008년 조사에서는 세계화 흐름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5.9%,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 17.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17%로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8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1.1%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12.2%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은 16.7%로 10년 전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 이동 증가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2008년 조사에서는 세계화 흐름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2.1%,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38.0%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43.2%로 소폭 상승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33.2%로 소폭 하락한 반면, 판단을 유보하는 의견이 23.6%로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줄고 판단을 유보하는 의견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간 이동 증가가 한국의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18년의 응답이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세계화 흐름이 한국의 자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008년에 27.6%, 2018년에 25.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2008년에 41.3%, 2018년에 41.0%로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세계화가 한국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다는 점이 앞서 살펴 본 두 항목과 차이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흐름에 대한 위와 같은 응답을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연령별, 혼인관계별, 학력별로 살펴본 것이 <표 6-8>이다. <표 6-8>에서는 세계화 흐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정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집단별 차이가 보이는 변수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을 들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8-29세 집단에서 15.4%, 30-39세 집단에서 11.9%, 40-49세 집단에서 9.0%, 50-59세 집단에서 10.7%, 60세 이상 집단에서 14.2%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 문제에 실제적인 관심이 많은 30, 40, 50대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30-40대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세계화가 진행된 결과 일자리 불안정성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세계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0대 이상 연령층보다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가운데 세계화 흐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혼인상태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앞서 연령별로 부정적 응답이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이 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외국인과 일자리를 경쟁하는 직종이거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환경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고졸 학력을 가진 집단이 15%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14.6%, 대학 재학 중인 집단이 13.2%,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세계화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고졸 학력을 가진 집단이 36.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33.5%,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31.8%, 대학 재학 중인 집단이 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국인과 경쟁하는 직종이 학력이 낮은 집단이 종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학력이 높은 집단이 종사하는 분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8〉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2008년			2018년		
		한국 경제 부정 영향	한국 노동자 일자리 부정 영향	한국 자연 환경에 부정 영향	한국 경제 부정 영향	한국 노동자 일자리 부정 영향	한국 자연 환경에 부정 영향
전체		17.0	38.0	41.3	12.2	33.2	41.0
성별	남성	14.1	37.3	41.0	12.0	31.5	38.5
	여성	19.8	38.6	41.7	12.3	34.9	43.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4.0	41.0	40.7	15.4	32.5	36.3
	100~199	24.2	39.2	45.5	5.7	29.2	35.7
	200~299	18.1	39.0	37.6	13.6	34.8	45.5
	300~399	16.1	36.2	44.7	11.3	35.2	36.5
	400~499	11.2	33.6	34.9	12.6	35.0	38.3
	500만 원 이상	13.9	38.9	42.9	10.4	29.9	42.3
혼인 상태 1)	배우자 있음	17.1	38.6	41.0	10.2	32.5	40.5
	배우자 없음	16.7	36.5	42.2	14.6	33.6	41.2
연령 2)	18~29	16.0	31.4	43.1	15.4	27.2	42.1
	30~39	13.2	37.2	40.5	11.9	34.1	41.3
	40~49	18.2	46.3	45.6	9.0	40.2	47.1
	50~59	21.4	37.0	37.1	10.7	31.3	37.9
	60세 이상	16.8	37.6	39.3	14.2	32.5	36.7
학력 3)	고졸 미만	23.9	42.0	43.2	14.6	31.8	33.7
	고졸	17.6	35.0	38.7	15.0	36.7	41.1
	대학 재학	14.2	34.9	44.3	13.2	30.7	44.6
	대졸 이상	12.3	40.1	40.1	7.6	33.5	42.5

주: * $p < .05$, ** $p < .01$, *** $p < .001$, 통계 검증은 2018년 조사에 한함

- 1) 혼인상태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국 노동자 일자리 부정적 영향***, 한국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
- 2) 연령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국 노동자 일자리 부정적 영향***, 한국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
- 3) 학력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수준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국 노동자 일자리 부정적 영향**, 한국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

제 3 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이 장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8년과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와 문화의 확산에 대한 태도를 여행경험, 외국인 지인의 유무, 외국인 수용 의향,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의견, 국수주의적 태도,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라는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에 비해 외국 여행을 통해 외국문화에 노출되는 경험과 외국인과 알고 지내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행을 통한 문화 노출 경험의 확대는 아시아권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과 북미지역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응답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대와 40대 집단에서 외국인과의 직접교류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남성 응답자의 경우 다양한 외국인 지인과 직접 교류하며 문화적 접촉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2018년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응답자는 동네이웃으로 외국인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 수용한다는 응답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2008년 조사와 2018년 조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2008년에는 친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집단의 순위가 일본, 북미, 유럽, 대만, 동남아, 중국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조사에서는 유럽, 중국, 북미, 대만, 일본, 동남아의 순으로 바뀌어 중국인을 친척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일본인을 친척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지난 10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08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조사응답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는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보다 더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 비율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경제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경제적 측면의 국수주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과 반대의견이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의 내용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해보면 이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1.0%에서 54.3%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문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한국 문화가 손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조사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9%에서 59.4%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문화적 측면의 국수주의적 태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2018년 조사에서는 세계화가 한국 경제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도 2008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계화가 한국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판단 유보적 응답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조사 응답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40세 집단의 경우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이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세계화가 진행된 결과 일자리 불안정성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위의 다섯 가지 주요한 변화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외국 문화와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의 세계화 흐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이 전제된 이해 수준이 상승했다고 해서 외국문화와 외국인의 유입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이주와 외국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 흐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응답 결과가 곳곳에 보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를 구직과정의 경쟁상대로 인식하거나 이미 유입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유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응답이 대표적이다.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노동문제를 포함하는 경제 분야의 세계화에 대한 응답자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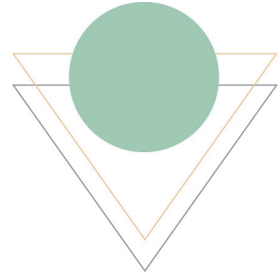
설정이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집단이 어떤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이들에게 맞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조사 결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감소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30-39세 집단과 50-59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30-39세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고 직업 안정을 꾀하는 연령대이므로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경쟁자로 인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50-59세의 경우 남성은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도 단순 노동을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연령층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30-39세 연령집단과 비슷한 의미로 새로운 일자리를 놓고 외국인노동자와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연령은 노동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과 일자리를 경쟁하는 집단에 대해 구직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내국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다문화' 여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이들 집단에 초점을 맞춘 구직 서포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2018년 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연령과 혼인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연령대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활발히 일하는 연령대와 퇴직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들 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경쟁하는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임과 동시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관련된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만큼 이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임과 동시에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화 흐름이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30-4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 문제가 외국인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은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도 앞서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인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이 상 립

Ⅶ. 결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른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들 사회의 구성원들은 빠른 변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체제와의 갈등은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4개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초저출산의 문제는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생애과정, 가족 관계,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총량적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들이 북미나 유럽 등 다른 문화-지리권 사회들과는 구분되는 어떠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동아시아’라는 정의 자체가 서구적 시각에서 명명되었듯이,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지리적 환경, 유교문화, 그리고 인종적 유사성 등도 실체성과 무관하게 주어져버린 정체성일 수도 있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성들이 존재하는지를 스스로의 관점에서 자문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고 서로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동아시아 사회조사는 이들 사회들이 놓여있는 위치와 변화의 과정을 상호 비교해보고자 한다. 올해의 조사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라는 주제로 가족과 소속집단, 전통신앙, 문화교류와 세계화, 이주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이들 주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교연구에 있다. 그러나 아직 각국의 조사 데이터들이 취합되지 않은 관계로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를 지난 2008년에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된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의 정도와 현재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들을 보면 우선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서는 남성 가장을 우선하는 태도가 감소하였고, 가족보다 개인을 우선시 하는 태도가 강화되었다. 반면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버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의 확대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태도가 우세하였다. 소속 집단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집단 순응성과 내집단 우선성, 그리고 위계에 대한 복종 경향 모두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내집단 우선성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뚜렷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억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긍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위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전통 신앙의 경우,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유일하게 가족구성원 묘지 방문만이 여전히 넓은 범위에서 실천되는 의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과거와 같이 종교적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가치의 우위 속에서 종교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임동균의 이론적 설명에 타당성을 더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세계화 모습을 살펴 본 분석결과를 보면, 미디어컨텐츠 이용에 있어서는 중국영화에 대한 소비율은 감소하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애니메이션 소비가 증가하였다.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도 자체는 2008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국제문제 뉴스를 접하는 매체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텔레비전 등의 기존 매체 영향력이 감소하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영어 활용능력은 2008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 국제화는 지난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연령, 계층, 교육 등에 따른 차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문제에 대한 접근 매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집단 또는 계층적 차이에서는 조사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 질적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현상과 세계화로 인한 문화 확산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외국 여행을 통해 외국문화에 노출되는 경험과 외국인과 알고 지내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동네이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까운 친척으로 외국인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였고,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화가 한국 경제와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이주현상에 대한 심리적 수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세계화 및 이민 관련 수용적 인식 가치관과 실제 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혼재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계화의 추세와 관련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 연령집단의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과 고용의 불안정성과도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세계화에 대한 배타적인 부정적 태도는 줄어들고, 해외문화 교류의 기회는 확대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유지 또는 다소 부정적 태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반적 인식과 세계화 수용의 변화 추세 속에서도 경제적 계층, 학력, 연령 간의 격차는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하다. 이러한 집단 간 인식 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현실 경제적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가치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세계화 및 이민현상의 진전과 관련된 실제적·문화적 경험들이 매체의 발달과 이민자 증가에 따라 생활세계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사회 가치관의 전반적 변화 추세와 세부적 집단의 인식·태도의 변화가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화와 사회변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집단의 변화의 차이를 문화 변동의 수용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및 조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계층화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 부문들에서의 구조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변동 또는 그 파급효과를 자신이 놓여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태도를 이해하려는 접근자 세도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동아시아 4개 국가 사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변동과 인식의 변화들을 상호

비교하고자 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필요한 경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EASS의 수행이라는 기본적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조사된 결과와 지난 10년 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좌표를 제시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4개 국가의 자료들이 완성되고 종합된 이후 본격적인 국제비교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비교 연구의 성과들이 동아시아 사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국, 2006, “혐한류와 일본내셔널리즘: 이해와 대응,” 동아시아 브리프, 제1권 제1호.
- 강진구, 2014,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pp. 305-333.
- 구갑우, 2004, “근대 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서울: 청어람미디어.
- 기든스 앤서니(Anthony Giddens), 필립 W 서튼, 2015,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동녘.
- 김경일, 2001,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pp. 97~120.
- 김남국, 2010,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영국, 프랑스, 미국 비교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3호, pp. 133~174.
- 金明秀, 2018, “사회학자와 반 헤이트 스피치 운동,” 일본 사회학회 발표문.
- 김지영, 2017, “반다문화 논리의 확장과 공유: 19대 국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분석,” 한국사회학, 제51권 제3호, pp. 139~174.
- 김창규, 2018, “한국의 ‘중국조선족’ 인식에 대한 성찰,” 감성연구, 제16권, pp. 179~208.
- 김현미, 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 류수경, 2017,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난민 삶이와 귀환,” 비교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pp. 53~104.
- 류지성, 2016,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시의 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법제, pp. 672.
- 문경희, 2013, “제5장: 다문화주의와 여성 -유럽의 최근 이민, 사회통합 담론 및 정책의 변화와 여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 세계정치, 제19권, pp. 187-231.
- 박광준, 오영란, 2011,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4호 pp. 203~235.
- 박기철, 2011,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사례와 영향, 중국학연구,” 제55권, pp. 93~119.
- 박단, 2001,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 - 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서양사론, 제7권, pp. 243~272.

- 박명규, 2004, “디아스포라 논의의 사회학적 함의”,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박성호, 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제도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일본연구, 제33권, pp. 239~254.
- 박우, 장경섭, 2017, “전환주의 시민권 : 한국의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 한국사회학회, 2017년 정기사회학대회, pp. 409~421.
- 박정수, 2012, “중화 민족주의와 동아시아 문화갈등: 역사와 문화의 경계짓기,” 국제정치논총, 제52권 제5호.
-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 박희제, 2014,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올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제30권, pp. 83~120.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 블록 아네르스, 엔센 토르벤, 2017, “처음 읽는 부뤼노 라투르,” 황장진 옮김, 사월의 책:서울.
- 사이드, 에드워드. 2015.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제13호, pp. 131-158.
-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 전북대 출판부.
- 신승배, 이정환, 2015, “동아시아 가족가치관과 행복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3호, pp. 279~319.
- 신종훈, 2014, “유럽정체성과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 역사학보, pp. 236~260.
- 여성가족부,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경, 2009, “이슬람 여성과 다문화주의 : 테일러, 오킨, 지젝의 통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1호, pp. 1~29.
- 우아미, 2011, “신도(神道) 문화와 연중행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 전공.
- 우치무라 간조, 조양욱 역, 2003, “인물 일본사,” 서울: 아침바다.
- 육주원, 2016,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한국사회학, 제50권 제8호, pp. 109~134.
- 윤대엽, 2017, “문화시장 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 정책: 한류의 정치·경제. 한국의 문화정책 세계의 문화정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윤여일, 2015,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은기수, 2009, “아시아적 가족가치의 동아시아 사회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2009국제사회학대회, pp. 827~848.

- 이완, 2017,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문화다양성,”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제48권 제5호.
- 이정은, 2011, “식민제국과 전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삶,” 한국사회학, 제45권 제4호, pp. 169~197.
- 이정훈, 2017, “1990년대 중국의 민족주의 확산과 단행본 출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과 『앵그리 차이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권 제3호, pp. 95~127.
- 이정훈, 박상훈 엮음, 2010,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출판부.
- 이진원, 2004, “일본의 가부장적 질서와 통치구조,”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pp. 145~148.
- 임현진, 2010, “동북아에서의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동북아문화연구, 제24권, pp. 169~187.
- 임현진, 2011, “지구적 변환, 아시아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역할,” 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 pp. 23~50.
- 임현진, 2013, “지구시민사회의 과제-오늘의 복합위기 의 시대 살아남기,” 국제개발협력연구, 제6권 제2호, pp. 9~24
- 장덕진, 2001, “가족경영의 제도적 논리: 한국재벌의 규범적 동형화,” 경제와 사회, 제51권 pp. 161~188.
- 전의령, 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경제와사회 제106호, pp. 238~270.
- 정근식, 2015, “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사.
-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03권 pp. 193~230
- 조정현, 2011, “문화변동에 따른 한중일 무당의 현실적응 비교,” 비교민속학, 제45권 pp. 381~409.
- 조형근, 1998, “근대의 가족 - '냉혹한 세상의 피난처'인가, '기대의 감옥'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pp. 39~56.
- 진달용, 2011, “문화 제국주의의 재해석,” 커뮤니케이션 북스.
- 천광성, 2003, “제국의 눈,” 창작과 비평.
- 최인숙, 2013, “한국과 일본의 탈물질주의,” 아세아연구, 제154호, pp. 233~264.
- 최현덕, 2010,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개념에 관하여 : 여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사회와 철학, 제20권, pp. 259~284.

- 최혜자, 2018, “문화다양성 정책의 이해와 방향 - 문화다양성으로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문화다양성 자문회의 발표문.
- 한건수,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1호, pp. 113~143.
- 한건수, 2008,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학회지, 제27호, pp.225~268.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제50권.
- 홍찬숙, 2016, “올리히 벡 읽기,” 세창미디어.

- Arjun Appadurai, 2003,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Java Evans Braziel and Anita Mannur ed., *Theorizing Diaspora*, Blackwell Publishing. 25-48.
- Bellah, Robert, 2003, “Imagining Japan: The Japanese Tradition and its Modern Interpre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habib, S., 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 Routledge
- Bonikowski, Bart and Paul DiMaggio, 2016, “Varieties of American Popular Nationalism.” 81(5): 949-980.
- Castles, Stephen, Hein de Haas and Mark J. Miller, 2014, “The Age of Migration, Fifth Ed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 D. Sirota, J.M. Greenwood, 1971, “Understanding your overseas work force.”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2): 13-14.
- Delhey, Jan, Kenneth Newton, and Christian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Donzelot, J., 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with a foreword by Gilles Deleuz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Robert Hurley.” In: New York: Pantheon Books.



- Fingarette, Herbert, 1972, "Confucius - The Secular as Sacred." New York: Harper & Row.
- Foucault, M., 2003, "광기의 역사 (이규현, Trans.), 서울: 나남.
- Furnham, Adrian, Bruce D. Kirkcaldy, and Richard Lynn, 1994, "National Attitudes, Competitive, Money and Work: First, Second and Third World Differences," *Human Relations*, 47(1): 119-132.
- Haidt, Jonathan,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idt, Jonathan,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Pantheon.
- Haire, Mason, Edwin E. Ghiselli, and Lyman W Porter, 1966, "Managerial thinking: An international study." New York: Wiley. 33(3): 277-294.
- Hall, Stuart, 2000, "The Multicultural Question." *Un/Settled Multiculturalisms, diasporas, entangelents*, London: Zed Books.
- Hofstede, Geert, 1976, "Nationality and Espoused Values of Manag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 140-155.
- Hofstede, Geert,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Park, CA.: Sage.
- Hofstede, Geert,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UK: McGraw-Hill.
- Hofstede, Geert,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eert, 1994, "Value Survey Module 1994, Institute for Research on Intercultural Cooperation," University of Limberg, Maastricht, The Netherlands.
- House, Robert, Paul Hanges, Mansour Javidan, Peter W Dorfman, and Vipin Gupta,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CA: Sage.
- Huang, Min-Hua and Shu-Hsien Chang, 201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ast Asian Confucian Culture: A Comparative Analysis," *OMNES :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7(2): 1-40.
- Huntington, Samuel P, 1997,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 Order,” New York: Touchstone.
- Ingel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19-51.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2007, “Postmaterialist Values and the Shift from Survival to Self-expression Values,” Chapter 12 in Russell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223-239.
- John Rex, 1997, “Multiculturalism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Wsevolod W.Isajiw ed., *Multiculturalism in North America and Europe*, Canadian Scholars Press.
- Johnson, Todd M. and Brian J. Grim, eds, 2018, “World Religio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 Kwon, Jong-Wook, Hak-Cho Kim, and DaeHyuck Oh, 2013, “Do Korea, China and Japan form a cultural cluster?,” *International Management Studies*, 24(3): 23-49.
- Lerner, Daniel,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Modernizing the Middle East,” New York, NY: Free Press.
- Nisbett, R. E., 2004, “생각의 지도 (최인철, Trans.),” 김영사.
- Parekh, Bhikhu C,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Introduction” pp.1-15.
- Rita Chin, 2017,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 Europe: A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Roland Robertson,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 Ronen, S., and Kraut, A. I. 1977 “Similarities among countries based on employee work values and attitud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12(2): 89-96.
- Ronen, Simcha and Oded Shenkar, 1985, “Clustering Countries on Attitudinal Dimensions: A Review and Synthe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 435-454.
- S. N. Eisenstadt, 2000,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129(1): 1-29.
- Tversky, A., Kahneman, D., 1986,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The Journal of Business*, 59(4): 251-278.
- Will Kymlicka and Baogang He ed, 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12.
- Will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u, Hsin-Chao, 2014, "Local Traditions, Community Building, and Cultural Adaptation in Reform Era Rural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32-01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국제비교 연구: 문화와 세계화

발행 2018년 12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276-1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